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7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27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총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임길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현서린 박승호 예산분석관
윤주철 김주현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이두영 황종률 김원혁 설경원 황소정
김윤희 유기환 김상용 천경록 경제분석관

지원 | 김병규 예산분석관보
김정선 행정실무관
홍지훈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27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2026.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I. 개 관 / 1

1. 2027년 정부예산안 개요 3
2.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10

II. 경제여건 및 재정환경 분석 / 15

1. 경제여건 17
2. 분배여건 분석 36
3. 국민 삶의 질 지표 분석 39
4. 기후변화에 따른 재정환경 변화 43
5.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 부문별 영향 52
6. 경제·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변화와 자원배분 방향 72

III. 총수입·총지출 분석 및 중기전망 / 75

1. 총수입 분석 및 중기전망 77
2. 총지출 분석 및 중기전망 87

IV. 재정건전성 분석 / 109

1. 재정건전성 개요 111
2. 재정수지 분석 113
3. 국가채무 분석 122
4. 잠재적 재정위험요인 분석 134



CONTENTS

V. 재정기조 및 재정지출의 효과 분석 / 171

- 1. 재정기조 분석 173
- 2. 재정의 성장기여도 분석 177
- 3. 기타 재정 효과 분석 185

VI. 결론 및 시사점 / 199

- 1. 결론 및 시사점 201



I. 개 관

가. 총수입·총지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은 2026년 추경 700.6조원 대비 180.2조원(25.7%) 증가한 880.8조원, 총지출은 2026년 753.0조원 대비 67.9조원(9.0%) 증가한 820.9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수입¹⁾은 880.8조원으로, 국세수입 584.4조원, 세외수입 37.6조원, 기금수입 258.7조원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2026년 추경 대비 168.9조원(40.7%), 기금수입은 11.9조원(4.8%)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0.8조원(2.1%) 감소한다.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

(단위: 조원, %)

구 분	2026예산		2027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수입	675.2	700.6	880.8	180.2	25.7
- 국세수입	390.2	415.4	584.4	168.9	40.7
- 세외수입	38.4	38.4	37.6	△0.8	△2.1
- 기금수입	246.6	246.8	258.7	11.9	4.8

주: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820.9조원으로, 회계 505.0조원, 기금 315.8조원으로 구성된다. 회계는 2026년 제1회 추경 대비 1.0조원(0.2%)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2026년 추경 대비 66.8조원(26.8%) 증가하였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총수입과 총지출은 예산·기금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재정수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공채 발행이나 차입 등)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재정총량 지표이다.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단위: 조원, %)

구 분	2026예산		2027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지출	727.9	753.0	820.9	67.9	9.0
- 회계(세출)	481.4	504.0	505.0	1.0	0.2
- 기금(지출)	246.5	249.0	315.8	66.8	26.8

주: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7년도 예산안 기준 부처별 총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148조 7,7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교육부(112조 6,650억원), 행정안전부(84조 7,040억원), 국토교통부(64조 7,160억원), 기획예산처(57조 1,200억원), 국방부(50조 420억원), 재정경제부(39조 7,220억원), 고용노동부(36조 2,970억원)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범죄수사청(4,720억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30억원)의 예산은 2027년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 예산안 부처별 총지출 전년 대비 현황]

(단위: 십억원, %)

구 분	2026예산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지출	727,904	753,073	820,925	67,852	9.0
교육부	106,361	111,173	112,665	1,491	1.3
행정안전부	76,906	86,394	84,704	-1,690	-2.0
국토교통부	62,807	63,027	64,716	1,689	2.7
고용노동부	37,676	38,093	36,297	-1,795	-4.7
중소벤처기업부	16,523	18,214	16,254	-1,960	-10.8
농림축산식품부	20,136	20,514	21,029	516	2.5
기후에너지환경부	21,759	22,374	23,087	712	3.2
보건복지부	137,495	137,841	148,770	10,929	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762	23,818	21,305	-2,514	-10.6
산업통상부	9,434	10,532	13,257	2,725	25.9
재정경제부	34,303	38,759	39,722	963	2.5
해양수산부	7,357	7,501	8,014	513	6.8
문화체육관광부	7,856	8,317	8,650	333	4.0

(단위: 십억원, %)

구 분	2026예산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인사혁신처	30,304	30,304	31,263	959	3.2
산림청	3,026	3,028	3,158	130	4.3
외교부	3,615	3,617	3,703	86	2.4
성평등가족부	1,968	1,968	1,914	-55	-2.8
국가유산청	1,497	1,499	1,665	166	11.1
우주항공청	1,120	1,120	903	-218	-19.4
농촌진흥청	1,139	1,139	1,213	74	6.5
경찰청	14,262	14,262	14,983	721	5.1
국가보훈부	6,687	6,688	7,219	531	7.9
통일부	1,245	1,245	1,255	10	0.8
금융위원회	2,153	2,153	1,299	-854	-39.7
법무부	4,705	4,705	5,406	700	14.9
질병관리청	525	525	569	43	8.2
식품의약품안전처	832	832	883	51	6.1
기상청	549	549	616	67	12.2
지식재산처	631	640	711	70	11.0
원자력안전위원회	104	104	133	28	27.2
기획예산처	10,191	10,945	57,120	46,176	421.9
대법원	2,507	2,507	2,648	140	5.6
소방청	336	336	371	35	10.3
국회	810	810	848	38	4.7
해양경찰청	2,088	2,088	2,229	141	6.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73	74	92	19	25.2
관세청	690	690	728	39	5.6
국가데이터처	457	457	422	-35	-7.7
국세청	2,098	2,311	2,481	170	7.4
새만금개발청	203	203	217	14	6.8
병무청	518	518	525	7	1.4
공정거래위원회	189	189	225	36	19.0
조달청	296	297	372	75	25.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89	289	568	279	96.8
재외동포청	113	113	137	24	2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3	73	84	11	15.0

(단위: 십억원, %)

구 분	2026예산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권익위원회	112	112	141	29	2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85	485	442	-43	-8.9
국무조정실	853	853	916	63	7.4
법제처	61	61	70	9	15.6
국가교육위원회	11	11	12	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7	37	41	4	9.5
국가인권위원회	44	44	46	2	4.9
헌법재판소	62	62	71	9	14.0
감사원	144	144	149	5	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0	30	21	-9	-30.4
국방부	47,232	47,232	50,042	2,810	5.9
방위사업청	19,954	19,954	22,711	2,757	13.8
국가정보원	961	961	1,078	117	12.2
대통령경호처	132	132	136	4	2.7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05	105	127	21	20.3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3	13	-	-13	순감
중대범죄수사청	0	0	472	472	순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0	0	23	23	순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통합재정수지(59.9조원) 및 관리재정수지(△3.1조원)는 2026년 추경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계획되었고, 국가채무(1,519.8조원)는 2026년 추경 대비 107.0조원 증가하여 GDP 대비 48.3% 수준으로 계획되었다.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통합재정수지는 59.9조원 흑자(GDP 대비 1.9%)로 2026년 제1회 추경(△52.5조원) 대비 112.4조원 개선되고, 관리재정수지²⁾는 3.1조원 적자(GDP 대비 △0.1%)로 2026년 추경 대비 104.5조원 개선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027년도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6		2027 예산안(B)	증감(B-A)
	본예산	추경(A)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52.7 (△1.9)	△52.5 (△1.9)	59.9 (1.9)	112.4 (3.8)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107.8 (△3.9)	△107.6 (△3.8)	△3.1 (△0.1)	104.5 (3.7)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7년도 국가채무³⁾ 규모는 1,519.8조원으로 2026년 추경 1,412.8조원 대비 107.0조원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2026년 추경 50.6% 대비 2.3%p 하락할 계획이다.

2027년도 국가채무의 2026년 추경 대비 큰 폭의 증가는 중앙정부채무, 특히 국채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2027년 중앙정부채무는 2026년 추경 대비 106.6조원 증가한 1,482.7조원으로 계획되었는데, 이 중 국채 증가분은 106.4조원이다. 지방정부순채무는 2026년 대비 0.4조원 증가한 37.1조원으로 계획되었다.

2)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수치이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이다.

3)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의 금전채무를 합산한 지표인 D1을 의미한다.

[2027년도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p)

구 분	2026 추경(A)	2027 예산안(B)	증감(B-A)
국가채무	1,412.8	1,519.8	107.0
(GDP 대비)	(50.6)	(48.3)	(△2.3)
중앙정부채무	1,376.1	1,482.7	106.6
국채	1,374.7	1,481.1	106.4
차입금	1.3	1.3	0.0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3	0.2
지방정부순채무	36.7	37.1	0.4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2027년도 예산안 820.9조원의 12대 분야별 자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289.0조원), 일반·지방행정(149.0조원), 교육(110.7조원), 국방(73.3조원)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9.7%, 일반·지방행정 22.8%, 문화·체육·관광 20.4% 순으로 높다. 반면 외교·통일 분야는 전년 대비 1.1% 증가하여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2027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2026 본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지출	727.9	820.9	93.0	12.8
1. 보건·복지·고용	264.4	289.0	24.6	9.3
2. 교육	99.9	110.7	10.8	10.8
3. 문화·체육·관광	9.6	11.6	2.0	20.4
4. 환경	13.9	14.6	0.7	5.2
5. R&D	35.5	39.5	4.0	11.2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8	41.2	9.4	29.7
7. SOC	27.7	28.9	1.2	4.0
8. 농림·수산·식품	28.0	30.7	2.7	9.5
9. 국방	67.7	73.3	5.6	8.2
10. 외교·통일	7.0	7.1	0.1	1.1
11. 공공질서·안전	27.3	28.8	1.5	5.3
12. 일반·지방행정	121.4	149.0	27.6	22.8

주: 1. 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2. 보건·복지·고용 및 국방 분야는 군인연금기금 이관 및 국방 분야 총지출 기준 개편 이후 기준

자료: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6년 제1회 추경 대비 2027년 총수입의 증가율(25.7%)이 총지출 증가율(9.0%)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Delta 3.1$ 조원(GDP 대비 $\Delta 0.1\%$)으로 2026년 제1회 추경 대비 104.5조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8년 이후 총지출 증가폭이 총수입 증가폭을 상회하면서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027년의 총수입은 2026년 제1회 추경 700.6조원 대비 180.2조원(25.7%) 증가한 880.8조원으로 계획되었으며, 또한 2026~2030년 총수입은 연평균 8.9% 증가하며 2030년 984.6조원 수준에 도달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총수입 증가는 주로 국세수입 증가에 기인하며, 2027년 국세수입은 2026년 대비 40.7% 증가할 계획이며, 2026~2030년 중 연평균 11.6% 증가할 계획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하에 2027년 총지출을 2026년 추경 대비 67.9조원(9.0%) 증가한 820.9조원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2026~2030년 연평균 7.5% 증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2026~2030년 기간 중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7.9%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6년 추경기준 52.8%에서 2030년 53.5%로 0.7%p 상승할 계획이다. 반면 2026~2030년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계획되어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7년 59.9조원, 2028년 25.8조원 흑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로 전환되어 2029년 $\Delta 5.6$ 조원, 2030년 $\Delta 20.6$ 조원을 기록할 계획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27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도 2027년 1.9%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2030년 $\Delta 0.6\%$ 를 기록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27년 $\Delta 3.1$ 조원에서 2030년 $\Delta 100.8$ 조원 적자로 확대되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0.1%에서 2.9%로 상승할 전망이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2027년 국가채무는 2026년 제1회 추경 1,412.8조원 대비 107.0조원 증가한 1,519.8조원으로 계획되었으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2026년 제1회 추경 대비 2.3%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2027년 48.3%에서 2030년 49.0%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단위: 조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명목GDP	2,741.6	2,793.8	3,144.2	3,270.0	3,400.8	3,536.8	6.1
총수입	675.2	700.6	880.8	920.5	951.8	984.6	8.9
(증가율)	-	-	(25.7)	(4.5)	(3.4)	(3.4)	-
- 국세수입	390.2	415.4	584.4	606.7	625.5	644.8	11.6
(증가율)	-	-	(40.7)	(3.8)	(3.1)	(3.1)	-
- 세외수입	38.4	38.4	37.6	37.9	35.1	35.6	△1.9
(증가율)	-	-	(△2.1)	(0.8)	(△7.4)	(1.4)	-
- 기금수입	246.6	246.8	258.7	275.8	291.2	304.1	5.4
(증가율)	-	-	(4.8)	(6.6)	(5.6)	(4.4)	-
총지출	727.9	753.0	820.9	894.6	957.4	1,005.2	7.5
(증가율)	-	-	(9.0)	(9.0)	(7.0)	(5.0)	-
- 의무지출	387.7	397.5	426.8	471.9	511.8	537.9	7.9
(비중)	(53.3)	(52.8)	(52.0)	(52.7)	(53.5)	(53.5)	-
- 재량지출	340.2	355.6	394.1	422.8	445.5	467.3	7.1
(비중)	(46.7)	(47.2)	(48.0)	(47.3)	(46.5)	(46.5)	-
통합재정수지	△52.7	△52.5	59.9	25.8	△5.6	△20.6	-
(GDP 대비)	(△1.9)	(△1.9)	(1.9)	(0.8)	(△0.2)	(△0.6)	-
관리재정수지	△107.8	△107.6	△3.1	△48.0	△83.4	△100.8	-
(GDP 대비)	(△3.9)	(△3.8)	(△0.1)	(△1.5)	(△2.5)	(△2.9)	-
국가채무	1,413.8	1,412.8	1,519.8	1,600.3	1,659.1	1,734.1	5.3
(GDP 대비)	(51.6)	(50.6)	(48.3)	(48.9)	(48.8)	(49.0)	-

주: 연평균 증가율은 2026년 제1회 추경 대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

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정부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2026년 계획)의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총수입을 2025년 계획 대비 26.4~186.8조원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2026년 이후 국세수입 확대를 반영하여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2025년 계획) 대비 4.2%p 높게 설정한 가운데, 총지출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하여 AI, 전략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소요 확대 등으로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2025년 계획 대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정부는 2026년 계획에서 총수입의 경우 반도체 호조 등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2026~2027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2028년 이후도 내수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중기적으로 국세수입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기금수입은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보험료 요율 인상, 가입자 확대 및 임금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에 따라 2026년에는 2025년 계획 대비 2026년 계획상 총수입이 26.4조원 높은 수준이지만 이후 차이가 크게 확대되며 2027~2029년에는 2026년 계획에 따른 총수입이 2025년 계획 대비 175.8~186.8조원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총지출의 경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복지 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저출생으로 인한 정부지출 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 AI 및 전략산업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으로 재정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6년 계획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도 2025년 계획상 예측 경로(4.4%) 대비 3.1%p 상승한 7.5%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2027년은 $\Delta 3.1$ 조원(GDP 대비 $\Delta 0.1\%$)로 2025년 계획의 2027년 전망보다 적자 규모가 112.3조원(GDP 대비 4.0%p) 축소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028~2029년 역시 2025년 계획보다 적자 폭이 축소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2028년 80.9조원(GDP 대비 2.9%p), 2029년 41.5조원(GDP 대비 1.6%p) 개선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국가채무는 2026년 계획상 2027년 1,519.8조원(GDP 대비 48.3%)으로 2025년 계획의 1,532.5조원 대비 12.7조원 축소된 규모이다. 2028년과 2029년 모두 2026년 계획이 2025년 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64.0조원(2028년), 129.8조원(2029년) 작게 계획하였다.

[2025년 계획과 2026년 계획의 재정총량 비교]

(단위: 조원, %)

비 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2025년 계획(A)	642.4	674.2	705.0	733.7	771.1		4.7
	2026년 계획(B)		700.6	880.8	920.5	951.8	984.6	8.9
	차이(B-A)		26.4	175.8	186.8	180.7		
총지출	2025년 계획(A)	703.3	728.0	764.4	802.6	834.7		4.4
	2026년 계획(B)		753.0	820.9	894.6	957.4	1,005.2	7.5
	차이(B-A)		25	56.5	92	122.7		
관리 재정 수지	2025년 계획(A)	△111.6 (△4.2)	△109.0 (△4.0)	△115.4 (△4.1)	△128.9 (△4.4)	△124.9 (△4.1)		
	2026년 계획(B)		△107.6 (△3.8)	△3.1 (△0.1)	△48.0 (△1.5)	△83.4 (△2.5)	△100.8 (△2.9)	
	차이(B-A)		1.4 (0.2)	112.3 (4.0)	80.9 (2.9)	41.5 (1.6)		
국가 채무	2025년 계획(A)	1,301.9 (49.1)	1,415.2 (51.6)	1,532.5 (53.8)	1,664.3 (56.2)	1,788.9 (58.0)		8.3
	2026년 계획(B)		1,412.8 (50.6)	1,519.8 (48.3)	1,600.3 (48.9)	1,659.1 (48.8)	1,734.1 (49.0)	5.3
	차이(B-A)		△2.4 (△1.0)	△12.7 (△5.5)	△64.0 (△7.3)	△129.8 (△9.2)		

주 1. 괄호는 GDP 대비 비중

2. 2025년 계획상 2025년은 제2회 추경, 2026년은 본예산 기준

3. 2026년 계획상 2026년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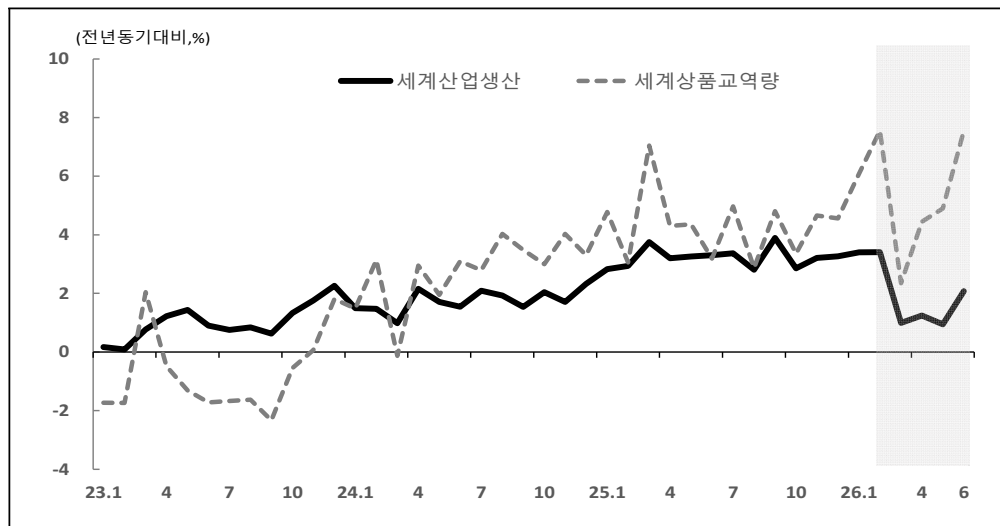
II. 경제여건 및 재정환경 분석

가. 대외 경제여건

(1) 경제여건

2026년 상반기 중 세계경제는 AI 제품 생산 관련 교역이 크게 늘며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세계상품교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미 관세부과에 대응한 조기선적(front-loading)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운송 차질 등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제품의 교역이 크게 늘며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6월 들어 중동지역 물류의 부분 정상화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였다.¹⁾

[세계 산업생산과 상품교역량 추이]



주: 산업생산은 건설업을 제외한 생산가중치 기준

자료: 네덜란드경제정책분석국(CPB)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황종률 경제분석관(jrhwang@assembly.go.kr, 6788-4659),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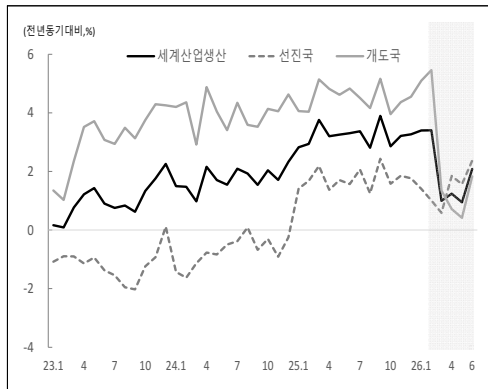
황소정 경제분석관(sjhwang@assembly.go.kr, 6788-4656), 설경원 경제분석관(kwseol@assembly.go.kr, 6788-4658),

이두영 경제분석관(douyounglee@assembly.go.kr, 6788-4671),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1) 6월 중 세계상품교역량은 전년대비 7.5%, 세계산업생산은 2.1% 증가하여, 전월(세계상품교역량 4.9%, 세계산업생산 0.9%)에 비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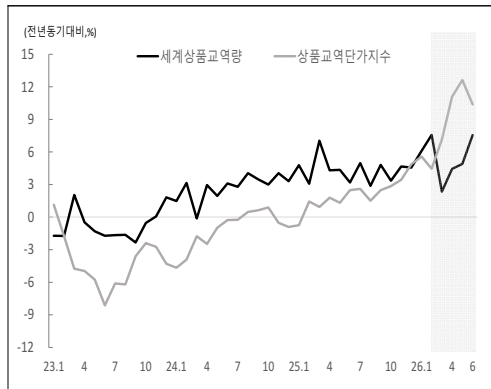
세계산업생산은 AI·반도체·전자기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통 제조업과 소비재 생산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²⁾ 중동전쟁 이후 세계산업생산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었으나, AI관련 제품의 생산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늘며 6월 들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³⁾ 향후 중동전쟁의 전개 양상과 AI 관련 투자 및 교역량 증가세 지속 여부 등에 따라 성장세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유가·원자재 가격, 반도체 등 AI 관련 교역액이 늘더라도 실제 교역물량 증가와 제조업 생산 증가의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⁴⁾

[선진국과 개도국 산업생산]



주: 산업생산은 건설업을 제외한 생산가중치 기준
자료: CPB

[세계상품교역량과 교역단가]



주: 계절조정 계절 기준
자료: CPB

세계경기 선행지표는 국가별·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OECD 경기선행지수(6~9개월 선행)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요 아시아 5개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상승하였으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하락하며 기준치를 하회하였다. 특히 중국은 AI·첨단제품 수출 강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부동산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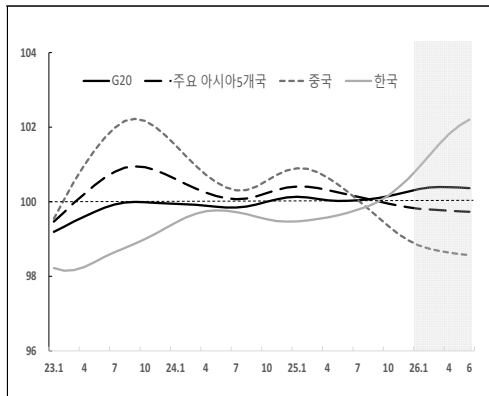
2) 미국의 7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소비재 생산은 0.4% 감소하였다.

3) 세계산업생산(전년동기대비): (1~2월) 3.4%, 선진국 1.2%, 개도국 5.3% →(3~6월)1.3%, 선진국 1.6%, 개도국 1.1%

4) 2026년 상반기 중 세계상품교역량은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세계상품교역단가지수는 8.5% 상승하였다.

부진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하회⁵⁾하였다. 세계 전산업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⁶⁾는 제조업에서 생산·주문이 개선세를 유지하며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에서 최근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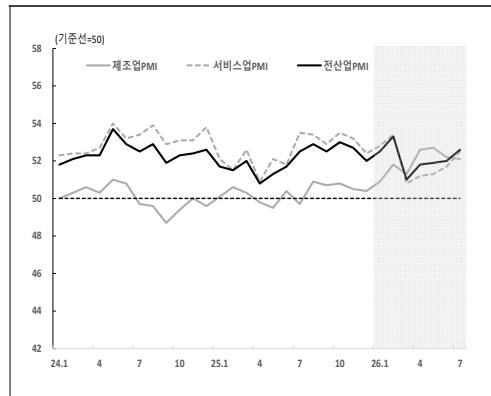
[OECD 경기선행지수]



주: 주요 아시아 5개국은 중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

자료: Bloomberg, CEIC

[세계 전산업 PMI 월별 추이]



주: PMI 기준선 50 이상은 확장, 이하는 수축

자료: Bloomberg, CEIC, S&P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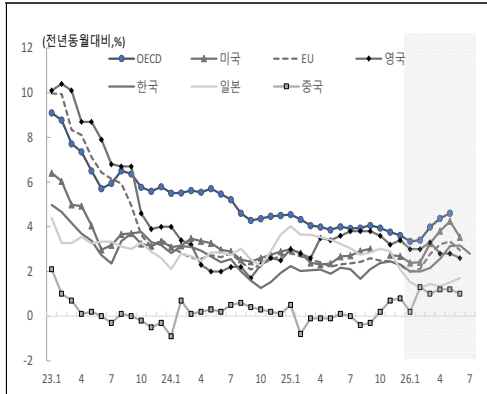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오름세이고,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였다. 선진국 물가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3월 이후 미국, EU 등에서 오름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6월 이후에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개도국 물가는 브라질, 인도, 튀르키예, 남아공 등에서 오름세가 확대되었고,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월 이후 1%대로 상승하였다. EU, 일본, 한국, 호주 등에서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였고, 미 연준도 2023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책금리 전망을 통해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다.⁷⁾ 최근에는 호르무즈해협 정상화 지연과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동서횡단 송유관 공격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5) 중국: ('25. 12월)99.6→('26. 1월)99.4→(3월)98.9→(6월)98.2→(9월)97.4

6)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재고, 고용상태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확장을, 50 미만은 수축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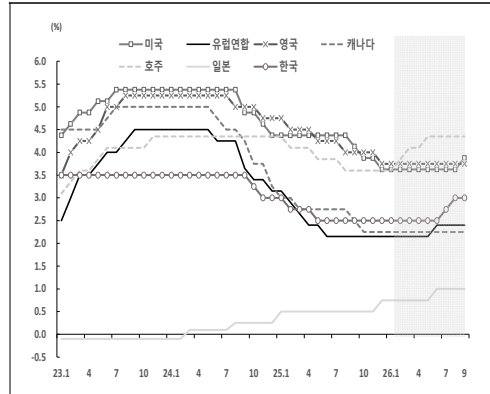
7) 미연준은 지난 9월 16일에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p 인상하였고, 정책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연준위원 18명 중 16명이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하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CEIC

[주요국의 정책금리]



주: 미국의 정책금리는 상한과 하한 평균
자료: 각국 중앙은행, Bloomberg, CEIC

2027년 세계 경제는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⁸⁾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6년 2.8%에서 2027년 3.1%로 성장세가 개선될 전망이다.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겠으나, 2027년에는 중동, 미국 등 에너지 수출국과 AI 기술 선도국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동전쟁의 영향과 에너지 가격, AI·반도체 제조 기술 발전 정도, 재정·통화정책여력 등에 따라 국가별 성장률 변화 양상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선진국 경제는 2026년 1.6%에서 2027년 1.8%로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출과 AI 관련 인프라투자 확대 등으로 2026년 성장세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개선되고 2027년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지역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에너지가격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독일의 성장세는 재정지출과 공공투자 확대⁹⁾ 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일본은 에너지 가격 충격이 일부 재정지원으로 완화되고, 임금상승과 물가안정 등으로 내년에도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영국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높은 물가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었지만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2027년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 경제는 2026년 3.7%에

8)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량, 국제유가 및 기타 원자재가격 등에 대한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2026.9월)의 전제치를 참조하였다.

9) OECD(2026. 6월)는 최대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 인프라기금 조성, 국방비 및 군사장비 투자 확대 등으로 독일경제가 2027년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

서 2027년 4.4%로 성장세가 회복될 전망이다. 중국 경제는 2026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소비 둔화 등의 부정적 요인을 수출과 첨단 제조업 호조 등이 상쇄하며 급격한 성장세 하락 위험이 낮아졌지만, 2027년에는 민간소비 및 투자 회복 지연,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노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호조 등으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AI·반도체 품목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출 차질로 급락하였던 성장률이 2027년에는 급반등할 전망이다. **세계교역량**은 2026년 3.2%에서 2027년 3.5%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세계교역 전망은 중동·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차질과 교역 정상화에 대한 가정, AI 관련기술 제품 교역과 공급망 재편, 관세의 시차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전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IMF는 AI 관련 제품 교역과 공급망 재편 효과¹⁰⁾ 등을 보다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세계교역량이 2026년 3.5%에서 2027년 4.3%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OECD는 중동 지역 에너지 공급 충격과 아시아 지역 교역 정상화 지연 등을 반영하여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2026년 3.1%에서 2027년 2.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은행은 관세의 시차 효과¹¹⁾와 중동·호르무즈 해협 운송차질이 올해 세계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세계교역량이 2026년 2.9%에서 2027년 3.1%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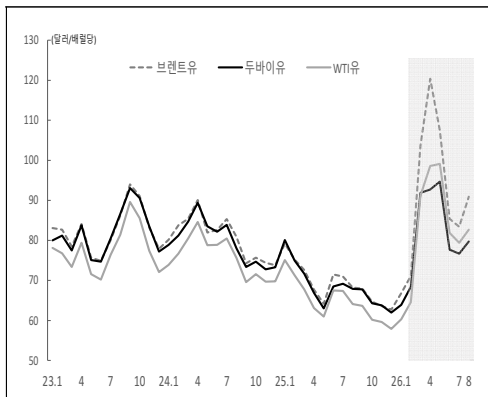
국제유가는 2026년 전년(배럴당 68달러) 대비 34%(배럴당 91달러) 상승하고 2027년에는 배럴당 77달러 수준(전년 대비 -15.5%)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국제기관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및 걸프지역 생산이 회복되고 비 OPEC 공급도 증가하며, 고유가로 위축되었던 수요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국제유가를 배럴당 2026년 89~94달러, 2027년 76~80달러로 전망하였다.¹²⁾ 현재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단기 확전 위험이 커지

10) 공급망 재편 효과는 최근 아시아, 북미 등에서 AI 제품 역내 공급망이 확대되었고, 상품교역이 정제된 반면 클라우드·AI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금융·지식재산 서비스 등의 서비스교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현상을 말한다.

11) 관세의 시차효과는 2025년에는 미 관세부과에 대응해 기업들의 조기 수입이 늘며 교역이 과도하게 증가하였으나, 2026년에는 반대로 미리 확보한 재고로 신규 주문이 감소하고 최근 불확실성 확대로 설비투자과 공급계약을 지연시키며 교역량이 둔화되는 등 관세에 시차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며 유가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호르무즈해협 선박 공격에 더해 홍해·바브엘만데브에서도 후티 공격이 이어지고, 호르무즈해협을 우회하여 홍해 안부항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횡단 송유관이 공격 후 가동을 중단하여 국제유가가 급등하였다. 당분간 양측은 전면전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해상통제·항만봉쇄·경제제재 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군사적 소강과 호르무즈 해협 부분 봉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속도 및 걸프지역 생산능력 회복, 미국·브라질·캐나다 등 비OPEC 공급, OPEC+ 생산 정책, 세계 석유수요와 중국의 원유 수입, 정유 가동률, 재고와 전략비축유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월별 추이]



자료: CEIC, Bloomberg

[국제유가 연별 추이 및 전망]



자료: 브렌트유, WTI유, 두바이유 단순평균 기준
IMF, World Bank

- 12) IMF는 국제유가가 재고 방출과 비걸프지역 생산 증가 등으로 극단적인 수준까지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하고, 2026년 배럴당 89.3달러(브렌트유, WTI유, 두바이유 단순평균 기준)에서 2027년 78.7달러로 하락 전망하였다. 세계은행은 생산시설 재가동, 기뢰 제거, 선박·보험 재배치 등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2026년 평균가격이 전년 대비 36% 상승한 배럴당 94달러(브렌트유 기준)로 높게 유지되고 2027년에는 76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과 생산능력 훼손이 장기화될 경우 2026년 배럴당 115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OECD는 단기적 공급차질을 기본 시나리오로 2026년 배럴당 92달러(브렌트유 기준)에서 2027년 80달러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걸프지역 생산과 수송 차질이 2027년 3분기까지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기본전망보다 약 50%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2) 전망의 위험 요인

2027년 세계경제는 중동발 에너지 공급 충격이 완화되면서 전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세 회복 강도는 AI 투자의 생산성 전환, 인플레이션과 금융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 서비스업, 인프라 투자 등 내수 기반이 강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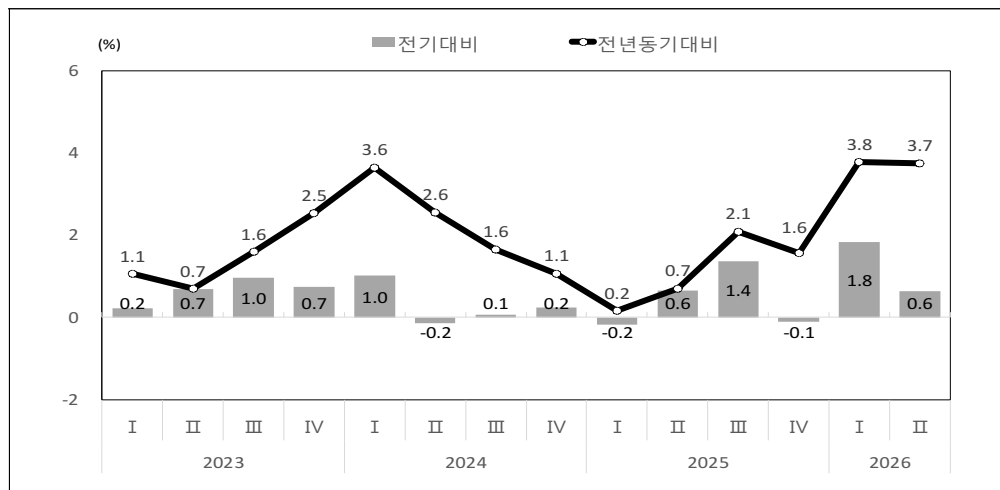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2027년 세계경제의 성장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하방 요인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및 비료 등 원자재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재상승과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 관세 및 수출통제 등 보호무역 재강화, AI 투자 및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위험 등이다. 상방요인으로는 중동지역 안정 및 에너지시장 정상화, AI 투자 확대 및 생산성 증가 등이다.

중기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AI 투자의 생산성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현재 인공지능(AI) 전환의 성장 효과는 반도체·서버·데이터센터·전력·광통신 장비 등의 AI 관련 투자 확대에 집중되어 있다. 2027년에는 AI 관련 인프라 투자가 제조업·금융·물류·의료·전문서비스의 실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확산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업무 과정과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이 상승하고, 지역적으로는 미국과 동아시아 중심의 AI 설비 투자가 유럽과 여타 개도국으로 확산되는지도 중요하다.

나. 국내 경제여건

국내경제는 2026년 상반기 중 실질GDP가 전년동기 대비 3.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출부문별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이 금년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아졌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의 증가세가 가세하는 모습이다.

[실질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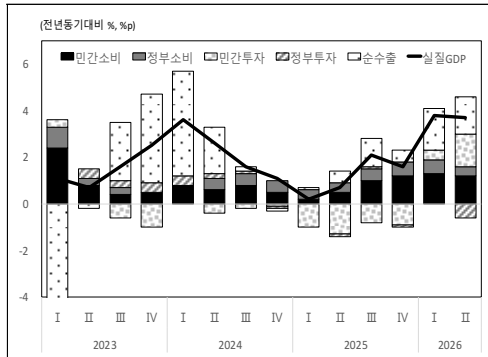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지출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2026년 상반기 중 2.6% 증가하여 2025년 하반기 2.2%에 이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민간투자는 상반기 중 3.7% 증가하였는데 이는 설비투자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각각 5.4%와 3.8%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투자는 1.5% 감소하였다. 정부소비는 상반기 중 2.6% 증가하였으나, 정부투자는 같은 기간 중 6.5%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2분기 중 정부투자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¹³⁾ 총수출(GDP물량 기준)은 상반기 중 10.3% 증가하며 지난해 하반기(5.7%)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총수입은 설비용 기계류를 중심으로 7.3% 증가하였다. 총수출에서 총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상반기 중 1.7%p로 지난해 하반기의 0.8%p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13) 2분기 중 정부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동전쟁으로 원유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아스콘 등 도로 건설용 원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주입물로 석유 정제 부산물인 아스팔트와 골재(자갈, 모래), 채움재(석분)를 섞은 혼합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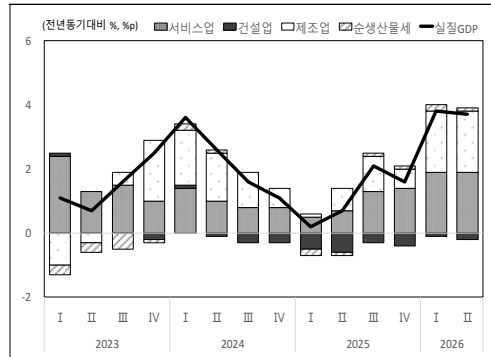
경제활동별로 보면 상반기 중 제조업은 수출 호조와 함께 성장률이 6.9%로 높아졌으며, 서비스업은 내수의 꾸준한 회복세와 더불어 3.3% 성장하였다. 상반기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1.9%p와 1.9%p로 지난해 하반기의 0.9%p와 1.4%p에 비해 높아졌다.

[지출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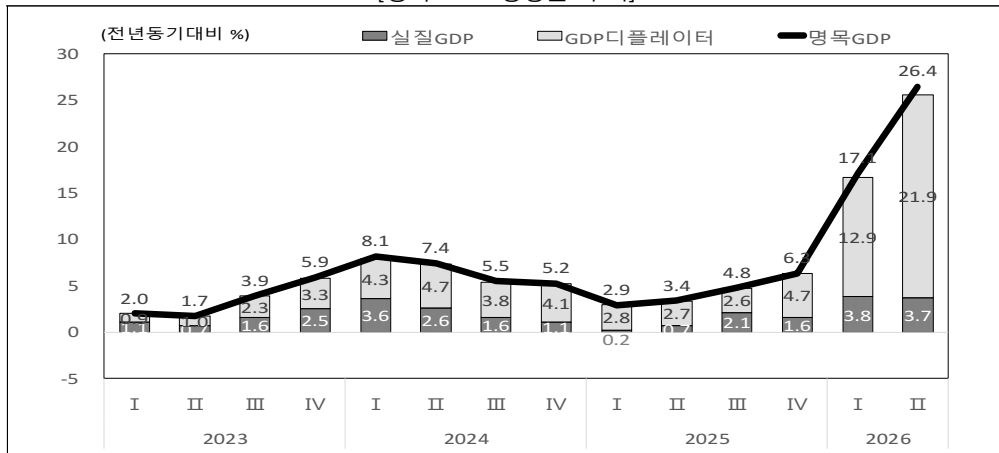
[경제활동별 성장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명목GDP 성장률은 2026년 상반기 중 21.9%의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 하반기의 5.6%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실질 GDP 성장률이 3.8%로 높아진 데다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으로 교역조건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GDP디플레이터가 17.4%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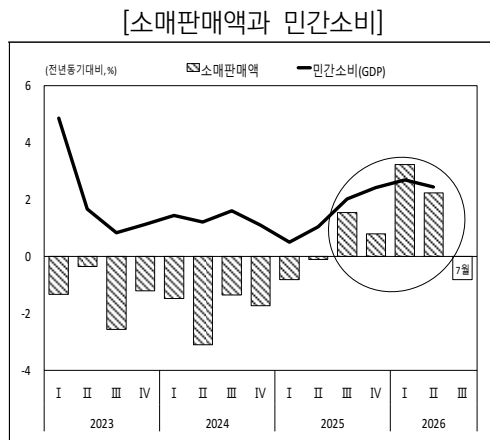
[명목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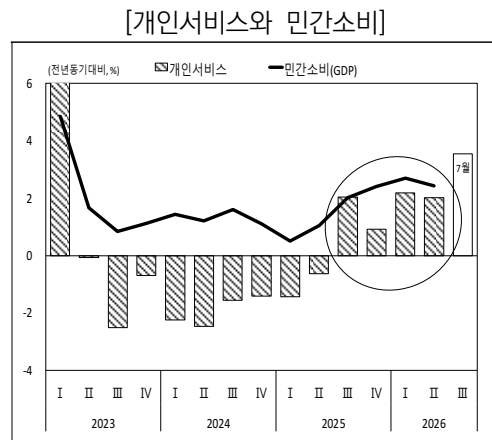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1) 내수

소비지표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민간소비 중 상품소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025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상승하였다(아래 왼쪽). 민간소비 중 서비스소비와 밀접한 개인서비스업 지수¹⁴⁾도 2025년 3분기 이후 줄곧 증가하였다(아래 오른쪽). 2026년 7월 소매판매액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¹⁵⁾ 소폭 감소하였으나, 개인서비스업 지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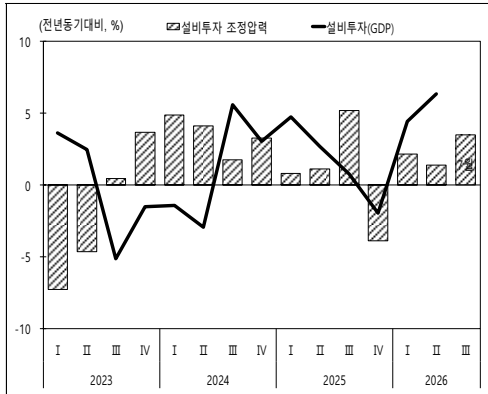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설비투자 조정압력(설비투자 선행지표)은 2025년 4분기 잠시 주춤하였으나 올해에는 2023년 3분기 이후의 상승 움직임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 건설수주액(건설투자 선행지표)도 2024년 1분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앞으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평균 선행시차 1분기), 건설투자도 하반기부터는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평균 선행시차 5분기).

14) 개인서비스업 지수는 서비스업 지수 가운데 민간소비의 서비스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지수 가중치로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기준년 가중치를 활용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통계 개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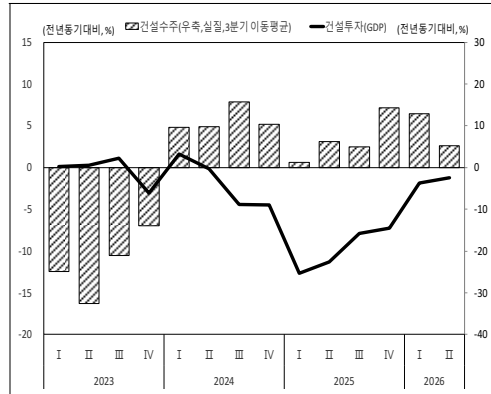
15) 2026년 6월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직전 신차 구매수요가 몰리고(7월 1일부터 3.5%→5%로 환원), 구매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2026.6.8.~7.5.)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며(매출액 4조원, 상품권 환급액 8천억원) 소매판매액이 크게 늘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설비투자]



주: 조정압력 = 생산 증가율 - 생산능력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건설수주액과 건설투자]



주: 건설수주액은 3분기 중심향 이동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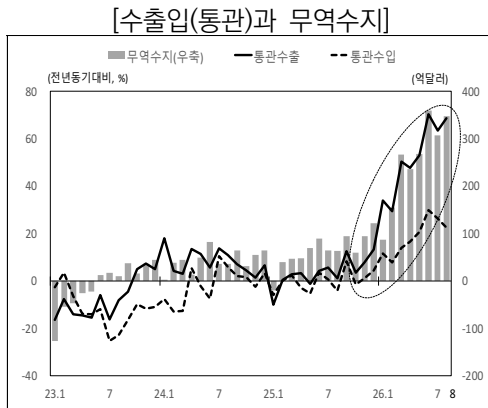
(2) 수출입

수출(통관기준, 상품)은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례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물량(실질금액)은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수출단가 역시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수입(통관기준, 상품)은 반도체 제조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3월 중동전쟁 이후 수입단가가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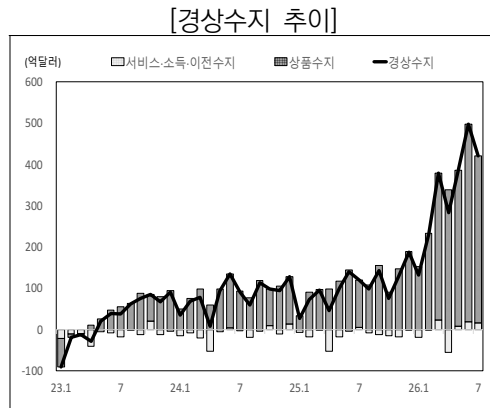
무역수지(통관 수출입차)는 금년 들어 흑자 폭이 매우 커졌다. 국제유가 상승,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확대 등으로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수출이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례 없는 증가세를 보였다.

경상수지(국제수지 기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7월까지 2,330.9억 달러 흑자이다. 특히 흑자 폭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보여 1월에는 132억 달러, 3월에는 379억 달러, 6월에는 4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상품수지가 흑자를 주도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생산·수출한 국산품의 순수출액인 중계무역수지도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소득·이전수지(국제수지 기준)는 2026년 7월까지 11.9억 달러 적자이다. 본원소득수지가 투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160.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서비스수지가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137.4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전소득수지는 35.0억 달러 적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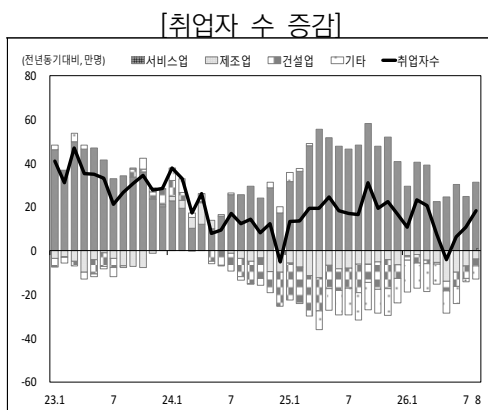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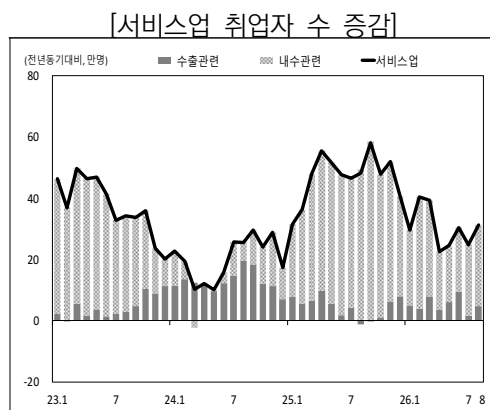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3) 고용과 물가

고용은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25년 이후 월평균 20만명 선을 유지하다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으로 2026년 5월 4만명 감소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회복하여 8월에는 18.4만명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고용 비중이 가장 큰 내수 관련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중동전쟁의 여파가 컸던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최근 일자리 감소 폭이 줄며 상황이 나아졌다.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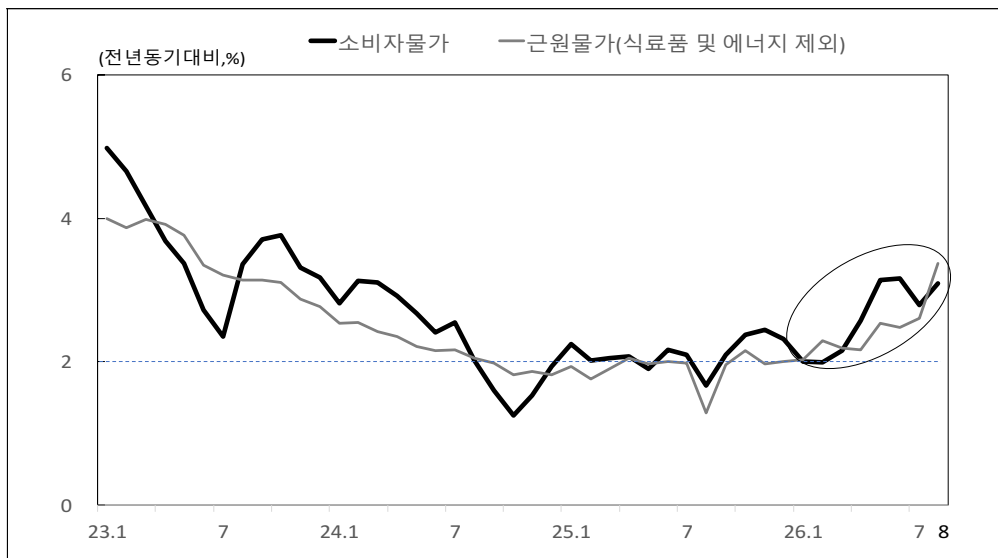


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창고·통신업을 수출관련 서비스업으로, 그 외 서비스업을 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

자료: 국가데이터처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모두 상승률이 중동 전쟁 이후 물가안정목표인 2% 선을 상당 폭 웃돌고 있다. 2026년 8월의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각각 3.1%와 3.4% 상승하였다. 다만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8월의 휴대폰 요금감면¹⁶⁾ 기저효과 0.58%p를 제외하면 8월의 물가상승률은 2.5%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수입물가는 중동전쟁이 발발한 3월 이후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16)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통신료를 50% 할인하였다.

(4) 전망의 위험 요인

2027년 국내경제의 주요 상방 위험 요인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 반도체 기업의 배당 확대와 그에 따른 가계 소득여건의 추가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하방 요인으로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인프라 투자 감속 가능성과 주가 등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중동전쟁 상황 악화와 고유가 지속 등이 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생산기반을 획기적으로 키우기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이 계획이 조기에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투자가 활성화되며 차세대 성장동력 구축이 한층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반도체 기업들이 배당 확대 등 주주이익 환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 민간소비 회복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에 기대고 있는 반도체 수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투자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난 7월 주가급락과 유사한 형태의 조정이 주식시장 또는 여타 자산시장에서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소지도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의 송유관이 공격으로 파손되는 등 중동전쟁 상황이 재차 악화되며 국제유가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 2027년 경제전망

2027년 국내경제는 2.7% 성장할 전망이다. 성장의 모습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2027년에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가세할 전망이다. 국회에 산정책처는 2027년 중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확장적인 재정기조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세하면서 내수가 설비 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다만 수출(수입유발효과 제외)의 기여도¹⁷⁾는 2026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2.0%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 소비 증가율은 가계의 소득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향후 반도체 제조업의 매출 증가가 관련 산업 종사자의 피용자보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개선이 소비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민간소비는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소비는 재정지출 증가세 확대, 건강보험급여비¹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0% 늘어 2026년(2.8%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투자는 R&D 분야와 지역 및 도시 부문, 물류 등의 SOC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0% 늘어 2026년(-1.4%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민간투자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4.1% 증가할 전망이다. 투자 유형별로는 설비투자과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각각 6.4%,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도 1.5%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총수출은 전년대비 4.2% 증가할 전망이다. 중동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컴퓨터 등 글로벌 AI 관련 투자가 호조를 이어나가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수입은 전년대비 5.5%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 등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용 원·중간재 수입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설비투자 관련 자본재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7) 순수출(총수출-총수입) 기준 성장기여도가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과소 계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의 성장기여도에서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효과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계산하였다. 수출의 수입유발효과 계산에는 산업연관표(2023년 연장표 기준)의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액 중 수출의 수입유발액 비중(38.7%)을 활용하였다.

18) 건강보험급여는 무상급식과 함께 정부소비의 대표적인 사회보장현물수혜 항목이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이며, 2024년 기준 일반정부의 명목소비지출(447.5조원)에서 건강보험급여비가 포함된 사회보장현물수혜(145.5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피용자보수(169.5조원, 3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7년 7.3%로 2026년 22.0%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2027년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2026년에 비해 낮아질 예상이며(3.5% → 2.7%),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도 2026년에 비해서는 개선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17.8 → 4.4%). 2027년에는 반도체 가격의 추가 상승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경상수지는 2027년 4,400억 달러 흑자로 전년(4,300억 달러 예상) 대비 흑자 규모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2027년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수지는 여행수지 악화, 연구개발 서비스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2027년 전년대비 18.0만명(0.6%)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률은 전년과 같은 62.9%로 전망되며 실업률은 2.9%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소비 개선세 지속과 건설투자 반등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와 더불어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정책적 개입이 고용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7년 2.4%로 전망된다. 2026년 중 물가 상승을 주도한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이 점차 소멸되면서 2027년에는 상반기 2.7%, 하반기 2.1%로 상승률이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채금리(3년)는 2027년 전년대비 0.1%p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완화와 경제 성장세의 둔화 등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2027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전년대비, %)

구 분	2025	2026	2027
국내총생산	1.1	3.5	2.7
민간소비	1.5	2.3	2.0
건설투자	△9.7	0.6	1.5
설비투자	1.5	6.9	6.4
총수출	4.3	9.0	4.2
총수입	3.3	7.6	5.5
경상수지(억달러)	1,231	4,300	4,400
실업률	2.8	2.8	2.9
소비자물가	2.1	2.7	2.4
국고채금리(3년)	2.7	3.9	3.8
GDP디플레이터	3.2	17.8	4.4
명목국내총생산	4.4	22.0	7.3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 국고채금리는 연중 평균

2. 2026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주요 전망기관들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2026년의 경우 NABO의 경제성장률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IMF는 3.3%, KDI는 3.2%, 한국은행은 3.3%로 전망하였다. 2027년의 경우 NABO의 전망치는 2.7%이며 IMF, 한국은행, KDI는 각각 2.8%, 2.9%, 2.2%로 전망하였다.

[주요기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단위: %)

전망기관	실질 경제성장률	
	2026년	2027년
IMF(2026년 10월)	3.3	2.8
KDI(2026년 8월)	3.2	2.2
한국은행(2026년 8월)	3.3	2.9
국회예산정책처(2026년 9월)	3.5	2.7

주: ()는 전망 시점

자료: 각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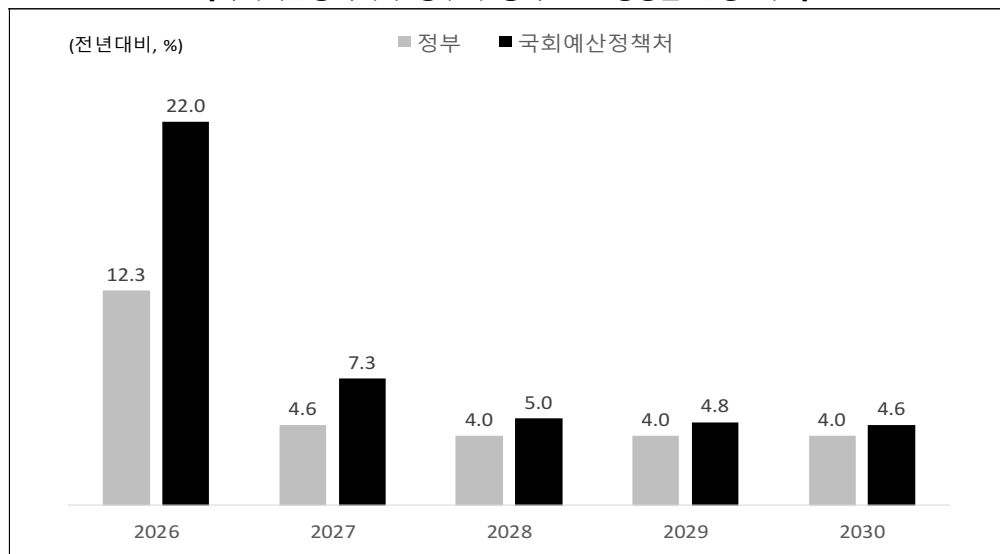
라. 중기전망

(1) 2026~2030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비교

2027년 명목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가 7.3%, 정부가 4.6%로 보고 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질GDP 성장률을 2.7%로, 정부는 2.2%로 각각 전망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4.4%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전망치인 2.4%를 상당 폭 웃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로 정부의 2.2%보다 높게 잡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2027년 중 디플레이터 상승 가능성을 정부에 비해 더 높게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6~2030년 명목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정부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여 점차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2026년 명목성장률 차이가 큰데 이는 2분기 26.4% 등 최근의 이례적인 실적치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AI투자로 촉발된 반도체 초호황과 소득여건의 개선이 시간에 걸쳐 경제 각 부문에 흡수되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다가 점차 추세 수준으로 낮아지는 성장경로를 예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2)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2030년 경제전망

2026~2030년 중 실질GDP는 연평균 2.7% 성장할 예상으로 이전 5년(2021~2025년)의 2.5%에 비해 성장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민간투자 기여도는 0.8%p로 이전 기간의 0.1%p에 비해 대폭 높아질 예정이다.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향후 5년 0.5%p로 이전과 비슷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4%로 이전 5년의 4.1%(국회확정예산 기준)에 비해 두 배 이상이지만 국민소득통계 상 정부 소비 및 투자와 직접 연관된 지출 확대 속도가 민간투자와 수출의 증가율을 밀돌면서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실질GDP의 예상 성장경로는 한동안 추세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추세성장률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이후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수요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

[2026~2030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전년대비, 연평균,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국내총생산	4.4	22.0	7.3	5.0	4.8	4.6
실질국내총생산	1.1	3.5	2.7	2.5	2.5	2.4
GDP디플레이터	3.2	17.8	4.4	2.5	2.3	2.2
소비자물가상승률	2.1	2.7	2.4	2.2	2.0	2.0
임금상승률	3.1	3.2	6.5	4.7	3.3	3.2
취업자 증감률	0.7	0.5	0.6	0.3	0.3	0.2
실업률	2.8	2.8	2.9	2.9	2.9	3.0
국고채금리(3년)	2.7	3.9	3.8	3.4	3.1	3.0
회사채금리(3년, AA-)	3.0	4.3	4.0	3.7	3.3	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월

2020~2024년 가계소득의 분배 수준은 전반적으로 소폭 개선된 반면, 순자산 불평등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¹⁾ 소득분위별 가구 평균 경상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소득 10분위와 1분위 간 평균 순자산 격차는 확대되었다.**²⁾

균등화³⁾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20년 0.405에서 2023년 0.392로 하락한 후 2024년 0.399로 상승하였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지니계수도 2020년 0.328에서 2023년 0.323으로 하락한 후 2024년 0.325로 상승하였다. 다만 2020년 대비 2024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모두 소폭 개선된 수준을 보였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기간 중 0.323~0.329의 범위에서 등락하였으나 변화폭은 크지 않았다. 반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603에서 0.625로 0.022 상승하였으며, 2022년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 소폭 개선된 가운데 가구 간 순자산 보유의 불평등도는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가계소득·순자산 지니계수 추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균등화 시장소득 지니계수	0.405	0.405	0.396	0.392	0.399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0.328	0.329	0.324	0.323	0.325
순자산 지니계수	0.603	0.606	0.605	0.612	0.625

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한 소득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유기환 경제분석관(kihwan@assembly.go.kr, 6788-4678)

-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은 조사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소득, 순자산은 조사연도 3월 31일 기준이다. 연도 표기의 일관성을 위해 본문과 표의 연도는 소득 귀속연도(2020~2024년)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2024년 수치는 2024년 연간 소득과 2025년 3월 말 순자산을 함께 나타낸다.
- 2) 소득분위는 가구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10개 집단으로 구분한 것으로, 분위가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으며 1분위는 소득 하위 10%, 10분위는 소득 상위 10%를 의미한다.
- 3) 균등화란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비 부담의 차이와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가구소득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경상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가구 규모가 다른 가구 간 소득 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된다.

소득 지니계수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경상소득 기준 소득 10분위별 가구 평균 소득은 2020~2024년 모든 분위에서 증가하였다. 소득 증가율은 소득분위가 높아질 수록 일관되게 상승하지 않았으며, 3~6분위에서는 19.9%에서 17.8%로 낮아진 반면 7~9분위에서는 18.7%에서 21.8%로 높아졌으나 10분위에서는 21.4%로 낮아졌다. 소득 10분위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2020년 1억 8,158만원에서 2024년 2억 2,042만원으로 21.4% 증가하였고, 소득 1분위 가구는 905만원에서 1,073만원으로 18.6%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 10분위와 1분위의 평균 경상소득 배율은 20.1배에서 20.5배로 소폭 높아졌다.

[소득 10분위별 가구 평균 경상소득 추이]

(단위: 만원, %)

소득분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1분위	905	909	954	1,019	1,073	18.6
2분위	1,724	1,785	1,856	1,991	2,030	17.7
3분위	2,567	2,671	2,819	3,007	3,078	19.9
4분위	3,438	3,595	3,799	4,017	4,093	19.1
5분위	4,377	4,556	4,830	5,084	5,188	18.5
6분위	5,453	5,664	5,946	6,316	6,422	17.8
7분위	6,660	6,941	7,272	7,720	7,907	18.7
8분위	8,135	8,520	8,950	9,490	9,788	20.3
9분위	10,373	10,973	11,449	12,154	12,634	21.8
10분위	18,158	19,075	19,747	21,051	22,042	21.4

주: 1. 소득분위는 가구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평균 경상소득은 해당 소득분위 가구의 연간 평균 금액을 의미

2. 증감률은 2020년 대비 2024년의 증감률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이어서 소득분위별 순자산 보유 구조를 살펴보았다. 소득분위별 평균 순자산은 상위 소득분위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소득 10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020년 11억 8,346만원에서 2024년 14억 8,068만원으로 25.1%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는 1억 247만원에서 1억 814만원으로 5.5%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소득 10분위와 1분위의 평균 순자산 격차는 11.5배에서 13.7배로 확대되었다.

[소득 10분위별 가구 평균 순자산 추이]

(단위: 만원, %)

소득분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률
1분위	10,247	11,718	11,256	11,469	10,814	5.5
2분위	19,224	18,835	19,312	18,478	17,673	△8.1
3분위	21,904	23,780	23,406	22,018	23,422	6.9
4분위	26,445	28,143	24,863	25,467	25,635	△3.1
5분위	29,244	34,525	31,679	30,165	31,191	6.7
6분위	35,878	37,578	37,333	37,280	37,725	5.1
7분위	42,632	46,616	41,578	41,566	44,341	4.0
8분위	48,326	53,732	52,313	55,969	57,801	19.6
9분위	62,209	70,540	66,726	69,234	74,656	20.0
10분위	118,346	130,494	126,918	137,277	148,068	25.1

주: 1. 소득분위는 가구 경상소득 기준으로 구분하며, 평균 순자산은 해당 소득분위 가구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액을 의미

2. 증감률은 2020년 대비 2024년의 증감률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종합하면, 소득분위별 평균 경상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증가하였으나, 평균 순자산은 상위 소득분위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소득 10분위와 1분위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는 고비용 부담 구조에 따른 지출 확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자산형성이 어려워지는데 일부 기인한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비용 부담 완화, 자산격차해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과 순자산의 분포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의 분배개선 효과를 높이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개인과 국민이 소득·고용·주거 등 물질적 생활조건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안전, 환경, 사회적 관계 및 주관적 삶의 만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하는 삶의 상태와 수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국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시민참여 및 주관적 웰빙의 11개 영역, 71개 지표로 구성된다.

[국민 삶의 질 지표 목록]

영역	지표	영역	지표	영역	지표
시민참여	선거투표율	건강	기대수명	소득/ 소비/ 자산	1인당 국민총소득
	정치적 역량감		건강수명		가구중위소득
	부패인식수준		스트레스 인지율		소득만족도
	기관신뢰도		주관적 건강상태		소비생활만족도
	시민의식		비만율		가구순자산
	자원봉사참여율		신체활동실천율		가계부채비율
	대인신뢰도		자살률		상대적빈곤율
고용/ 임금	고용률	주거	자가점유가구비율	교육	유아교육 취원율
	실업률		주택임대료비율		교육비 부담도
	월평균 임금		1인당 주거면적		학교교육 효과
	저임금근로자비율		최저주거기준		학교생활만족도
	근로시간		미달가구 비율		고등교육이수율
	일자리만족도		통근시간		대학졸업자 취업률
			주거환경만족도		

영역	지표	영역	지표	영역	지표
환경	초미세먼지 농도	안전	가해에 의한 사망률	여가	문화여가 지출률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범죄피해율		여가시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야간보행안전도		여가시간 충분도
	대기질 만족도		산재사망률		문화예술 및
	수질만족도		화재사망자수		스포츠 관람횟수
	토양환경 만족도		도로교통사고 사망률		1인당 여행일수
	소음 만족도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녹지환경 만족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기후변화 불안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족/ 공동체	독거노인비율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긍정정서		
	지역사회 소속감			부정정서	
	시민단체참여율				
	사회적 고립도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는 각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연도의 변화 방향을 전년대비 개선·유지·악화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최근 국민 삶의 질 변화를 살펴보면, **71개 지표 중 42개 지표가 개선된 반면 23개 지표는 악화되었으며, 6개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¹⁾

[국민 삶의 질 지표 개선 여부(최신 자료 기준 전년도 대비 변화)]

(단위: 백만원, %)

영역	지표 수	개선	유지	악화	악화지표 비율
시민참여	7	6	-	1	14.3
건강	7	4	1	2	28.6
소득/소비/자산	7	5	-	2	28.6
고용/임금	6	5	-	1	16.7
주거	6	3	2	1	16.7
교육	6	3	-	3	50.0
환경	9	5	-	4	44.4

1) 지표별로 이용 가능한 최신 자료의 기준연도가 상이하며, 각 지표의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변화 방향을 판정한다. 예를 들어,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25년, 1인당 주거면적은 2024년, 통근시간은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위: 백만원, %)

영역	지표 수	개선	유지	악화	악화지표 비율
안전	9	2	1	6	66.7
여가	6	4	1	1	16.7
가족/공동체	5	2	1	2	40.0
주관적 웰빙	3	3	-	-	0.0
계	71	42	6	23	32.4

주: 최근 접속(2026.9.9.) 기준 지표 변화를 표기

자료: 국가데이터처

나. 분석의견

전체적으로 개선된 지표가 악화된 지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국민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민참여, 고용·임금 및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 영역은 7개 지표 중 6개, 고용·임금 영역은 6개 중 5개가 개선되었으며, 주관적 웰빙 영역은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등 3개 지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질 변화는 영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안전, 교육, 환경 분야의 악화가 두드러진다.** 안전 영역은 9개 지표 중 6개가 악화되어 악화 지표 비율이 66.7%로 11개 영역 중 가장 높았다. 교육 영역도 6개 지표 중 3개가 악화되어 악화 지표 비율이 50.0%였으며, 환경 영역은 9개 중 4개가 악화되어 44.4%를 기록하였다. 가족/공동체 영역 역시 5개 중 2개가 악화되어 40.0%의 악화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안전 영역에서는 가해에 의한 사망률, 범죄피해율, 야간보행안전도, 산재 사망률, 화재사망자수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 6개 지표가 전년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비 부담도, 학교교육 효과 및 대학졸업자 취업률이 악화되었다. 이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하여 단순히 소득이나 고용 등 경제적 여건의 개선 여부만을 살펴보는 것보다, 안전·교육 등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반면 **주관적 웰빙과 고용·임금 등 일부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주관적 웰빙 영역은 3개 지표 모두 개선되었으며, 고용·임금 영역 역시 6개 지표 중 5개가 개선되었다. 이는 국민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객관적 생활조건과 주관적 인식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삶의 질 개선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정책은 모든 분야에 대한 일률적인 재정 투자 확대보다는 분야별 여건과 지표 변화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지표가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된 안전·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는 관련 재정사업의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정책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재정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면서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통해 세출·세입·부채 전반에서 중장기 재정여건을 바꾸는 구조적 재정위험 요인이다. 그러나 현행 재정관리 체계는 감축 재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적응·재난 재정소요와 전환 위험을 별도로 식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후 관련 재정위험을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위험 관리 과정에서 위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기후변화 자체가 초래하는 물리적 위험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전환 위험으로 구분된다.¹⁾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2020.10.28.)하고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2025.11.11.)하였다. 최근에는 중장기 NDC가 법률로 구체화되고 정부가 녹색국채 발행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등, 기후 대응이 중장기 재정운용의 주요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²⁾

앞에서 살펴본 경제여건, 분배여건, 국민 삶의 질이 현재의 재정 여건을 보여준다면, 기후변화는 지출 수요와 세입 기반을 장기에 걸쳐 바꾸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기후위험이 재정에 전달되는 경로를 먼저 살펴본 뒤,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이 국내 재정에 나타나는 양상을 점검하고, SWOT 분석과 미래세대의 시점에서 현재의 재정 선택을 평가하는 Future Design³⁾을 활용하여 그 영향을 탐색한다.

김윤희 경제분석관(yunhee.kim@assembly.go.kr, 6788-4679)

1)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Final Report: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Jun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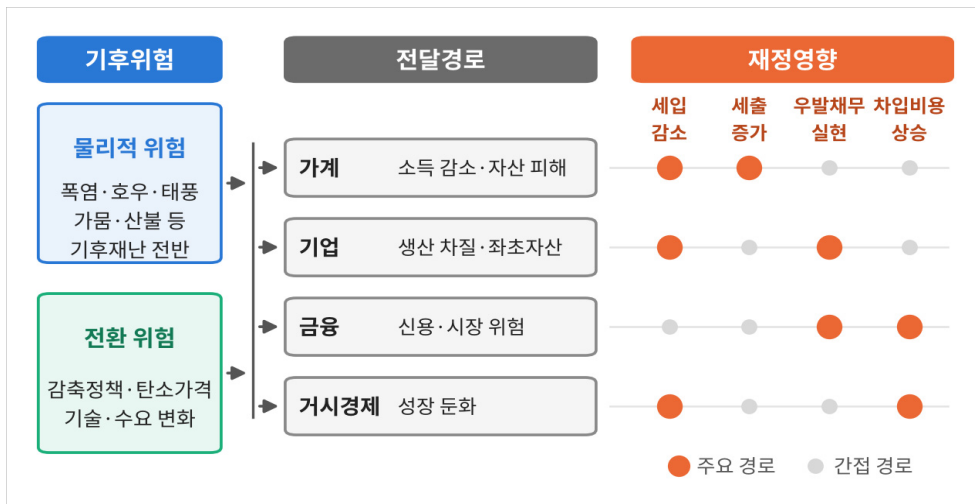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2020.10.28.; 관계부처 합동, 「'35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보도자료, 2025.11.10.; 관계부처 합동, 「녹색 혁신으로 경제 대도약: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보도자료, 2026.10.7.

3) 의사결정에 '가상 미래세대'의 역할을 도입하여 현재세대의 선택을 평가하는 방법론이다. Tatsuyoshi Saijo, "Future Design: Bequeathing Sustainable Natural Environments and Sustainable Societies to Future Generations," Sustainability, Vol. 12, No. 16, 6467, 2020.

가. 기후위험의 재정 전달경로

기후위험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재난 복구비 같은 직접 지출뿐 아니라 경제 주체의 피해와 전환 비용이 세수 감소나 정부 지원으로 되돌아오는 간접 경로로도 나타난다.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CFMCA)에 따르면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은 가계·기업·금융부문과 거시경제를 거쳐 정부에 전달되며, 그 결과는 세입 감소, 세출 증가, 우발채무의 실현, 차입비용 상승으로 나타난다.⁴⁾ 세입 측면에서는 재해에 따른 생산·소득 감소와 탈탄소 과정의 화석연료 소비 감소가 세수 기반을 약화시킨다. 세출 측면에서는 재난 복구·지원과 감축·적응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 부채 측면에서는 공기업·정책금융 보증이나 금융부문 손실을 정부가 사후에 부담하는 우발채무가 실현될 수 있으며, 재정여력이 줄어들면 국채 차입비용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부문 간 상호작용을 통해 증폭될 수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를 국가재정 단위로 추정하는 분석도구를 운영하고 있다.⁵⁾ 기후위험이 재정에 전달되는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기후위험의 재정 전달경로]



자료: Dunz and Power(2021), Figure 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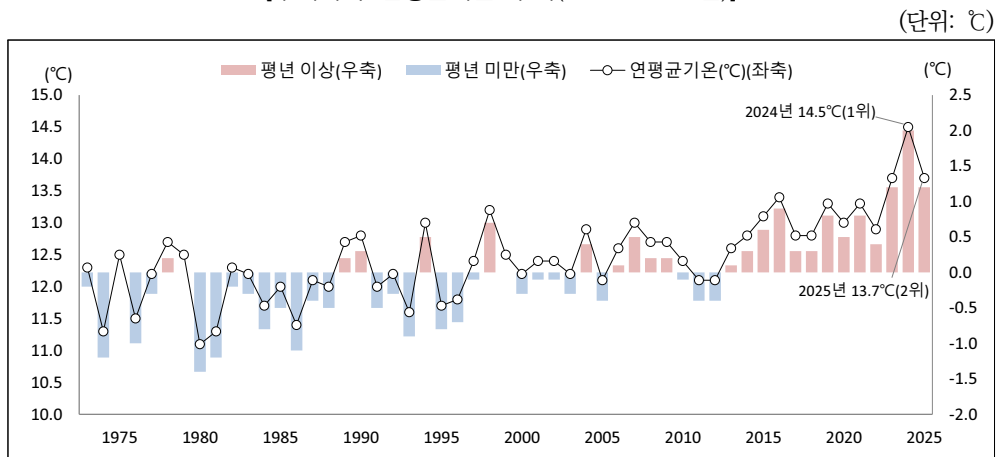
4) Nepomuk Dunz and Samantha Power, Climate-Related Risks for Ministries of Finance: An Overview,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 May 2021, pp.8~17.

5) IMF, Q-CRAFT User Guide, Version 1.0, 2024; OECD, EDISON, Version 2.1, 2025. 각 도구의 구조는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2026.10., 제4장 참고

나. 물리적 위험: 기후재난 복구비의 증가

물리적 위험은 주로 세출 증가와 우발채무의 경로로 국내 재정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기온 상승과 극한기상의 증가가 있다. 2024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4.5℃로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2025년(13.7℃)이 그 뒤를 이었으며, 2025년 폭염일수도 29.7일로 평년(11.0일)을 크게 웃돌았다.⁶⁾ 우리나라 연평균기온 추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

[우리나라 연평균기온 추이(1973~2025년)]



주: 전국 62개 지점 평균. 선은 연평균기온(좌축), 막대는 평년(1991~2020년, 12.5℃) 대비 차이(우축)
 자료: 기상청, 「2025년 연 기후특성」(2026.1.6.)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기후 여건에서 국내 자연재난의 재산피해는 호우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에 따라 대설 등 다른 원인의 피해도 크게 나타난다. 2025년 자연재난 재산피해액 1조 1,680억원 가운데 1조 1,376억원이 호우 피해였으며, 2024년에는 11월 폭설 등으로 대설 피해가 4,542억원에 달하여 그해 자연재난 재산피해액(9,107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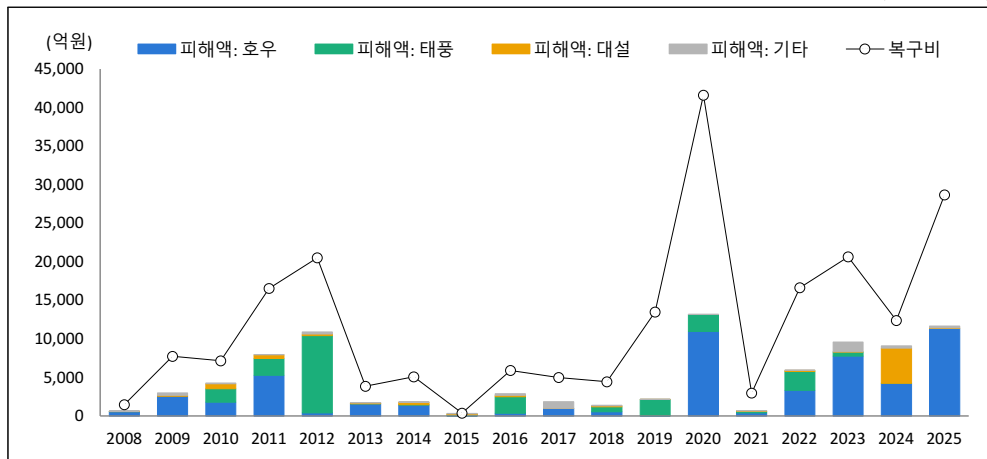
재난 피해는 복구비 지출을 통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자연재난 복구비는 2008년 이후 2020년(4조 1,615억원)에 가장 많았고, 2025년에도 7월 집중호우 등으로 2조 8,686억원(잠정)이 소요되어 재산피해액을 크게 웃돌았다. 2025년 복

6) 기상청, 「2025년 연 기후특성」, 보도자료, 2026.1.6.

구비 가운데 국고는 2조 425억원, 지방비는 6,032억원, 자체복구비는 2,228억원으로, 재난 복구 부담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다.⁷⁾ 원인별 자연재난 재산피해액과 복구비 추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

[원인별 자연재난 재산피해액과 복구비 추이(2008~2025년)]

(단위: 억원)



- 주: 1. 경상가격 기준. 복구비는 국고·지방비 지원복구비와 자체복구비의 합계
 2. 기타는 강풍·풍랑·지진·한파·폭염 등이며, 산불은 「재해연보」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제외.
 2025년은 잠정 집계
 3. 단수 조정으로 재원별 내역의 합이 합계와 다를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각 연도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복구비가 피해액을 웃도는 것은 피해 시설을 원상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복구까지 지원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시·군·구의 피해금액이 재정력지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재난복구비는 재난이 발생해야 지출 의무가 생기는 우발채무의 성격을 가지며, 법령에 따른 국고 지원은 명시적 우발채무에, 법정 기준을 넘는 사후 지원은 암묵적 우발채무에 해당한다.⁸⁾ OECD와 세계은행도 정부가

7)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각 연도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20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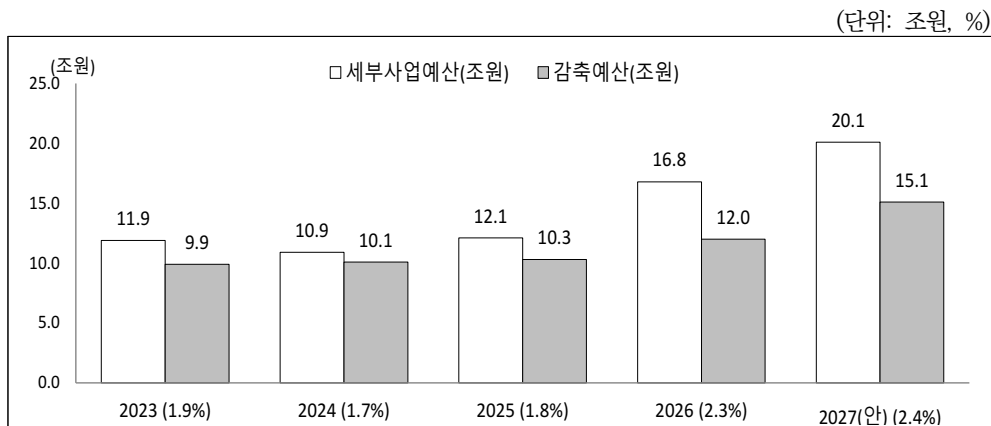
8) Hana Polackova Brixi and Allen Schick (eds.), Government at Risk: Contingent Liabilities and Fiscal Risk, World Bank, 200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2025.10., 151~152쪽

명시적·암묵적 지원을 통해 재난 복구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고 지적하였다.⁹⁾ 재난복구비는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사후에 대응하는 구조이므로, 기후재난이 대형화할수록 연도별 재정운용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다. 전환 위험: 감축 투자 확대와 세원 구조의 변화

전환 위험은 먼저 세출 측면에서 감축 투자의 확대로 나타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세부사업예산은 2023년도 예산안 11.9조원에서 2027년도 예산안 20.1조원으로 늘었고,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도 1.9%에서 2.4%로 높아졌다.¹⁰⁾ 정부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서 2026~2035년 재정 200조원을 포함한 총 1,00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지출사업을 2026년 2.6조원에서 2027년 7.6조원(예산안)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¹¹⁾ 연도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규모는 다음 그림과 같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규모 추이(2023~2027년)]



주: 1. 각 연도 정부 예산안 기준. 괄호는 정부 총지출 대비 세부사업예산 비중

2. 감축예산은 세부사업예산 중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부분

자료: 대한민국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9) OECD and World Bank, Fiscal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Lessons from Country Experiences, OECD Publishing, Paris, 2019.

10)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VII, 2026.10.

11) 관계부처 합동, 「녹색 혁신으로 경제 大도약: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보도자료, 2026.10.7., 37~38쪽

세입 측면에서는 탈탄소 전환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화석연료 관련 세수는 줄지만,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기후대응기금 수입은 늘 수 있다.¹²⁾ 부채 측면에서도 감축 투자 재원의 일부가 국채와 보증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6.8.26.)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부담으로 녹색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정부는 2028년 녹색국채 최초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¹³⁾ 녹색국채의 발행잔액은 국가채무에 포함되며, K-GX 전략의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출자·출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암묵적 우발채무 요인이다.

라. SWOT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재정환경을 재정 내부의 강점·약점과 외부 환경의 기회·위협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먼저 강점으로는 2045년까지의 감축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중장기 재정소요를 계획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점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와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감축 관련 지출과 재원을 매년 식별·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반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감축 중심으로 운영되어 적응·재난 재정소요가 별도로 식별되지 않고,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전망도 감축목표 이행에 따른 재정소요와 화석연료 관련 세수 감소 등 전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아¹⁴⁾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재정 부담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은 약점 요인이다. 기회 요인으로는 성장과 세원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녹색산업 투자 확대와, 재원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녹색국채·배출권 유상할당 확대가 있다. 다만 녹색국채는 재원 다양화 수단이면서 동시에 부채 부담 요인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위협 요인으로는 사후적인 복구비 지출을 늘리는 기후

12) 관계부처 합동, 「35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보도자료, 2025.11.10.

13)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국회 통과」, 보도참고자료, 2026.8.26.; 관계부처 합동, 「녹색 혁신으로 경제 대도약: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보도자료, 2026.10.7., 38쪽

14) 기획재정부, 「2025~2065 장기재정전망 실시」, 보도자료, 2025.9.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VIII, 2026.10., 제4장 참고

재난의 대형화, 세입 감소를 초래하는 화석연료 과세기반의 축소, 녹색국채 발행·기후금융 보증 확대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정환경 SWOT 분석]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내부 요인	강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형 감축목표 법제화(2035~2045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기후대응기금 운영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응·재난 재정소요의 별도 식별 체계 부재 · 장기재정전망에 감축 재정소요·전환 위험 미분
외부 요인	기회(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GX 전략 등 녹색산업 투자 확대 · 녹색국채·배출권 유상할당 등 자원 다양화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재난 대형화에 따른 복구비 증가 · 화석연료 과세기반 축소 · 녹색국채·기후금융 보증에 따른 부채 부담

주: 내부 요인은 재정제도·재정운용 등 재정 내부의 여건을, 외부 요인은 기후변화와 탈탄소 전환 등 재정 외부의 환경 변화를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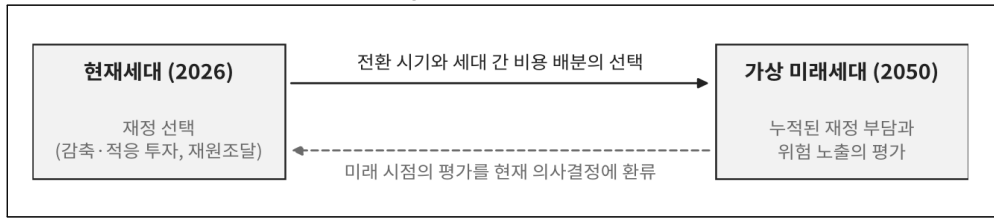
마. Future Design: 미래세대 관점의 기후 대응 경로

Future Design의 관점에서 2050년의 가상 미래세대가 현재의 재정 선택을 평가한다면, 전환을 언제 시작하고 그 비용을 세대 간에 어떻게 나누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된다. 헌법재판소도 2031~2049년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고 보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2024.8.29.).¹⁵⁾ 재정 측면에서도 IMF는 탄소가격과 지출 정책을 함께 활용하면 넷제로 이행에 따른 선진국의 국가채무 증가 폭을 2050년까지 GDP 대비 10~15%p로 억제할 수 있으나, 탄소가격 도입이 1년 늦어질 때마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0.8~2.0%p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¹⁶⁾ 이는 전환을 앞당기면 현재 세대의 재정 부담이 커지지만, 전환을 늦출수록 부담이 누적되어 미래세대로 이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uture Design 관점에서 재정 의사결정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15) 헌법재판소 2024.8.29.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병합) 결정

1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iscal Monitor: Climate Crossroads: Fiscal Policies in a Warming World, October 2023, Executive Summary.

[Future Design 관점의 재정 의사결정 구조]



자료: Saijo(202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자체의 재정 비용에 대해서는 영국 예산책임청(OBR)이 2073~74회계연도의 국가채무가 기온 상승 2℃ 미만 시나리오에서 GDP 대비 약 23%p, 3℃ 미만 시나리오에서 약 33%p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¹⁷⁾ 아일랜드에서도 재무부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세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2023.7.),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IFAC)는 기후변화자문위원회(CCAC)와 함께 2030년 감축목표를 미달성 시 재정 비용이 약 75억~264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였다(2025.3.4.).¹⁸⁾ 다만 이러한 추정은 대상국과 비용 범주가 서로 다르므로, 우리나라의 재정 부담 규모로 직접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국외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 대응 경로별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의 시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후 대응 경로별 재정 부담 추정 사례]

경로	비용의 성격	추정 결과 (국가채무, GDP 대비)	대상·기간	출처
질서 있는 전환	탄소가격과 지출정책을 병행한 감축 이행 비용	2050년까지 +10~15%p	선진국, 2050년	IMF(2023)
지연된 전환	탄소가격 도입 지연에 따른 추가 이행 비용	지연 1년당 +0.8~2.0%p	-	IMF(2023)
기후 피해 누적	기온 상승에 따른 경제·재정 피해 비용	2073~74년, +23%p(2℃ 미만), +33%p(3℃ 미만)	영국, 50년 전망	OBR(2024)

주: 국외 분석 사례로 국내 추정치가 아님, 대상국·시점·비용 범주가 달라 경로 간 직접 비교는 불가
 자료: IMF, Fiscal Monitor(2023.10.);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2024.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7)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September 2024.

18) Department of Finance, Potential Fiscal Impacts of the Transition to a Lower Carbon Economy in Ireland, July 2023; Climate Change Advisory Council and Irish Fiscal Advisory Council, A Colossal Missed Opportunity: Ireland's Climate Action and the Potential Costs of Missing Targets, March 2025.

기후변화는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통해 세출·세입·부채 전반에 걸쳐 중장기 재정여건을 바꾸는 요인이다. 물리적 위험은 복구비 지출 증가와 암묵적 우발채무로 이미 재정에 나타나고 있으며, 전환 위험은 감축 투자 확대와 함께 화석연료 과세기반 축소, 녹색국채·보증에 따른 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축 관련 재정은 법정 감축목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로 관리 기반을 갖추었으나, 적응·재난 재정소요와 전환 위험은 아직 별도로 식별되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CFMCA, IMF, OECD를 중심으로 기후위험을 재정위험의 하나로 다루는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영국 예산책임청(OBR)과 아일랜드 재무부·재정자문위원회 등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기후 관련 재정 비용을 분석하여 공표하고 있다. **기후 대응의 재정 부담은 전환의 시기에 따라 세대 간 배분이 달라지므로, 우리나라도 향후 이러한 국제 논의와 해외 사례를 감안하여 기후 관련 재정위험을 장기재정전망과 재정 위험 관리 과정에서 위험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헌법」 상 국민의 4대 의무인 교육, 국방, 고용 및 재정(납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12월 발표한 「NABO 인구전망: 2025~2045」를 활용하여 향후 20년간의 장래인구 변화가 교육, 국방, 고용 및 재정(납세) 부문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 교육부문

(1) 학령인구

2025년 503만 명이던 학령인구는 2035년 333만명, 2045년에는 300만명까지 줄어든 전망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출생 현상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학령인구(6~17세)²⁾는 출생아 수 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감소해 왔다. 학령인구는 1977년 1,091.9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503만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정점이었던 1977년과 비교하면 약 589만명(△53.9%) 감소한 수준이다.

향후에도 학령인구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인구전망: 2025~2045」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30년 411만명으로 감소한 이후 2035년 333만명, 2040년 316만명, 2045년 300만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는 2025년 503만명에서 2035년에는 333만명으로 170만명(△33.8%) 감소하고, 2045년에는 300만명으로 2025년 대비 203만명(△4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학령인구 전망에서 긍정적인 요소이

김상용 경제분석관(sangyong@assembly.go.kr, 6788-4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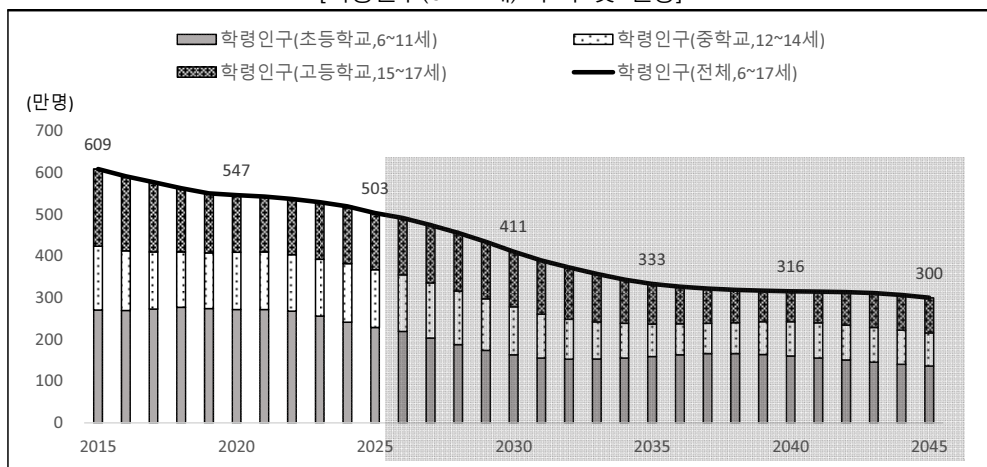
1) 재정(납세)부분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전망치가 아닌 실적치를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의 고령인구부양률, 국민부담률 및 사회보장 부담률을 비교·분석하였다.

2)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서는 학령인구에 대학교(18~21세)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번 분석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인구(6~17세)를 학령인구로 분류하였다.

나, 이러한 출산율 반등이 단기간 내 학령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이 상승하더라도 출생아가 학령인구에 진입하기까지는 최소 6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학령인구의 연령구조를 고려하면, 향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새롭게 만 6세가 되어 학령인구에 진입하는 인구보다 만 18세가 되어 학령인구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더 많은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최근의 출산율 반등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하더라도 저출생으로 형성된 작은 인구의 연령집단이 학령인구에 유입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큰 연령집단은 학령인구에서 유출되면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최근의 출산율 반등은 장기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향후 상당 기간 동안 학령인구 자체를 증가세로 전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산율 반등의 효과가 학령인구에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교육정책에서는 출산율 반등에 따른 장기적인 인구 회복 가능성과 단기·중기적으로 불가피한 학령인구 감소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6~17세) 추이 및 전망]



- 주: 1. 2025년까지 자료는 실적치
 2. 음영된 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구주택총조사」
 국회예산정책처, 「NABO 인구전망: 2025~2045」

(2) 학급 수

2026년 학급당 학생 수와 2025년 취학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학급 수는 2045년 초등학교 7.3만개, 중학교 3.2만개, 고등학교 3.4만개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2025년 대비 초등학교 4.8만개($\Delta 39.9\%$), 중학교 2.3만개($\Delta 42.6\%$), 고등학교 2.2만개($\Delta 38.0\%$) 감소한 수준이다.

학급 수는 2026년의 학급당 학생 수(초등학교 18.6명, 중학교 24.5명, 고등학교 23.1명)와 2025년 학교별 취학률(초등학교 99.9%, 중학교 97.3%, 고등학교 94.4%)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초등학교 학급 수는 2025년 12.1만개에서 2030년 8.8만개로 감소한 후, 2035년 8.5만개, 2040년 8.6만개를 거쳐 2045년에는 7.3만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2025년보다 3.4만개($\Delta 27.9\%$) 감소하고, 2045년에는 2025년보다 4.8만개($\Delta 39.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35년 이후에는 최근의 출산율 반등에 따른 출생아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학급 수가 2035년 8.5만개에서 2040년 8.6만개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45년에는 7.3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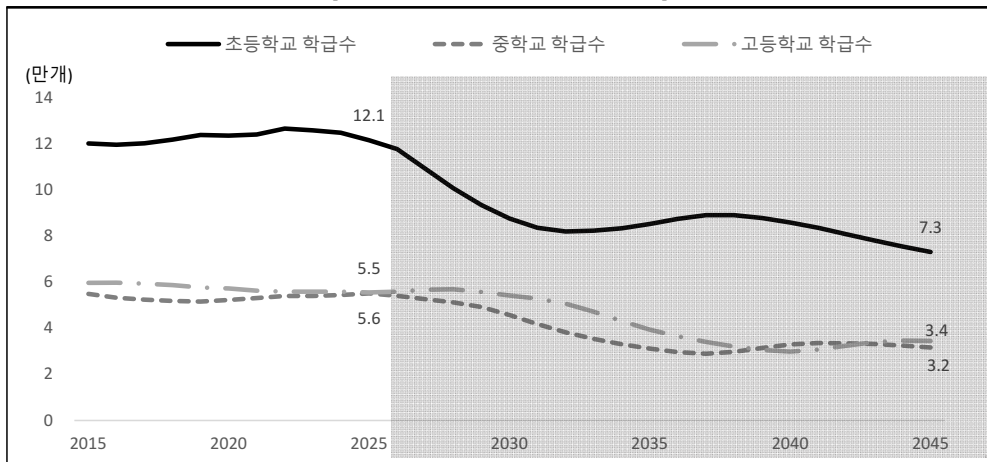
중학교 학급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5.5만개였던 중학교 학급 수는 2030년 4.6만개, 2035년 3.1만개로 감소하고, 2040년에는 3.3만개로 소폭 증가한 뒤 2045년에는 다시 3.2만개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45년 중학교 학급 수는 2025년보다 2.3만개($\Delta 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 학급 수는 2025년 5.6만개에서 2030년 5.4만개, 2035년 3.9만개, 2040년 3.0만개까지 감소한 이후 2045년에는 3.4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45년에도 2025년보다 2.2만개($\Delta 38.0\%$) 적은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학급 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의 출산율 반등이 일부 시점에서 학급 수 감소를 완화하거나 일시적인 증가로 이어지더라도, 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35~2040년, 고등학교는 2040~2045년에 학급 수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최근 출산율 반등의 효과가 출생 코호트의 성장과 학교급별 이동을 통해 순차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임여성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합계출산

율이 상승하더라도 출생아 수의 증가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 반등의 효과가 나타난 이후에는 학급 수가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근의 합계출산율 반등은 향후 학령인구 및 학급 수의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의 인구구조에서는 학급 수를 장기적인 증가세로 전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출산율 반등이 교육수요에 반영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교육정책은 출산율 반등에 따른 일시적인 교육수요 변화와 장기적인 학급 수 감소를 함께 고려하여 학교시설, 교원 및 교육재정의 중장기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별 학급 수 추이 및 전망]



주: 1. 2025년까지 자료는 실적치

2. 2026년 이후 학급 수 자료는 2026년의 학급당 학생 수(초등학교 18.6명, 중학교 24.5명, 고등학교 23.1명)와 2025년 취학률(초등학교 99.9%, 중학교 97.3%, 고등학교 94.4%)을 적용한 전망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국회예산정책처, 「NABO 인구전망: 2025~2045」

(3) 학급당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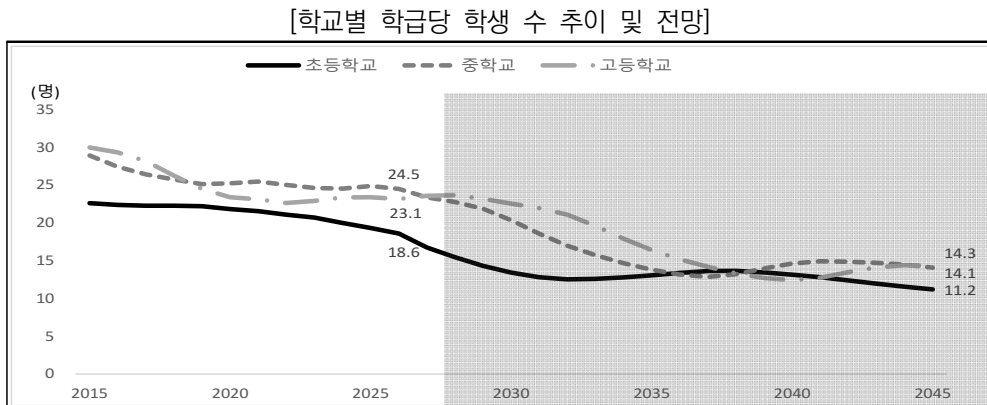
2025년의 학급 수와 취학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학급당 학생 수는 2045년 초등학교 11.2명, 중학교 14.1명, 고등학교 14.3명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2026년 대비 초등학교 7.4명($\Delta 39.8\%$), 중학교 10.4명($\Delta 42.5\%$), 고등학교 8.8명($\Delta 38.1\%$) 감소한 수준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2025년의 학급수(초등학교 12.1만개, 중학교 5.5만개, 고등학교 5.6만개)와 학교별 취학률(초등학교 99.9%, 중학교 97.3%, 고등학교 94.4%)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가장 먼저 나타나면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18.6명에서 2030년 13.4명으로 감소하고, 2035년에는 13.1명, 2040년에도 13.1명 수준을 유지한 후 2045년에는 11.2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대비 2045년의 학급당 학생 수는 7.4명 감소하여 약 39.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0년대 후반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이후 2030년대에는 13명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40년대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의 출생아 수 감소가 초등학교 학령인구에 먼저 반영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향후 초등학교의 학급 및 학교 운영 규모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26년 24.5명으로 세 학교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나, 향후 감소폭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20.3명으로 감소한 이후 2035년에는 13.8명까지 낮아지고, 2040년 14.6명, 2045년 14.1명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대비 2045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0.4명 감소하여 약 4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학교는 2030~2035년 사이에 학급당 학생 수가 6.5명 감소하는 등 2030년대 초반 이후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초등학교에 비해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다소 늦게 나타나지만, 출생아 수 감소가 누적되면서 일정 시점 이후 학급당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장기적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2026년 23.1명에서 2030년 22.5명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35년 16.4명, 2040년 12.4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45년에는 14.3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2026년과 비교하면 8.8명, 약 38.1% 감소한 수준이다.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나 2020년대 후반에는 학급당 학생 수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2030년대에 들어서면서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40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2.4명까지 낮아져 세 학교급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 주: 1. 2026년까지 자료는 실적치
 2. 2027년 이후 학급당 학생 수 자료는 2025년의 학급수(초등학교 12.1만개, 중학교 5.5만개, 고등학교 5.6만개)와 취학률(초등학교 99.9%, 중학교 97.3%, 고등학교 94.4%)을 적용한 전망치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국회예산정책처, 「NABO 인구전망: 2025~2045」

(4) 기타요인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은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을 근거로²⁾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교육부문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초·중등교육 분야 1인당 공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만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³⁾ 교부금 개편안 논의 시 제도적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부담 증가 및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의 재정수요 증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향후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재정분담 범위가 확대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⁴⁾에 따라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무상교육·보육 확대 등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의 재정소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 사업이 국고·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어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 부문의 국고지원 사업은 일반회계, 영유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어 있으며, 2025년 기준 8조 8,256억원에서 2027년 예산안 기준 9조 9,993억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유보통합의 이상적 모델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향상하고,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을 모색하는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사업’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추진 중에 있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자세한 내용은 「2027년 예산안 총괄분석Ⅱ」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분석’ 참조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한국 vs OECD, '22년, 천\$) : (초중등) 22.5 vs 13.5 (고등) 14.7 vs 21.4

3)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은 이례적인 세수 호황으로 교부금이 전년보다 24.9% 급등한 81조 3,000억원까지 늘었던 해이고, 이듬해 교부금은 세수 결손으로 68조 9,000억원까지 감소했다는 점에서 2023년 이후 국제비교 통계가 아직 작성되지 않은 만큼,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구조적 과잉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슈와 논점)

4) 당초 유치원(교육부)-어린이집(복지부)로 이원화된 중앙 단위의 관리체계가 정부조직법 개정(23.12.26.)으로 교육부로 일원화(24.6.27.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보육 사무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24.10.30.)되었으나, 재정 이관 문제로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지원 기간·대상) '24.9월 ~ '27.2월 / 17개 시·도교육청
- (예산) 특별교부금 / ('24) 204억원 → ('25) 910억원 → ('26) 900억원
- (지원내용) 시범기관 지정·운영 및 시도교육청별 특색사업 추진
 - (시범기관) 시범기관 지정을 통해 '상향평준화 과제'* 지원 지속('24.~)
 - * (4대 상향평준화 과제) 1)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2)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3)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4)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특색사업) 교육청별로 관내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별 '특색 있는 사업' 추진('25.~)
- ※ ('25년) 시도별 3개 내외 총 50개 사업 → ('26년) 시도별 8개 내외 총 128개 사업(기타 제외)

자료: 교육부

정부는 2026년 10월 현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으로, 새로운 로드맵 확정 발표 시 재정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부금제도 개편 논의시 향후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중장기 추가 재정소요와 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중·고 학교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등급 현황을 고려할 때, 학교시설 개선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983개 중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보유한 학교는 7,656개로 63.9%이며, 전체 건물 중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비중이 약 39.8%를 차지한다. 또한 안전등급 A~E등급 가운데 D등급 이하를 받은 학교 건물 수도 2026년 기준 71개로, 2021년 대비 2.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전등급 A~E등급 가운데 D등급 이하를 받은 학교건물 수(2021~2026)]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D등급	25	65	84	82	78	71
E등급	0	0	0	0	2	0
합계	25	65	84	82	80	71

- 주: 1. D등급: 주요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상태
 2. E등급: 주요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 등이 필요한 상태

자료: 교육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 중 학교교육환경개선비 확정교부 규모는 2023~2024년 5조원을 유지하다가 2025년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향후 학교교육환경개선비 소요액을 2027년 기준으로 개편된 교부금 산식상의 연평균 증가율 6.6%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어 학교시설의 노후도·안전등급 등 실제 시설개선 수요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사용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2022년 8조 8,074억원에서 2025년 3조 755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노후 학교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재정수요와 이를 충족할 지방교육재정의 여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국정과제로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사 확보 소요 등 특수교육 관련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령인구의 감소 추이와는 반대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0년간 39% 증가하였다. 특수학교 학생 수도 10년간 24%, 특수학급 학생 수는 53%가 증가하였는바, 이에 따라 지속적인 특수교사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기준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 확보율의 80.5%에 그치고 있다.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2015~2026년)]

(단위: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76.1	79.0	80.2	85.6	88.0	90.9	92.5	91.7	86.2	83.0	80.7	80.5

주: 1. 법령*에 따라 공립 특수학교(급)에 배정된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

자료: 교육부

특히 특수학교 설립(국립 제외)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개설 비용은 모두 시·도 교육청의 재원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부담의 증가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6~2030년에는 특수학교 21개 설립이 계획되어 있는데, 국립 특수학교⁵⁾를 제외한 19개교 설립 비용은 시·도교육청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또한 최근 3년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수가 14,000~15,000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600학급 이상(총 3,000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수학급 개설에 소요되는 예산도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넷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시·도 자체예산 부담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재정소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1수준)⁶⁾ 학생 비율은 14.9%로 전년대비 2.2%p 증가하여 2017년 표집평가 전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업성취도 격차도 나타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국립 특수학교(한국고원대 부설특수학교, 부산대 부설특수학교)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6) 교과별 성취수준은 4단계로 나뉘며, 가장 낮은 1수준은 “평가 대상 학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에 해당한다.

[지역규모별 '1수준' 비율]

(단위: %)

구분 연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23	9.7 (1.10)	8.9 (0.95)	10.6 (0.83)	17.9 (1.32)	5.0 (0.57)	6.7 (0.85)	7.9 (1.01)	10.1 (2.17)	14.3 (1.47)	18.5 (2.45)	8.1 (1.07)	8.2 (1.70)
'24	8.2 (0.55)	13.8 (1.30)	9.7 (0.64)	17.9 (1.65)	5.4 (0.44)	10.5 (1.26)	8.8 (0.95)	8.3 (1.92)	11.3 (0.89)	11.2 (1.92)	6.2 (0.63)	5.6 (1.28)
'25	10.2 (0.54)	13.0 (1.62)	13.1 (0.73)	19.5 (1.50)	6.0 (0.44)	8.5 (0.99)	11.3 (1.18)	9.7 (1.85)	10.7 (0.92)	12.6 (1.83)	7.1 (0.85)	6.0 (1.47)

- 주: 1. 표집시행으로 인한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2. 통계적 유의도는 95% 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
 3. 은 전년대비 해당연도의 교과별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경우임

자료: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6.6.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7)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은 2026년 기준 283,294명이며, 전문교원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53명이다. 현재 정부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련 특별교부금 교부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의 투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그 외에 개별화된 학생 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의 2027년도 전면 실시, 학생 건강을 위한 학교별 보건 교사, 영양교사의 채용, 학교급식 종사자의 적정인력

7)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 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실시하거나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이 함께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학습지원교육 및 보조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준을 담은 개정 학교급식법의 시행 등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도 예상된다.

먼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에 따라 졸업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학사제도로, AI 시대에 입시 중심의 획일적 교육을 학생 성장 중심의 개별화된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부터 도입되었다.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학기별로 9개 과목(약 30학점)을 이수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 경과]

연도	내용
2018	추진 로드맵 수립
2018-2024	연구준비학교 운영 및 고교 유형별 단계적 적용
2025	고1 전면 도입
2026	고2 전면 도입
2027	고3 전면 도입 예정

자료: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비는 2026년 기준 연간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⁸⁾를 기준으로 학교 운영비 1,217억원, 교실 증설·전환비 1,414억원이 소요되고,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서는 별도로 농산어촌 강사 채용,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원 연수, 학부모 설명회 등에 366억원이 편성되었다. 고교학점제는 2027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어 추후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초·중등 보건교사의 경우 2026년 4월 기준,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상 정원⁹⁾인 11,515명 대비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정원은 78.6%인 9,056명에 그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9)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1. 6. 8.>

치고 있다. 특히 전북(73.6%), 경기(73.9%) 등 도 단위의 광역지자체에서 충원율이 낮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법령에 따라 2,459명의 보건교사를 추가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또한 초·중등 영양교사의 경우에도 「학교급식법」 상 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에 두어야 하나¹⁰⁾ 2026년 4월 기준, 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는 10,791곳 대비 영양교사는 7,491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 수 대비 영양교사의 비중이 54.2%로 가장 낮았다.

종합하면, 교부금 개편안 논의 시 제도적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부담 증가 및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급당 학생 수가 현재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급별로 감소 시점에는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는 출생아 수 감소의 영향이 먼저 나타나 2020년대 후반부터 학급당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시차를 두고 2030년대에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여 학급 수를 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학교급별 학령인구 변화와 지역별 학생 수 분포를 고려하여 학급 수 및 학교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감소는 교육여건 개선의 측면에서 학생 1인당 교육공간 확대나 개별화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학교 규모 축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① 삭제<2021. 12. 9.>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신설 2021. 12. 9.>

10)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이 경우 재학 중인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개정 2009. 2. 6., 2020. 1. 29., 2026. 2. 19., 2026. 5. 19.>

나. 국방부문

20세 남자 인구 대비 신규 병력자원 비율(2025년 기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신규 병력자원 규모는 2045년에 9.8만명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2025년 신규 병력자원 18.5만명 대비 8.7만명($\Delta 47.0\%$) 감소한 수준이다.

2025년 기준 20세 남자 인구¹⁾ 대비 현역입영자 비율이 79.2%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신규 병력자원 규모를 추정하였다. 신규 병력자원은 징집병과 모집병²⁾을 합산한 규모로, 20세 남자 인구에 현역입영자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병역제도 및 입영 비율에 별도의 변화가 없더라도, 20세 남자 인구의 감소만으로 신규 병력자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세 남자 인구는 2025년 23.4만명에서 2045년 12.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 대비 11.0만명($\Delta 47.0\%$) 감소하는 수준이다. 20세 남자 인구는 2010년 33.5만명에서 2014년 37.7만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2025년에는 23.4만명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후에도 전반적 감소세가 지속되며 2030년 23.6만명, 2035년 22.1만명, 2040년 14.1만명, 2045년 12.4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30년대 후반부터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20세 남자 인구가 빠르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징집병과 모집병을 합산한 신규 병력 규모도 2025년 18.5만명에서 2045년 9.8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 대비 8.7만명($\Delta 47.0\%$) 감소한 수준이다. 신규 병력 규모는 2030년 18.7만명으로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감소폭이 확대되어 2035년 17.5만명, 2040년 11.2만명, 2045년 9.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40년 신규 병력 규모는 2025년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하며, 2045년에는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신규 병력자원 감소는 병역제도나 입영률의 변화가 없더라도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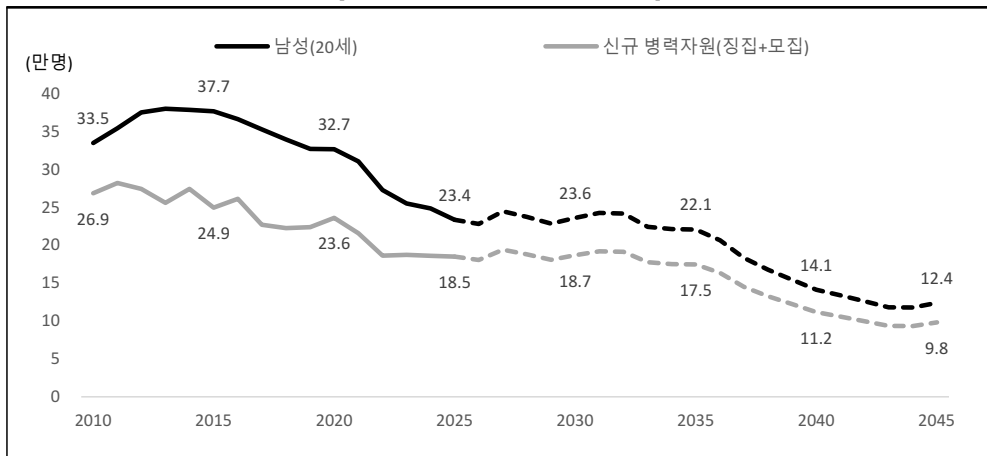
김상용 경제분석관(sangyong@assembly.go.kr, 6788-4753)

1) 2025년까지의 남성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20세 남성인구를 이용하였으며, 2026년 이후 남성인구는 「NABO 인구전망 : 2025~2045」의 20세 내국인 남성인구를 기준으로 전망하였다.

2) 임기제 부사관, 카투사, 어학병, 기술병 등 입대 전 병무청에서 모집 공고한 특기에 지원하여 선발되어 해당 특기를 부여받고 입영한 사람을 의미한다.

변화만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년의 20세 남자 인구 대비 현역입영자 비율인 79.2%가 유지된다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2045년 신규 병력 규모는 10만명 상당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영 대상자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병력구조 및 병력 운영 방식의 변화, 인력의 효율적 활용, 장비·무기체계의 첨단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병력자원의 감소 속도가 2030년대 후반 이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병력자원 감소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중장기적인 병력 운영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규 병력자원 추이 및 전망]



- 주: 1. 2025년까지 자료는 실적치
 2. 2026년 이후 신규 병력자원 수는 2025년 기준 20세 남자 인구 수 대비 현역입영자비율(79.2%)을 적용한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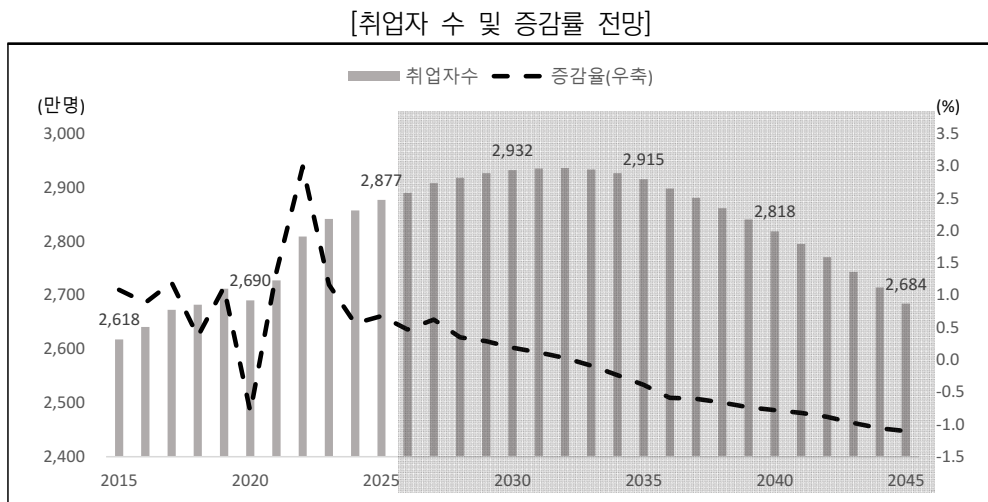
자료: 병무청, 「병무통계연보」
 국회예산정책처, 「NABO 인구전망: 2025~2045」

다. 고용부문

NABO 인구전망을 바탕으로 취업자 수 및 취업자 연령구조를 전망하면, 2045년 취업자 수는 2,684만명으로 2025년 대비 193만명($\Delta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취업자 중 고령층 비중은 2025년 14.4%에서 2045년 26.7%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 변화는 노동공급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는 취업자의 연령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의 노동공급과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ABO 인구전망에 경제활동참가율과 연령별 실업률 전망을 반영하여 2045년까지의 취업자 수를 전망한 결과, 취업자 수는 2025년 2,877만명에서 증가하여 2032년 2,936만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3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45년에는 2,68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5년 대비 193만명($\Delta 6.7\%$) 감소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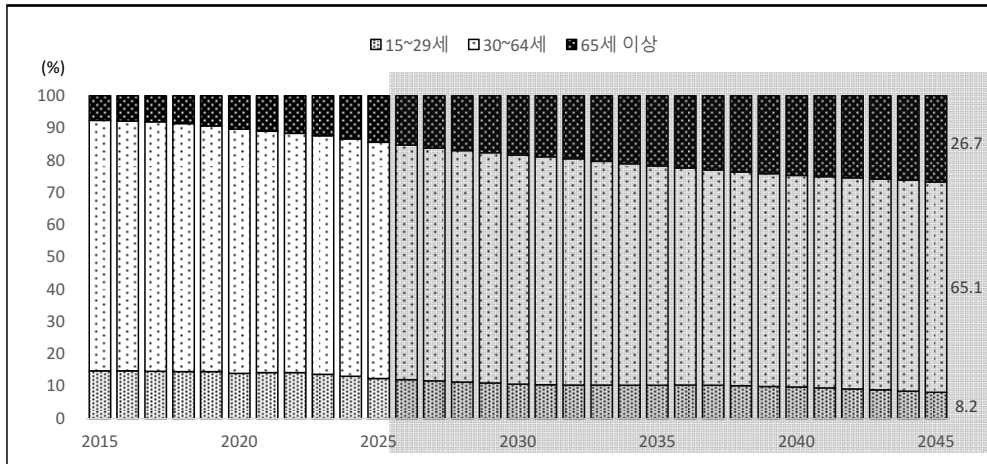
주 : 2025년까지 자료는 실적치, 2026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회예산정책처, 「NABO 인구전망: 2025~2045」

2045년까지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고령 취업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전체 취업자 중 고령층(65세 이상)의 비중은 14.4%였으나, 2045년에는 26.7%까지 증가하여 2025년 대비 12.3%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청년 취업자(15~29세)와 중장년 취업자(30~64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청년 취업자 비중은 2025년 12.4%에서 2045년 8.2% ($\Delta 4.3\text{p}$)로 감소하고, 중장년 취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 73.1%에서 65.1% ($\Delta 8.0\text{p}$)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연령구조 전망]



주: 2025년까지 자료는 실적치, 2026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회예산정책처, 「NABO 인구전망: 2025~2045」

라. 재정부문

인구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는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은 현재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나, 향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상승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규모의 감소와 고령화는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연금·보건의료 등 복지지출 수요를 증가시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재정지출 수요와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간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OECD 주요국의 고령인구부양률과 국민부담률 및 사회보장부담률의 변화를 비교하여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990년 이후 OECD 주요국의 고령인구부양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 고령인구부양률은 1990년 11.4%에서 2024년 18.6%로 7.2%p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국민부담률은 30.8%에서 34.1%로 3.3%p 상승하였으며, 사회보장부담률은 7.1%에서 8.8%로 1.7%p 상승하였다. 주요국에서도 고령인구부양률의 상승과 함께 국민부담률이 대체로 상승하였으나, 국가별로 그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은 고령인구부양률이 12.1%에서 29.3%로 17.2%p 상승한 가운데 국민부담률도 27.7%에서 33.7%로 6.0%p 상승하였으며, 이탈리아 역시 고령인구부양률이 14.9%에서 24.5%로 9.6%p 상승하면서 국민부담률이 36.2%에서 42.8%로 6.6%p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부양률은 주요국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1990년 5.1%에서 2024년 19.2%로 14.1%p 상승하여 OECD 평균의 상승폭(7.2%p)을 크게 상회하였다. 같은 기간 국민부담률은 17.9%에서 25.3%로 7.4%p 상승하였으며, 사회보장부담률은 1.8%에서 7.7%로 5.9%p 상승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은 1990년 OECD 평균보다 각각 12.9%p, 5.3%p 낮았으나, 2024년에는 그 격차가 각각 8.8%p, 1.1%p로 축소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고령화와 함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국민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보여준다. 다만 고령인구부양률과 국민부담률의 변화는 국가별 재정·사회보장제도, 조세체계 및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고령화의 진전만으로 국민부담률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인구부양률이 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금·보건의료 등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증가가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는 향후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증가와 세입 기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부담률 변화 추이(OECD 주요국)]

(단위: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24년
한국	고령인구부양률	5.1	7.2	10.8	15.7	19.2
	국민부담률	17.9	20.2	21.5	26.2	25.3
	사회보장부담률	1.8	3.4	5.0	7.3	7.7
OECD 평균	고령인구부양률	11.4	12.8	14.4	17.5	18.6
	국민부담률	30.8	32.9	31.5	33.5	34.1
	사회보장부담률	7.1	8.4	8.6	9.1	8.8
미국	고령인구부양률	12.5	12.4	13.1	16.9	18.5
	국민부담률	26.0	28.3	23.4	25.5	25.6
	사회보장부담률	6.7	6.7	6.1	6.2	6.0
영국	고령인구부양률	15.7	15.8	16.4	18.5	19.0
	국민부담률	32.9	32.7	32.0	32.8	34.4
	사회보장부담률	5.6	5.5	6.1	6.8	6.1
프랑스	고령인구부양률	14.0	15.9	16.7	20.5	21.7
	국민부담률	41.5	43.7	42.2	45.2	43.5
	사회보장부담률	18.3	15.6	16.0	14.7	14.7
독일	고령인구부양률	14.9	16.4	20.6	21.9	22.6
	국민부담률	34.8	36.0	35.2	38.1	38.0
	사회보장부담률	13.0	14.1	13.5	14.8	14.9
일본	고령인구부양률	12.1	17.4	23.0	28.6	29.3
	국민부담률	27.7	25.3	26.2	32.9	33.7
	사회보장부담률	7.3	8.9	10.8	13.3	13.2
이탈리아	고령인구부양률	14.9	18.3	20.4	23.4	24.5
	국민부담률	36.2	40.1	41.7	42.7	42.8
	사회보장부담률	11.9	11.4	12.9	13.5	12.5
캐나다	고령인구부양률	11.3	12.6	14.1	17.9	19.0
	국민부담률	35.1	34.7	31.0	34.4	34.9
	사회보장부담률	4.3	4.7	4.6	4.8	5.3

주: 1. 2026년 10월 2일 OECD Data Explorer에 접속하여 작성된 자료

2. 2024년 자료가 없는 일본(국민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OECD 평균(사회보장부담률)의 수치는 2023년 자료로 대체함

자료: OECD

가. 경제·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변화 요인

고령화는 연금 수급자 증가와 의료·장기요양·돌봄 수요 확대를 통해 반복적인 재정지출 확대 압력으로 작용할 요인이다. NABO 인구전망에 따르면 2045년 취업자 수는 2,684만명으로 2025년 대비 193만명($\Delta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취업자 중 고령층 비중은 2025년 14.4%에서 2045년 26.7%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소득보장뿐 아니라 고령 친화적 일자리, 재교육, 산업안전 및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재정수요를 증가시킬 요인이다. 이에 필요한 복지지출은 지속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감안한 제도 개편과 함께 제도 간 중복성 점검, 전달체계 정비 등을 통한 효율화 방안 모색 등 지출효율화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196.5조원에서 2030년 256.7조원으로 증가할 계획이다.

분배·생활여건의 격차도 재정수요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 순자산 지니계수는 동 기간 0.612에서 0.625로 높아지며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었다. 분배지표의 개선세가 지연됨에 따라 저소득·저자산 가구의 주거비·의료비 부담과 사회보장 사각지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삶의 질 지표는 71개 중 42개가 개선되고 23개가 악화되어 일률적인 악화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안전 영역은 9개 중 6개, 교육은 6개 중 3개, 환경은 9개 중 4개 지표가 악화되었다.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험과 산업 전환도 재정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후재난은 예방·적응·복구 지출을 늘리고, 탈탄소 전환은 감축 투자와 산업·노동 전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025년 자연재난 복구비는 2조 8,686억원(잠정)으로, 국고·지방비·자체복구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는 위험 노출도와 회피 가능한 피해를 기준으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반도체 투자는 민간 주도로 확대되는 부문과 공공의 보완이 필요한 부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문을 구분하여야 한다. 재정은 기초·원천연구, 인력, 공용 기반 및 중소기업 확산에 우선 배분하고, 전력·입지·운영인력 등 선행 조건이 미비한 시설은 단계별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는 재정소요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다. 6~17세 학령인구가 2025년 503만명에서 2030년 411만명, 2045년 3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 신·증설, 교원 배치 및 운영비 수요를 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감소율만큼 교육예산을 감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소규모 학교의 고정비, 농산어촌의 접근성, 돌봄·특수교육 수요 및 교육격차 개선 필요를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등 수요 감소와 성인·재직자 재교육 수요 증가는 시기와 대상이 다르므로 별도의 소요 검증을 거쳐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

병력자원 감소도 재정소요를 낮출 수 있다. 2025년의 입영 비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신규 병력자원은 2025년 18.5만명에서 2045년 9.8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실제 확정 병력계획이 아닌 인구 변화의 조건부 추계이다. 병력 감소는 일부 급식·피복 등 인원 연동 소요의 조정 가능성을 높이지만, 숙련인력 확보, 무인·첨단체계 도입 및 유지관리 비용을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장비 구입비뿐 아니라 인건비·운영유지비 등의 비용을 비교하고, 병력구조 조정과 기존 시설 재편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한 국방 첨단화 투자 등의 재정소요 확대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자원배분 방향

재정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고령화, 산업·기후 전환 및 생활여건의 격차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수요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서비스·투자의 규모로 파악하고, 실제 예산 소요는 수혜인구, 급여·서비스 단가, 제도 변경, 기존 공급능력 및 사업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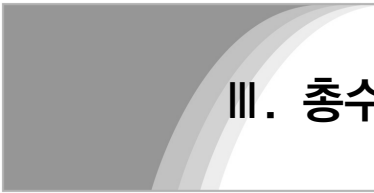
2027년 NABO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7년 실질성장률은 2.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 수준으로 전망된다. 내수가 회복되는 가운데 2027년 이후에도 경제여건의 개선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대내외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재정수요 확대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경기상황, 우선순위 등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고령화·기후위험 등에 따른 구조적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자원배분은 ① 필수서비스와 취약계층 보호, ② 민간투자를 보완하는 생산성·전환 투자, ③ 재난 예방과 안전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요가 감소하거나 성과가 낮은 기존 사업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 경기 대응은 대상·기간·종료 조건을 명확히 하고, 구조적 과제는 중기 재정소요와 성과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정수요의 변화 및 대응 방향]

수요 방향	재정수요의 변화	대응·배분의 중심
재정수요 확대 가능성	고령층 의료·돌봄, 재난 예방·복구, 취약가구 지원	필수 수요와 사각지대 우선 반영
구조 전환	AI 확산, 노동공급 감소, 병력자원 감소	인적자본·생산성·운영체계 전환
감소·조정 가능성	학령인구 감소, 중복 시설·저성과 사업	서비스 접근성 확보 후 단계적 조정
경제여건 개선 가능성에 따른 재정수요 완화	유가 안정·민간 회복 시 한시적 재정지원 수요 감소 가능성	경제지표 확인 후 정상화·종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Ⅲ. 총수입·총지출 분석 및 중기전망

가. 총수입 분석

2027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2026년 제1회 추경 대비 180.2조원(25.7%) 증가한 880.8조원으로, 국세수입은 584.4조원, 국세외수입 중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37.6조원, 258.7조원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은 2026년 제1회 추경 700.6조원에서 2030년 984.6조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증가율(4.7%)을 크게 상회한다. 이를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하면, 2027년 예산안의 국세수입은 2026년 제1회 추경 대비 168.9조원(40.7%) 증가한 584.4조원으로 총수입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세외수입 중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0.8조원(2.1%) 감소하고 기금수입은 11.9조원(4.8%)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700.6	880.8	920.5	951.8	984.6	8.9
(증가율)		(25.7)	(4.5)	(3.4)	(3.4)	
- 국세수입	415.4	584.4	606.7	625.5	644.8	11.6
(증가율)		(40.7)	(3.8)	(3.1)	(3.1)	
- 세외수입	38.4	37.6	37.9	35.1	35.6	△1.9
(증가율)		(△2.1)	(0.8)	(△7.6)	(1.6)	
- 기금수입	246.8	258.7	275.8	291.2	304.1	5.4
(증가율)		(4.8)	(6.6)	(5.6)	(4.4)	

주: 1. 2026년은 제1회 추경 기준이며, 2027년 증가율은 2026년 제1회 추경 대비임

2. 연평균 증가율은 2026년 제1회 추경 대비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1) 국세수입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전망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1.6%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이 584.4조원으로 전년대비 40.7% 증가한 후, 2028년 이후부터는 전년대비 4% 이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계획하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2026년 및 2027년에는 전년대비 높은 경제성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2028년 이후로는 명목GDP 성장률이 4.0%대로 안정¹⁾됨에 따라 국세수입 규모를 계획한 것에 기인한다.

한편,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27년도 예산안의 국세수입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할 때 172.3조원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26년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은 11.6%로 2025년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5.3%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2025년 계획의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2026년 및 2027년 국세수입의 높은 증가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2026년과 2027년의 경우, AI 산업 성장에 따른 반도체 기업의 영업실적 호조로 인한 법인세수의 높은 증가세가 전체적인 국세수입의 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법인실적의 호조가 내수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소득 및 소비여건의 개선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5년 계획과 2026년 계획의 국세수입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p)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세 수입	2025년 계획(A)	372.1	390.2	412.1	434.1	457.1		5.3
	2026년 계획(B)		415.4	584.4	606.7	625.5	644.8	11.6
	차이(B-A)		25.2	172.3	172.6	168.5		

주: 1. 연평균 증가율은 해당 계획의 계획 기간 기준임

2. 해당 계획의 첫 연도는 확정예산, 다음 연도는 예산안 기준임

3. 2026년 계획의 2026년 국세수입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이하에서는 세목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편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8년 이후부터는 국세수입의 세목별 정보가 포함되

1)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명목GDP 성장률 전망(%):

(2026년) 12.3, (2027년) 4.6, (2028년) 4.0, (2029년) 4.0, (2030년) 4.0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목별로 2026년 추경예산 대비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의 증감 추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2027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4조원으로 2026년 추경예산(415.4조원) 대비 168.9조원(40.7%) 증가한 규모로 편성²⁾되었다. 정부는 2027년도 국세수입이 반도체 호조 지속에 따른 기업실적의 증가로 인한 법인세 증가와 성과급 상승, 배당 지급 증가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2027년 소득세 예산안은 180.0조원으로, 2026년 추경예산(136.8조원) 대비 43.2조원(31.6%)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다. 정부는 소득세가 기업실적 증가로 인한 성과급 상승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배당지급 증가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득세를 세부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 예산안은 102.4조원으로 2026년 추경예산(73.2조원) 대비 29.2조원(39.9%) 증가할 것으로 편성하였다. 정부는 2027년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17.0만명(0.6%) 증가하고, 명목임금이 전년 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전제하여 고용지표 개선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배당소득세 예산안은 13.2조원으로, 2026년 추경예산(4.6조원) 대비 8.5조원(183.6%) 증가할 것으로 편성하였다. 정부는 2026년 기업실적 급증과 함께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부의 주주환원 강화 정책 등의 효과로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배당지급 규모가 확대될 것을 전제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법인세 예산안은 216.7조원으로, 2026년 추경예산(101.3조원) 대비 115.4조원(113.9%) 증가할 것으로 편성하였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하여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법인세 신고분을 중심으로 법인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부가가치세 예산안은 91.4조원으로 2026년 추경예산(86.6조원) 대비 4.8조원(5.5%) 증가할 것으로 편성하였다. 정부는 소비지표 개선 등에 따라 내수 회복세 지속을 부가가치세 증가 전망의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정부는 기타 세목에 대해서는 내수회복 등 경제성장에 따른 완만한 증가세를 반영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 및 경유 수요의 감소로 2026년 추경예산 대비 0.5조원(△3.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

2) 한편, 정부는 2026년 9월 당해연도 국세수입을 478.6조원으로 재추계하였다. 정부의 세수재추계를 기준으로 2027년 예산안은 105.8조원(22.1%) 증가한 규모이다.

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15.6조원)의 경우, 최근 사망자수 감소 및 연부연납액 감소에 따라 1.4조원(△8.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7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단위: 조원, %)

	2025 실적	2026		2027 예산안 (C)	추경예산 대비 (C-A)		정부전망 대비 (C-B)	
		추경예산 (A)	정부전망 ¹⁾ (B)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373.9	415.4	478.6	584.4	168.9	40.7	105.8	22.1
일반회계 ²⁾	361.5	398.7	455.3	564.3	165.6	41.5	109.0	23.9
내국세	330.2	368.1	424.3	529.3	161.2	43.8	105.0	24.7
1. 소득세	130.5	136.8	152.4	180.0	43.2	31.6	27.6	18.1
- 종합소득세	21.3	22.6	22.7	24.3	1.6	7.3	1.6	6.9
- 양도소득세	19.9	20.4	26.7	22.9	2.5	12.3	△3.7	△14.0
- 근로소득세	68.4	73.2	77.7	102.4	29.2	39.9	24.8	31.9
- 배당소득세	4.6	4.6	8.6	13.2	8.5	183.6	4.6	53.7
2. 법인세	84.6	101.3	136.4	216.7	115.4	113.9	80.3	58.9
3. 상속증여세	16.5	17.0	18.5	15.6	△1.4	△8.0	△2.9	△15.4
4. 부가가치세	79.2	86.6	89.0	91.4	4.8	5.5	2.4	2.6
5. 개별소비세 ²⁾	8.5	8.9	9.0	7.5	△1.4	△15.9	△1.5	△16.9
6. 증권거래세	3.4	10.6	12.4	10.7	0.0	0.9	△1.8	△14.3
7. 인 지 세	0.8	0.8	0.8	0.8	0.0	2.8	0.0	5.2
8. 과년도수입	6.8	6.1	5.8	6.6	0.5	8.6	0.8	14.5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3.0	12.4	12.6	△0.5	△3.6	0.2	1.4
관세 ²⁾	7.6	7.2	8.1	8.7	1.5	20.6	0.6	7.8
교육세	5.7	5.6	5.4	7.5	1.8	32.0	2.0	37.3
종합부동산세	4.7	4.6	5.1	6.2	1.6	34.8	1.2	23.4
특별회계 ²⁾	12.4	16.8	23.3	20.1	3.3	19.8	△3.2	△13.8
주세	3.2	3.1	3.0	3.0	△0.2	△5.7	△0.0	△1.1
농어촌특별세	9.2	13.6	20.3	16.1	2.4	17.9	△4.2	△20.9
기타 ²⁾	-	-	-	1.1	1.1	-	1.1	-

주: 1) 2026년 9월 정부의 재추계 결과

2) 2027년 예산안부터 지역필수료 특별회계의 신설로 개별소비세(담배분)의 55%와 관세(담배분)가 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이를 특별회계의 기타로 표시하고, 일반회계의 개별소비세 및 관세는 특별회계 편성분을 제외하고 표시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국세외수입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외수입 전망은 2026년 추경 대비 향후 연평균 1.9%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2025년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1.0%보다 2.9%p 낮은 수준이다.

2026년 계획에 따른 2027년도 예산안의 세외수입은 2025년 계획과 비교할 때 0.9조원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8년에도 2025년 계획 대비 0.9조원 많은 37.9조원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2029년에는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8조원(△7.6%) 감소한 35.1조원으로 계획되어 2025년 계획보다 4.0조원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26년 계획에 따른 세외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국세수입이나 기금수입에 비해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세외수입의 과거 실적치의 증가 추세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 계획과 2026년 계획의 세외수입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비 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세외 수입	2025년 계획(A)	37.6	37.4	36.7	37.0	39.1		1.0
	2026년 계획(B)		38.4	37.6	37.9	35.1	35.6	△1.9
	차이(B-A)		1.0	0.9	0.9	△4.0		

주: 1. 연평균 증가율은 해당 계획의 계획 기간 기준임

2. 해당 계획의 첫 연도는 확정예산, 다음 연도는 예산안 기준임

3. 2025년 계획의 2025년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 기준, 2026년 계획의 2026년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기준(본예산과 동일)임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7년도 예산안의 세외수입은 37.6조원으로 2026년 제1회 추경(38.4조원) 대비 0.8조원(2.1%) 감소한 규모인데, 경상이전수입과 관유물매각대, 용자및전대차 관원금회수 수입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경상이전수입은 11.3조원으로 전년대비 3.0조원(20.9%) 감소하는데, 기타특별회계의 법정부담금(△1.7조원)과 기타경상이전수입(△1.2조원)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 관유물매각대는 국세물납주식매각대가 2026년 1.1조원에서 2027년 0.1조원으로 1.0조원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0.5조원(26.2%) 감소한 1.4조원이 편성되었고,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는 기타특별회

계의 민간용자원금회수가 줄어들어 전년대비 0.6조원(61.6%) 감소한 0.3조원이 편성되었다.

수입이 증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7년 재산수입 예산안은 13.1조원으로 2026년 10.0조원 대비 3.2조원(31.6%) 증가하는데, 한국은행잉여금이 7.3조원에서 10.9조원으로 3.6조원(49.7%) 증액편성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7년도 예산안 수입관별 세외수입 전년대비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6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세외수입	38.4	38.4	37.6	△0.8	△2.0
경상이전수입	14.3	14.3	11.3	△3.0	△20.9
관유물매각대	1.9	1.9	1.4	△0.5	△26.2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7.6	7.6	7.6	0.1	1.0
수입대체경비수입	0.3	0.3	0.3	△0.0	△1.4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0.9	0.9	0.3	△0.6	△61.6
재산수입	10.0	10.0	13.1	3.2	31.6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5	3.5	3.6	0.1	1.5

주: 1. 2026년 본예산은 국회 확정예산, 추경은 제1회 추경(국회 확정) 기준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준이며, 단수조정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금수입 전망은 2026년 추경예산 대비 향후 연평균 5.4%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2025년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4.2%보다 1.2%p 높은 수준인데,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³⁾과 고용보험기금 가입자 확대 및 임금 상승 등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을 중심으로 기금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의 기금수입은 258.7조원으로 2026년 제1회 추경(246.8조원) 대비 11.9조원(4.8%)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5년 계획상 2027년 기금수입(256.2조원)보다 2.5조원 많은 규모이다.

3) 「국민연금법」 개정(2025.3.)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나. NABO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¹⁾

(1) NABO 중기재정전망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총수입은 2026년 784.0조원에서 2030년 1,012.1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중 국세수입의 경우, 2026년 480.5조원에서 2030년 673.3조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6년 국세수입은 480.5조원으로, 반도체 기업 등의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내수회복에 따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증가하여 2025년(373.9조원) 대비 106.6조원(2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7년 국세수입은 593.7조원으로, 반도체 업종의 경기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세도 확대되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2026년 대비 113.2조원(2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2028년 이후 국세수입은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여건의 개선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세목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NABO 중기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784.0	890.2	933.6	971.9	1,012.1	6.6
(전년대비 증가율)	(23.0)	(13.5)	(4.9)	(4.1)	(4.1)	
국세수입	480.5	593.7	621.9	647.7	673.3	8.8
(전년대비 증가율)	(28.5)	(23.5)	(4.8)	(4.2)	(4.0)	
국세외수입	303.5	296.5	311.7	324.2	338.7	2.8
(전년대비 증가율)	(15.2)	(△2.3)	(5.1)	(4.0)	(4.5)	

주: 2026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25회계연도 결산 대비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yjc@assembly.go.kr, 6788-4655)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1) 본 장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2026.10.)의 주요 내용과 전망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의무지출 관련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지만, 전망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변수와 전망모형 등이 정부와 달라 전망 결과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차이가 존재한다.

NABO 중기재정전망의 총수입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5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53.6조원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NABO가 정부보다 국세수입을 향후 5년 동안 140.3조원 크게 전망한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정부의 세수 재추계(2026.9.30.) 기준으로 비교하면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6년 국세수입 차이는 1.9조원으로 작아지며, 총수입은 5년 동안 NABO가 정부보다 90.5조원, 국세수입은 77.1조원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NABO 중기재정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총수입 차이	83.4	9.4	13.1	20.1	27.5	153.6
국세수입 차이	65.1	9.3	15.2	22.2	28.5	140.3
국세외수입 차이	18.3	0.1	△2.0	△2.1	△1.0	13.4

주: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 전망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뺀 값으로, 양(+)의 값이면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변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2030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반도체 호황, 경제 성장세 지속 및 세입기반 확충 등 국세수입 여건 개선으로 안정세를 보이며 21.9~22.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동 기간 국민부담률은 29.8~29.9%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은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국민부담률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상승은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비중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26년 추경 기준 17.8%에서 2027년 22.5%로 상승한 이후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며 2030년 21.9%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국민부담률의 경우 2026년 25.0%에서 2027년 29.8%, 2028~2029년 29.9%로 상승한 이후 2030년 29.8%를 나타낼 전망이다. 2027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상승은 반도체 호황, 경제여건 개선 등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기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전망]

(단위: %)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본예산	추경				
조세부담률	17.0	17.8	22.5	22.4	22.2	21.9
국민부담률	24.1	25.0	29.8	29.9	29.9	29.8

자료: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 25.1% 대비 7.5%p 낮은 17.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미국 19.6%, 일본 20.5%, 영국 28.3%, 프랑스

28.8% 대비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OECD 평균 34.1% 대비 8.8%p 낮은 수준이다. 또한 미국 25.6%, 일본 33.7%, 영국 34.4%, 프랑스 43.5% 대비로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국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17.6	19.6	20.5	28.3	28.8	25.1
국민부담률	25.3	25.6	33.7	34.4	43.5	34.1

주: 1. OECD 평균의 경우 미제출국가(호주, 일본)는 2023년 수준 가정
 2. 2024년 기준
 자료: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OECD Revenue Statistics 2025

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분석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2026년 제1회 추경 753.0조원 대비 67.9조원 (9.0%) 증가한 820.9조원이며, 이 중 의무지출은 426.8조원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2026년 제1회 추경 대비 0.8%p 하락한 52.0%로 나타난다.

2026년~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의 경우 총지출은 2026년 추경 대비 67.9조원 증가한 820.9조원이며, 이를 예산·기금별로 구분하면, 예산지출이 505.0조원(총지출의 61.5%), 기금지출이 315.8조원(총지출의 38.5%)으로 예산지출 비중은 전년대비 5.4%p 하락하며 기금지출의 비중은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반면 총지출을 지출성격별로 구분하면, 2027년 예산안의 의무지출은 426.8조원(총지출의 52.0%)이고 재량지출은 394.1조원(총지출의 48.0%)으로 의무지출의 비중이 2026년 제1회 추경 대비 0.8%p 하락할 계획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본예산	추경				
재정지출	727.9	753.0	820.9	894.6	957.4	1,005.2
－ 예산지출	481.4	504.0	505.0	556.9	594.8	616.7
(비중)	(66.1)	(66.9)	(61.5)	(62.2)	(62.1)	(61.3)
－ 기금지출	246.5	249.0	315.8	337.8	362.6	388.5
(비중)	(33.9)	(33.1)	(38.5)	(37.8)	(37.9)	(38.7)
－ 의무지출	387.7	397.5	426.8	471.9	511.8	537.9
(비중)	(53.3)	(52.8)	(52.0)	(52.7)	(53.5)	(53.5)
－ 재량지출	340.2	355.6	394.1	422.8	445.5	467.3
(비중)	(46.7)	(47.2)	(48.0)	(47.3)	(46.5)	(46.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최근 10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지출 계획과 실적치를 분석해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차년도, 즉 예산안에서 제시한 총지출 계획에 비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초과지출이 발생하였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그 영향으로 총지출이 계획 대비 감소하였다. 한편 2025년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계획 대비 초과지출이 발생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지출 전망 및 실적치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15 계획	384.7	386.7	396.7	406.2	416.0						
2016 계획		398.6	400.7	414.3	428.4	443.0					
2017 계획			410.1	429.0	453.3	476.7	500.9				
2018 계획				432.7	470.5	504.6	535.9	567.6			
2019 계획					475.4	513.5	546.8	575.3	604.0		
2020 계획						470.7	483.0	505.4	527.8	552.2	
2021 계획							604.9	604.4	634.7	663.2	691.1
2022 계획								679.5	639.0	669.7	699.2
2023 계획									638.7	656.9	684.4
2024 계획										656.6	677.4
2025 계획											703.3
실적치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82.4	610.7	638.0	684.1

주: 1. 음영 부분은 계획보다 초과지출되었던 연도를 의미하며, 굵은 글씨는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의 2차년도) 수치를 의미함.

2. 실적치는 결산 기준임.

자료: 기획예산처, 각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자료

(1) 지출성격별

2027년 예산안은 의무지출의 증가폭이 재량지출을 하회하며 의무지출 비중이 하락하였으나, 이후 2030년까지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재량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의무지출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의무지출 중 이자지출의 증가율이 연평균 9.8%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자지출의 확대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을 지출성격별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의무지출은 426.8조원으로 2026년 제1회 추경 397.5조원 대비 7.4% 증가하였으며, 재량지출은 394.1조원으로 2026년 제1회 추경 355.6조원 대비 10.8% 증가하여 재량지출이 의무지출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량지출 비중이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47.2%에서 2027년 48.0%로 0.8%p 높아졌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량지출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1%인 반면, 의무지출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9%로 전망되며,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7.5%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추경 기준 52.8%에서 2030년 53.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총지출 (증가율)	727.9 -	753.0 -	820.9 (9.0)	894.6 (9.0)	957.4 (7.0)	1,005.2 (5.0)	7.5
- 의무지출 (비중)	387.7 (53.3)	397.5 (52.8)	426.8 (52.0)	471.9 (52.7)	511.8 (53.5)	537.9 (53.5)	7.9
- 재량지출 (비중)	340.2 (46.7)	355.6 (47.2)	394.1 (48.0)	422.8 (47.3)	445.5 (46.5)	467.3 (46.5)	7.1

주: 연평균 증가율은 2026년 추경 기준으로 산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최근 10년간 추이를 결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은 2023년을 제외하고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2023년에는 세수결손 등으로 총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모두 전년대비 지출 규모가 감소하였다.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총지출이 7.2% 증가한 가운데 의무지출은 7.6%, 재량지출은 6.9% 증가하였다.

의무지출은 2016년 182.8조원에서 2025년 368.5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8.1% 증가하였으며, 재량지출은 2016년 201.9조원에서 2025년 315.4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5.1%로 나타나 의무지출보다 연평균 증가율이 낮았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2019년까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량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로 현재까지 총지출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까지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재량지출에 비해 작았으나, 2023년에는 지출구조조정으로 인한 재량지출의 감소폭 증가로 인하여 의무지출의 비중이 재량지출을 역전하였으며, 2025년까지 의무지출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재량지출이 감소하면서 의무지출의 총지출 대비 비중이 2022년 48.8%에서 53.2%로 상승하였으며, 재량지출은 49.5%에서 46.6%로 하락하였다.

[2016~2025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현황]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82.4	610.7	638.0	684.1	6.6
- 의무지출	182.8	198.9	214.4	239.6	252.8	279.5	332.7	325.1	342.5	368.5	8.1
(비중)	47.5	48.9	49.4	49.4	46.0	46.5	48.8	53.2	53.7	53.9	
- 재량지출	201.9	203.6	213.1	234.4	296.8	319.0	338.1	284.6	295.1	315.4	5.1
(비중)	52.4	50.1	49.1	48.3	54.0	53.1	49.5	46.6	46.3	46.1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특히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복지분야 법정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및 기타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의무지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 중 이자지출은 2026년 추경 기준 33.7조원에서 2030년 48.9조원으로 45.2%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9.8%로 의무지출 중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상 기조, 시중 금리 상승세 등을 고려 시 증가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2026년 추경 기준 154.4조원에서 2030년 217.0조원으로 40.5%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8.9%로 의무지출 전체 연평균 증가율 7.9%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2026년 추경 기준 196.5조원에서

2030년 256.7조원으로 계획되었으며,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의무지출 전체 연평균 증가율(7.9%)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2026~2030년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복지분야 법정지출	196.3	196.5	213.3	226.1	240.8	256.7	6.9
지방이전재원	144.9	154.4	159.6	188.7	210.6	217.0	8.9
이자지출	33.6	33.7	40.0	42.6	45.7	48.9	9.8
기타 의무지출	12.9	12.8	13.9	14.5	14.8	15.3	4.6
합 계	387.7	397.5	426.8	471.9	511.8	537.9	7.9

주: 연평균 증가율은 2026년 추경예산 대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결산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의무지출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2016년 81.4조원에서 2025년 184.8조원으로 10년간 103.4조원 증가(연평균 증가율 9.5%)하여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자지출의 경우 2016년 14.9조원에서 2025년 31.1조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하여 복지분야 법정지출, 기타의무지출에 이어 세 번째로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이전재원은 2016년 81.1조원에서 2025년 141조원으로 10년간 59.9조원 증가하였고 연평균 6.3% 늘어났다. 기타 의무지출은 2016년 5.4조원에서 2025년 11.6조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하였다.

[2016~2025년 의무지출 유형별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복지분야 법정지출	81.4	86.4	94.5	108.6	122.3	132.1	143.5	157.5	170.3	184.8	9.5
지방이전 재원	81.1	91.1	99.4	111.4	107.8	121.2	155.7	136.9	133.3	141.0	6.3
이자지출	14.9	14.8	15.1	14.6	15.6	16.2	19.2	23.6	28.3	31.1	8.5
기타 의무지출	5.4	6.6	5.5	5.0	7.1	10.0	14.2	7.2	10.6	11.6	8.9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최근 10년간 의무지출 유형별 현황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의무지출의 유형별 전망을 비교하면, 의무지출 유형 중에서도 이자지출의 증가율이 최근 10년에 비해 향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자지출은 2016~2025년 기간 연평균 8.5% 증가하였으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자지출은 2026~2030년 기간 연평균 9.8% 증가하며 의무지출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자지출의 급격한 증가는 최근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이 확대되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세,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을 고려 시 이자비용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의무지출의 4가지 유형 중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소득 재분배 등 수혜대상과 목적성이 명확하고, 지방이전재원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지급하는 용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이자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 상환액이 대표적인데, 이는 국고채 발행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특성을 가진다.²⁾

의무지출 전망을 유형별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에서는 생계급여(16.6%), 의료급여(11.7%), 주거급여(13.2%), 국민연금(7.9%), 아동수당(21.2%) 등의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이 전체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부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고용·노동부문의 구직급여 등의 경우 각각 연평균 4.0%, 2.1%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복지분야 법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대비 다소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②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14.9%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전망된다. ③ **이자지출**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10.9%로 높아 이자지출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은 9.9%³⁾로 나타난다.

2) 국고채 발행 증가에 따라 이자지출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국고채 만기구조에 대한 적정 관리 및 시장 수요를 감안한 발행 물량 조정 등을 통하여 이자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2026~2030년 이자지출 전체 연평균 증가율 9.9%는 2026년 기준이 본예산 기준으로 추경 기준 9.8%와 차이가 존재한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	1,962,816	2,133,001	2,260,634	2,407,666	2,566,615	6.9
○ 기초생보	224,665	271,742	301,490	338,350	378,352	13.9
- 생계급여	91,727	108,004	127,389	147,832	169,825	16.6
- 의료급여	98,400	122,973	129,288	140,675	153,056	11.7
- 주거급여	32,309	38,328	42,375	47,369	52,976	13.2
- 교육·해산장제	2,229	2,437	2,438	2,474	2,495	2.9
○ 건강보험	137,991	149,698	156,760	164,236	171,899	5.6
- 가입자지원(일반)	107,820	117,923	124,009	130,330	137,445	6.3
- 가입자지원(기금)	19,351	20,116	20,576	21,191	21,175	2.3
- 공무원·교직원·국가부담금	10,820	11,659	12,176	12,715	13,279	5.3
○ 4대 연금	939,334	1,004,018	1,056,432	1,133,219	1,211,239	6.6
- 국민연금	545,085	594,767	625,637	681,423	737,652	7.9
- 공무원연금	286,455	296,124	310,797	326,135	342,225	4.5
- 사학연금	60,699	64,485	68,319	71,740	75,130	5.5
- 군인연금	47,095	48,642	51,679	53,921	56,232	4.5
○ 노인부문	257,227	282,565	310,223	320,374	331,140	6.5
- 기초연금	231,378	256,530	282,970	291,649	300,862	6.8
- 노인장기요양보험	25,849	26,035	27,253	28,725	30,278	4.0
○ 아동·보육부문	48,547	51,968	52,001	50,087	53,616	2.5
- 영유아보육료 지원	23,726	22,695	11,787	1,159	-	-
- 아동수당	24,822	29,272	40,214	48,927	53,616	21.2
○ 고용·노동부문	196,839	203,046	209,104	218,972	229,584	3.9
- 구직급여	115,376	116,799	118,498	122,052	125,503	2.1
- 산재보험급여	81,463	86,246	90,606	96,920	104,081	6.3
○ 보호부문	56,456	61,478	60,818	61,733	62,691	2.7
- 보상금	37,175	39,764	40,559	41,371	42,198	3.2
- 참전명예수당	5,978	5,934	5,326	5,060	4,807	△5.3
- 6.25자녀, 고엽제 등 수당	5,699	6,288	6,265	6,316	6,370	2.8
- 보훈·위탁병원 진료	7,604	9,492	8,668	8,986	9,316	5.2
○ 기타	101,756	108,487	113,806	120,695	128,094	5.9

(단위: 억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② 지방이전재원	1,449,180	1,596,154	1,886,983	2,105,570	2,169,819	10.6
○ 지방교부세	693,550	771,899	1,010,100	1,171,012	1,207,405	14.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6,687	788,718	842,674	901,226	926,810	6.6
○ (추가)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38,943	35,537	34,209	33,332	35,605	△2.2
③ 이자지출	336,078	399,765	425,833	456,972	489,482	9.9
○ 공공자금관리기금	291,639	350,163	376,739	407,195	441,167	10.9
○ 주택도시기금	16,867	21,254	22,583	23,502	21,987	6.9
○ 기타	27,573	28,347	26,511	26,276	26,329	△1.1
④ 기타 의무지출	128,566	138,647	145,066	148,234	152,631	4.4
○ 공익기능증진직불기금	29,703	30,615	33,291	34,792	36,723	5.4
○ 유엔 PKO 예산분담금	1,777	1,558	1,720	1,603	1,489	△4.3
○ 기타	97,086	106,473	110,055	111,839	114,418	4.2

주: 2026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소관부처별

2027년 예산안 총지출의 2026년 대비 증감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는 각각 미래대응기금 신설, 기초생활보장 등 예산안의 규모가 증가하여 확대된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11개 부처의 경우 총지출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027년 예산안 기준 전년대비 총지출 규모를 소관부처별로 살펴보면, 대다수 부처에서 전년대비 총지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조 5,140억원), 중소벤처기업부(△1조 9,600억원), 고용노동부(△1조 7,950억원), 행정안전부(△1조 6,900억원) 등 11개 부처의 총지출 예산안이 2026년 추경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지출 감소는 2027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4,430억원 감액 등에 일부 기인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창업활성화지원 예산 7,139억원, 성장안정자금 예산 2,752억원 감액 등에 기인한다. 고용노동부의 총지출 규모 감소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이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동사업 예산 9,080억원이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하며, 행정안전부의 경우 재난복구비(보조) 사업이 8,100억원 감액된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 대비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증가한 부처에는 기획예산처(전년대비 46조 1,760억원 증가), 보건복지부(전년대비 10조 9,290억원 증가), 국방부(전년대비 2조 8,100억원 증가)가 있다. 기획예산처의 총지출 규모 증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이 45조 3,858억원 순증한 것에 주로 기인하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관련 급여가 2026년 추경 대비 3조 8,485억원 증가하였다.

증가율을 기준으로는 기획예산처(421.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96.8%), 원자력안전위원회(27.2%) 순으로 전년대비 2027년 예산안 총지출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7년도 예산안 기준 부처별 총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148조 7,7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교육부(112조 6,650억원), 행정안전부(84조 7,040억원), 국토교통부(64조 7,160억원), 기획예산처(57조 1,200억원), 국방부(50조 420억원), 재정경제부(39조 7,220억원), 고용노동부(36조 2,970억원) 순으로 예산 규

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범죄수사청(4,720억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30억원)의 예산은 2027년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 예산안 부처별 총지출 전년대비 현황]

(단위: 십억원, %)

구 분	2026예산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총지출	727,904	753,073	820,925	67,852	9.0
교육부	106,361	111,173	112,665	1,491	1.3
행정안전부	76,906	86,394	84,704	△1,690	△2.0
국토교통부	62,807	63,027	64,716	1,689	2.7
고용노동부	37,676	38,093	36,297	△1,795	△4.7
중소벤처기업부	16,523	18,214	16,254	△1,960	△10.8
농림축산식품부	20,136	20,514	21,029	516	2.5
기후에너지환경부	21,759	22,374	23,087	712	3.2
보건복지부	137,495	137,841	148,770	10,929	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762	23,818	21,305	△2,514	△10.6
산업통상부	9,434	10,532	13,257	2,725	25.9
재정경제부	34,303	38,759	39,722	963	2.5
해양수산부	7,357	7,501	8,014	513	6.8
문화체육관광부	7,856	8,317	8,650	333	4.0
인사혁신처	30,304	30,304	31,263	959	3.2
산림청	3,026	3,028	3,158	130	4.3
외교부	3,615	3,617	3,703	86	2.4
성평등가족부	1,968	1,968	1,914	△55	△2.8
국가유산청	1,497	1,499	1,665	166	11.1
우주항공청	1,120	1,120	903	△218	△19.4
농촌진흥청	1,139	1,139	1,213	74	6.5
경찰청	14,262	14,262	14,983	721	5.1
국가보훈부	6,687	6,688	7,219	531	7.9
통일부	1,245	1,245	1,255	10	0.8
금융위원회	2,153	2,153	1,299	△854	△39.7
법무부	4,705	4,705	5,406	700	14.9
질병관리청	525	525	569	43	8.2
식품의약품안전처	832	832	883	51	6.1
기상청	549	549	616	67	12.2

(단위: 십억원, %)

구 분	2026예산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식재산처	631	640	711	70	11.0
원자력안전위원회	104	104	133	28	27.2
기획예산처	10,191	10,945	57,120	46,176	421.9
대법원	2,507	2,507	2,648	140	5.6
소방청	336	336	371	35	10.3
국회	810	810	848	38	4.7
해양경찰청	2,088	2,088	2,229	141	6.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73	74	92	19	25.2
관세청	690	690	728	39	5.6
국가데이터처	457	457	422	△35	△7.7
국세청	2,098	2,311	2,481	170	7.4
새만금개발청	203	203	217	14	6.8
병무청	518	518	525	7	1.4
공정거래위원회	189	189	225	36	19.0
조달청	296	297	372	75	25.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89	289	568	279	96.8
재외동포청	113	113	137	24	2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73	73	84	11	15.0
국민권익위원회	112	112	141	29	2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85	485	442	△43	△8.9
국무조정실	853	853	916	63	7.4
법제처	61	61	70	9	15.6
국가교육위원회	11	11	12	0	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7	37	41	4	9.5
국가인권위원회	44	44	46	2	4.9
헌법재판소	62	62	71	9	14.0
감사원	144	144	149	5	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0	30	21	△9	△30.4
국방부	47,232	47,232	50,042	2,810	5.9
방위사업청	19,954	19,954	22,711	2,757	13.8
국가정보원	961	961	1,078	117	12.2
대통령경호처	132	132	136	4	2.7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05	105	127	21	20.3

(단위: 십억원, %)

구 분	2026예산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3	13	-	△13	순감
중대범죄수사청	-	-	472	472	순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	23	23	순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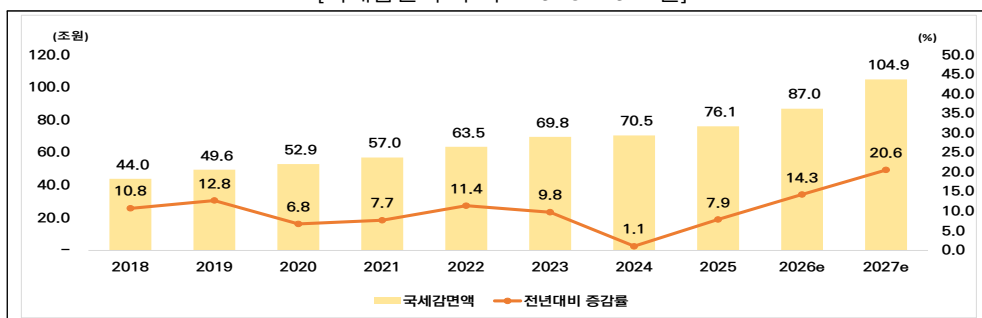
나. 조세지출 분석 및 전망

(1) 조세지출 규모 추이

「조세지출예산서」는 개별 조세지출 항목에 대하여 16대 예산분류기준⁵⁾에 따른 정보를 제시하고, 이를 분야별로 집계하고 있다. 2027년 조세지출 예산 기준으로 16대 예산분야 중 국세 감면 규모가 큰 상위 3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38.3조원), 사회복지(29.9조원), 보건(14.3조원) 분야이다.

최근 10년(2018~2027년) 동안 우리나라 국세감면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4.0조원이던 국세감면액은 2019년 근로·자녀장려세제 확대, 고용지원세제 강화 등으로 인해 50조원 규모까지 확대되었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확대 등에 따라 2022년 60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증가하였다. 이후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인상을 통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공제대상 근로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규모 증가 등으로 국세감면액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6년 국세감면액의 경우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인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증가하여 87.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7년 또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국세감면액이 최초로 100조원을 초과한 104.9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액 추이: 2018~2027년]



주: 2026년은 잠정치, 2027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김주현 추계세제분석관(kjh@assembly.go.kr, 6788-4836)

5) 16대 분야는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장·관·항에서 분야·부문·프로그램으로 전환된 예산의 기본체계로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활용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재정」, 2024.5.)

국세수입 총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302.7조원에서 2019년 소폭 증가하였다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303.7조원까지 감소한 이후,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으로 인해 2022년 국세수입이 422.9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 및 2024년의 경우 법인 실적 악화로 인해 2022년 대비 국세수입 총액이 하락하였다. 이후 법인 실적이 반등하며 2025년 국세수입총액 규모는 400조원대를 회복하였으며, 2026년에는 444.8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2027년의 경우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입 증가로 인해 국세수입총액이 615.3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 추이: 2018~2027년]

(단위: 조원, %)

	'18	'19	'20	'21	'22	'23	'24	'25	'26 ^e	'27 ^e	연평균 증가율
국세 감면액	44.0	49.6	52.9	57.0	63.5	69.8	70.5	76.1	87.0	104.9	10.1
국세수입 총액 ¹⁾	302.7	306.7	303.7	364.0	422.9	370.4	365.7	402.1	444.8	615.3	8.2

주: 1) 국세수입 총액은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산한 금액

1. 국세감면액은 2026년은 잠정치, 2027년은 전망치

2. 국세수입 총액은 2026년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7년은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국세감면을 추이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 규모의 관리를 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규정하고,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 평균+0.5%p)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정부가 제시한 2027년 국세감면율은 14.5%로, 2026년 잠정치 기준 국세감면율(16.3%) 대비 1.8%p 하락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감면율이 하락하는 것은 국세수입총액 증가에서 기인한다. 2027년 국세감면액은 104.9조원으로 2026년 잠정치(87.0조원)보다 17.9조원(2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세수입 총액이 2026년 444.8조원에서 2027년 615.3조원으로 170.6조원(38.3%) 증가함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7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6.6%로, 정부 전망치인 14.5%가 법정한도를 2.1%p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상 국세감면율 추이〕

(단위: 조원, %, %p)

구 분	2025 실적	2026 잠정(A)	2027 전망(B)	전년대비(B-A)	
				증감액	증감률
국세감면액(A)	76.1	87.0	104.9	17.9	20.6
국세수입 총액1)(B)	402.1	444.8 ²⁾	615.3 ²⁾	170.6	38.3
국세감면율[A/(A+B)]	15.9	16.3	14.5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3)	15.5	16.4	16.6	-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

2) 국세수입 총액의 경우 2026년은 정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7년 정부 국세수입예산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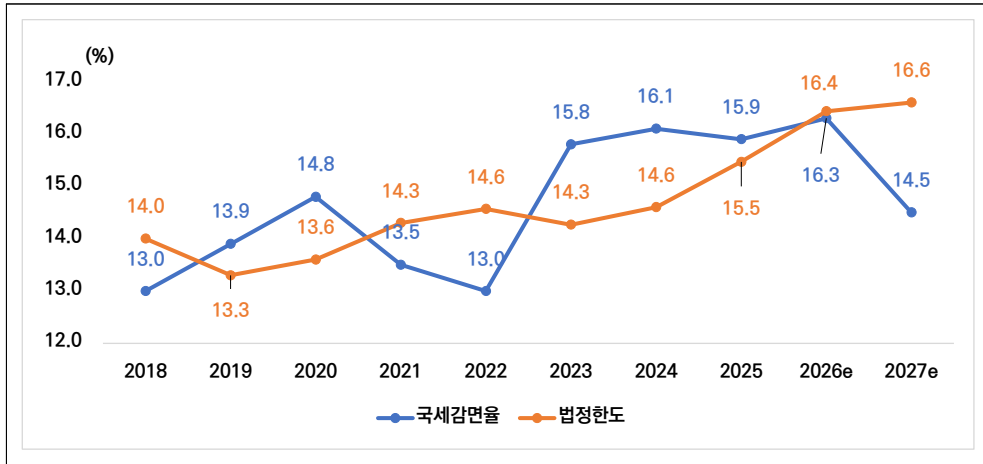
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최근 10년(2018~2027년) 동안 국세감면율 추이는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23년 국세감면율이 15.8%로 전년대비 2.8%p 증가한 후 최근 4년 동안 16% 내 외를 유지하였다. 2027년의 경우 국세수입총액 증가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14.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2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였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였다. 2026년에는 국세감면율이 상승하나 법정한도를 하회하고, 2027년에는 국세감면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총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법정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 및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추이: 2018~2027년]



주: 2026년은 잠정치, 2027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조세지출 세부 운용 현황

① 예산분류 기준

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24년 9월 이후 조세지출 분류체계를 예산안·중기재정운용계획의 12대 분야로 변경하였고, 변경된 분류 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통계를 2024년도부터 제시하였다. 12대 예산분야 분류의 경우, 기존 16대 예산분야의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가 ‘보건·복지·고용’으로 통합되었고,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SOC’로 통합되었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신설된 ‘R&D’ 항목으로 분류되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 R&D 관련 항목은 ‘R&D’ 분류로 중복하여 계상된다.

2027년 조세지출 예산 기준으로 12대 예산분야 중 국세 감면 규모가 큰 상위 분야는 보건·복지·고용(44.2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38.3조원), 일반·지방행정(11.3조원)이다. 2027년 국세감면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로 62.3% 증가하였으며, R&D 분야 역시 51.4%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2대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추이: 2024~2027년]

(단위: 조원, %)

연번	분류	2024 (실적)	2025 (실적)	2026 (잠정)	2027 (전망)	연평균 증감률
1	일반·지방행정	9.4	10.0	10.4	11.3	6.3
2	공공질서·안전	0.0	0.0	0.0	0.0	-
3	외교·통일	0.001	0.001	0.001	0.001	0.0
4	국방	0.0	0.0	0.0	0.0	0.4
5	교육	1.0	1.0	1.1	1.2	5.9
6	문화·체육·관광	0.3	0.4	0.4	0.3	10.2
7	환경	2.1	2.5	3.2	2.9	11.1
8	보건·복지·고용	36.5	38.6	41.6	44.2	6.6
9	농림·수산·식품	6.0	5.8	5.6	5.7	△1.6
10	SOC	1.1	1.1	1.2	0.9	△5.3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1	16.6	23.6	38.3	39.4
12	R&D ¹⁾	3.0	4.2	7.0	10.5	52.2
(16대 분야 기준) 전체 ²⁾		70.5	76.1	87.0	104.9	14.2

주: 1)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여타 분야 중 R&D 관련 조세지출항목을 중복계상

2) 전체값은 12대 예산분류가 아닌 16대 예산분류를 기준으로 한 값으로, 12대 분야별 조세지출 값을 합하는 경우 이를 상회할 수 있음

1. 2026년은 잠정치, 2027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세목별 분류

세목별 국세감면액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3대 세목의 국세감면액이 2027년 전망치 기준 99.4조원으로 2026년 잠정치 81.5조원 대비 17.9조원(22.0%)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주로 소득세와 법인세 국세감면 규모 확대에 기인한다. 특히 법인세 국세감면액이 2026년 18.5조원에서 2027년 32.8조원으로 14.3조원(77.3%)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분을 크게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세목별로 조세지출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2027년 소득세 분야의 국세감면액은 53.5조원으로, 2026년 잠정치 49.4조원 대비 4.1조원(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국세감면액은 2018년 24.7조원에서 2027년 53.5조원으로 확대되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9.0%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조세지출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56.2%에서 2027년 50.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3대 세목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할 전망이다.

법인세 분야 국세감면액은 2027년 32.8조원으로, 2026년 잠정치 18.5조원 대비 14.3조원(7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국세감면액은 2018년 8.2조원에서 2027년 32.8조원으로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6.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2027년 법인세 국세감면 증가폭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3대 세목 중 법인세가 전체 조세지출 증가를 가장 크게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 분야의 국세감면액은 2027년 13.1조원으로, 2026년 잠정치 13.7조원 대비 0.6조원(4.4%) 감소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국세감면액은 2018년 8.6조원에서 2027년 13.1조원으로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7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국세감면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 국세감면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 조세지출액 추이: 2018~2027년]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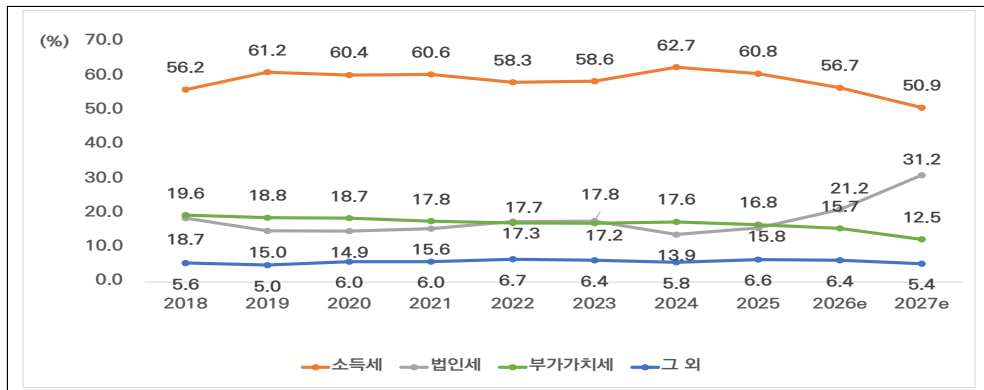
구분		2018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감률
소득세		24.7	34.6	37.0	40.9	44.2	46.3	49.4	53.5	9.0
법인세		8.2	8.9	11.3	12.4	9.8	12.1	18.5	32.8	16.6
부가가치세		8.6	10.2	11.0	12.0	12.4	12.8	13.7	13.1	4.8
그 외		2.5	3.4	4.2	4.5	4.1	5.0	5.5	5.6	9.5
전체		44.0	57.0	63.5	69.8	70.5	76.1	87.0	104.9	10.1
3대 세목	합계 (조원)	41.5	53.6	59.3	65.3	66.4	71.1	81.5	99.4	10.2
	비중 (%)	94.4	94.0	93.3	93.6	94.2	93.4	93.7	94.7	-

주: 2026년은 잠정치 및 2027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7년 3대 세목의 조세지출 99.4조원은 같은 해 전체 조세지출 104.9조원의 94.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소득세는 53.5조원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31.2% 및 1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조세지출 내 3대 세목의 비중 추이를 보면, 소득세는 2018년 56.2%에서 2027년 50.9%로 낮아지는 반면, 법인세는 2018년 18.7%에서 2027년 31.2%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역시 2018년 19.6%에서 2027년 12.5%로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 조세지출액 비중 추이: 2018~2027년]



주: 2026년은 잠정치, 2027년은 전망치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다. NABO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¹⁾

(1) NABO 중기재정전망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총지출은 2026년 756.5조원에서 2030년 1,035.8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연평균 9.1%)과 재량지출의 지속적인 확대(연평균 7.1%)에서 기인한다. 먼저,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제도의 성숙 및 수급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2026년 94.9조원에서 2030년 129.6조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제도 개편 및 국세수입·명목GDP의 높은 증가세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6년 154.4조원에서 2030년 234.7조원으로 연평균 1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로 아동수당(22.2%), 국민기초생활보장(13.0%), 기초연금(10.8%) 등의 증가율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량지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8.3%(2026년 본예산 대비)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전반적으로 총지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NABO 중기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756.5	827.2	909.1	982.4	1,035.8	8.2
(전년대비 증가율)	(10.6)	(9.4)	(9.9)	(8.1)	(5.4)	
의무지출	400.9	433.1	486.3	536.9	568.5	9.1
(전년대비 증가율)	(8.9)	(8.0)	(12.3)	(10.4)	(5.9)	
재량지출	355.5	394.1	422.8	445.5	467.3	7.1
(전년대비 증가율)	(12.6)	(10.9)	(7.3)	(5.4)	(4.9)	

주: 2026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25회계연도 결산 대비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윤주철 추계세제분석관(yjc@assembly.go.kr, 6788-4655)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1) 본 장의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2026.10.)의 주요 내용과 전망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의무지출 관련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지만, 전망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변수와 전망모형 등이 정부와 달라 전망 결과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차이가 존재한다.

NABO 중기재정전망의 총지출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 보면, 총지출은 5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큰데, 그 수준은 79.9조원으로 모두 의무지출 차이이다. 특히, 복지 분야 의무지출에 대해 NABO가 정부보다 51.9조원 크게 전망하였으며, 국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명목GDP와 학령인구 변화율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NABO의 국세수입과 명목GDP가 정부보다 크기 때문에 지방이전재원은 38.0조원 큰 것으로 나타났다.

[NABO 중기재정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단위: 조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총지출 차이	3.4	6.4	14.5	25.0	30.6	79.9
의무지출 차이	3.4	6.4	14.5	25.0	30.6	79.9
복지분야	3.4	7.9	10.4	13.2	17.1	51.9
지방이전재원	0.0	0.4	5.6	14.3	17.7	38.0
이자지출	0.1	△1.9	△1.5	△2.5	△4.3	△10.1
기타 의무지출	-	-	-	-	-	-
재량지출 차이	-	-	-	-	-	-

주: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 전망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뺀 값으로, 양(+)의 값이면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건전성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국가재정법」 제86조¹⁾에서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와 관련된 원칙을 ①건전재정 유지, ②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 ③국가채무의 적정수준 유지 노력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협의의 재정건전성 관리는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하는 것을 나타내며, 광의로는 다소 재정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성장동력, 구조적 난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불필요한 지출의 양적 감축, 재정구조 혁신으로 질적 리모델링, 투명한 재정운용, 국민주권재정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모멘텀 확보 및 구조적 전환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시사한다. 또한 상시·지속적 지출구조조정, 의무지출 구조개편 등 지출운용의 효율성 및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예산안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대해 살펴보면, 2027년 예산안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026년 제1회 추경 △52.5조원 대비 112.4조원 개선된 59.9조원으로 제시되었으며, 2026년 본예산 △52.7조원 대비로는 재정수지가 112.6조원 개선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2027년 관리재정수지는 △3.1조원으로 제시되었는데, 2026년 본예산 △107.8조원 대비로는 적자 규모가 104.7조원 축소된 수준이며 2026년 제1회 추경 △107.6조원 대비로는 적자 규모가 104.5조원 축소되었다.

다만, 재정수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2027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1,519.8조원으로, 2026년 본예산 1,413.8조원 대비 106.0조원, 제1회 추경 1,412.8조원 대비로는 107.0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2027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2026년 본예산 대비 3.3%p, 제1회 추경 대비로는 2.3%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국가재정법」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7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예산안 개요]

(단위: 조원, %, %p)

구분	2025 결산	2026		2027년 예산안(B)	전년대비 (B-A)
		본예산	추경(A)		
통합재정수지	△46.7	△52.7	△52.5	59.9	112.4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104.2 (△3.9)	△107.8 (△3.9)	△107.6 (△3.8)	△3.1 (△0.1)	104.5 (3.7)
국가채무 (GDP 대비)	1,305.2 (48.8)	1,413.8 (51.6)	1,412.8 (50.6)	1,519.8 (48.3)	107.0 (△2.3)

주: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아래에서는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변화를 동태적·상대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국제비교 등을 통하여 최근 우리나라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포함한 재정건전성을 점검한다.

가. 재정수지의 추이 및 2026~2030년 계획

정부는 2027년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를 $\Delta 3.1$ 조원(GDP 대비 $\Delta 0.1\%$)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2028~2030년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통합재정수지¹⁾에 대해 2027년 GDP 대비 1.9%를 기록한 이후 2028년에는 GDP 대비 0.8%, 2029, 2030년에는 적자를 나타내며 각각 $\Delta 0.2\%$, $\Delta 0.6\%$ 로 적자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2027년은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4.0%p 개선된 수준이며, 2028년, 2029년에도 각각 3.1%p, 1.9%p 개선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²⁾ 재정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관리재정수지는 2027년 $\Delta 3.1$ 조원을 기록한 이후 적자규모가 확대되며 2028~2030년에는 $\Delta 48.0 \sim \Delta 100.8$ 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계획되었다. 2027년의 경우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112.3조원 축소된 수준이며 2028년, 2029년의 경우 각각 80.9조원, 41.5조원 축소되었다.

또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7년 $\Delta 0.1\%$ 에서 2028~2030년 $\Delta 1.5 \sim \Delta 2.9\%$ 를 나타낼 계획이다. 이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로 2027년의 경우 GDP 대비 적자 비율이 4.0%p 개선될 계획이며 2028년, 2029년도 각각 2.9%p, 1.6%p 개선된 수준이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의미한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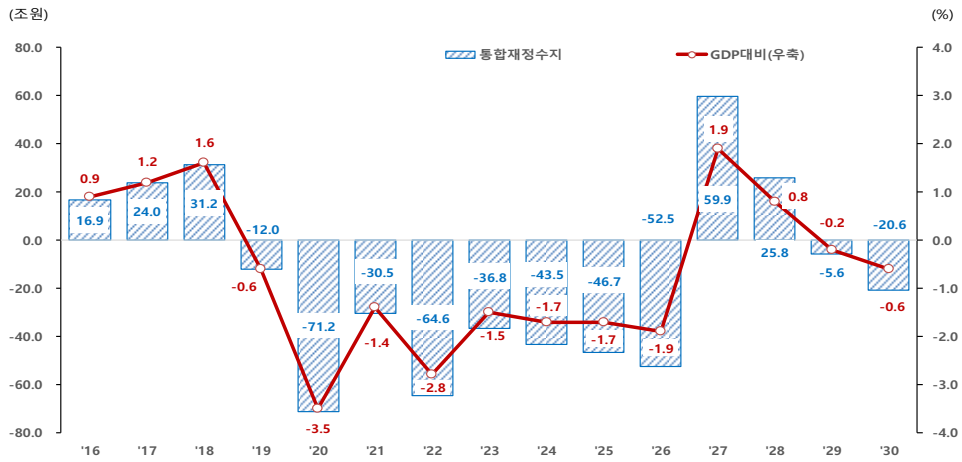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본예산	추경				
통합 재정 수지	'25~'29년 계획	△53.8	-	△59.4	△68.9	△63.6	
	(GDP 대비)	(△2.0)	-	(△2.1)	(△2.3)	(△2.1)	
	'26~'30년 계획	△52.7	△52.5	59.9	25.8	△5.6	△20.6
	(GDP 대비)	(△1.9)	(△1.9)	(1.9)	(0.8)	(△0.2)	(△0.6)
관리 재정 수지	'25~'29년 계획	△109.0	-	△115.4	△128.9	△124.9	
	(GDP 대비)	(△4.0)	-	(△4.1)	(△4.4)	(△4.1)	
	'26~'30년 계획	△107.8	△107.6	△3.1	△48.0	△83.4	△100.8
	(GDP 대비)	(△3.9)	(△3.8)	(△0.1)	(△1.5)	(△2.5)	(△2.9)

주: '25~'29년 계획의 경우 '26년은 정부안, '26~'30년 계획의 경우 '26년은 본예산,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

재정수지를 중기시계열에서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코로나19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경제회복세 지연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유지되었으나, 2027년에는 국세수입 확대 등으로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흑자로 전환되고,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적자기조는 지속되나 적자폭은 크게 개선될 계획이다. 다만 2027~2030년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재정적자가 지속되며 2018년 31.2조원 흑자에서 2019년 12.0조원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20~2025년에는 연평균 48.9조원 적자를 기록하였다. GDP 대비로는 2018년 1.6% 흑자에서 2019년 0.6%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20~2025년 연평균 2.1% 적자를 기록하였다. 통합재정수지는 2027, 2028년 흑자를 보이며 59.9조원, 25.8조원을 기록할 계획이며 2029년 이후 재차 적자로 전환되며 2029년 △5.6조원, 2030년 △20.6조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7년, 2028년 각각 1.9%, 0.8%를 기록한 이후 2029년, 2030년에는 각각 GDP 대비 △0.2%, △0.6% 수준으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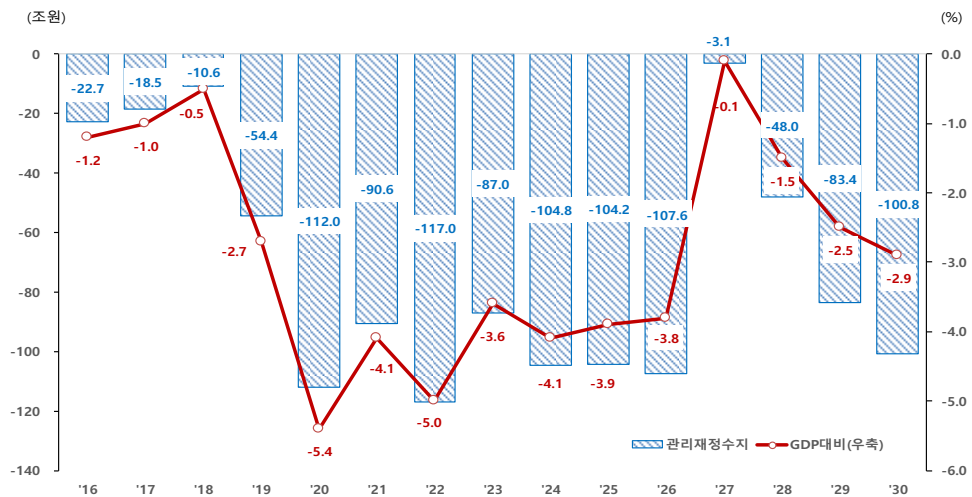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 추이]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관리재정수지는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이후 적자 규모가 확대되며 2016~2019년 연평균 26.6조원(GDP 대비 1.3%)에서 2020~2025년 연평균 102.6조원(GDP 대비 4.4%)으로 증가하였다. 2026~2030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될 계획이나, 2027년 적자규모가 3.1조원(GDP 대비 0.1%)으로 크게 축소된 이후, 2028년 이후 재차 확대되며 2028~2030년 48.0~100.8조원(GDP 대비 1.5~2.9%) 수준을 나타낼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 추이]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NABO 중기전망에 따르면 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27.5조원 흑자, 2027년에는 62.9조원 흑자, 2028년에는 24.5조원 흑자로 예상되었다. 다만, 2029년부터는 국세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의 지속적인 확대로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커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2029년 통합재정수지는 10.5조원 적자, 2030년에는 23.7조원 적자로 전망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58.6~72.1조원)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적자로 예상되는데, 2028년 이후 국세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4%대로 하락함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6년 44.6조원에서 2030년 92.1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2027년의 경우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큰 폭(113.2조원)으로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NABO 중기재정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통합재정수지	27.5	62.9	24.5	△10.5	△23.7
(GDP 대비 비율)	(0.8)	(1.8)	(0.7)	(△0.3)	(△0.6)
사회보장성기금수지	72.1	58.6	66.3	67.8	68.3
(GDP 대비 비율)	(2.2)	(1.7)	(1.8)	(1.8)	(1.7)
관리재정수지	△44.6	4.3	△41.8	△78.3	△92.1
(GDP 대비 비율)	(△1.4)	(0.1)	(△1.1)	(△2.0)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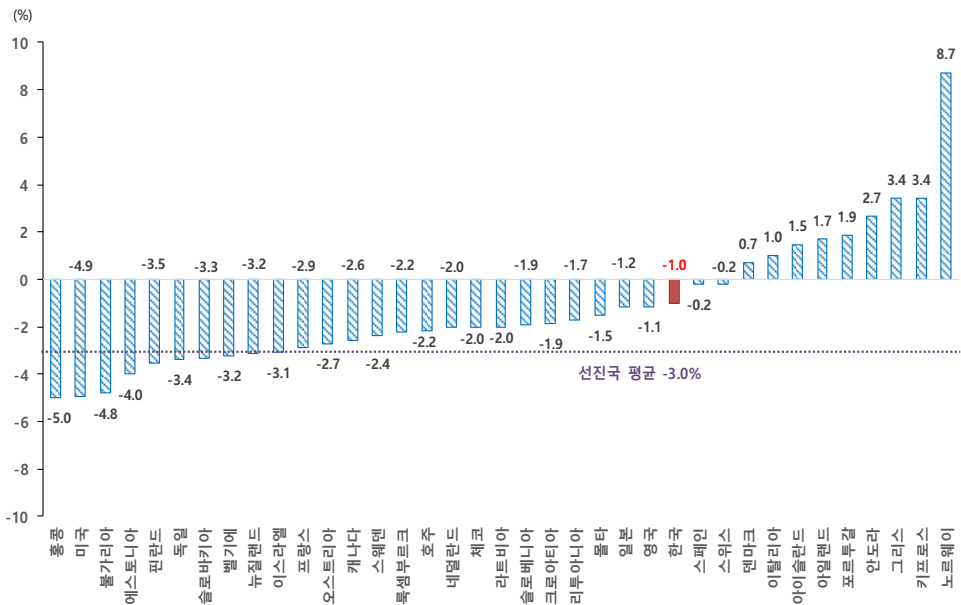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제비교

IMF가 2026년 10월 발표한 202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³⁾는 $\Delta 1.0\%$ 로 IMF 기준 37개 선진국⁴⁾ 중 12번째로 높으며, 37개 선진국의 평균 기초재정수지 비율 $\Delta 3.0\%$ 대비로는 $2.0\%p$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 중 미국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Delta 4.9\%$ 로 37개 대상국 중 2번째로 적자 비율이 높으며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각각 $\Delta 3.4\%$, $\Delta 2.9\%$, $\Delta 1.2\%$, $\Delta 1.1\%$ 를 나타냈다. 반면 노르웨이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8.7% 로 37개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흑자 비율을 기록하였으며 그리스(3.4%), 포르투갈(1.9%), 아일랜드(1.7%) 등의 국가도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 국제 비교(2026년 기준)]



주: 1.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 차감)에서 순이자비용을 더하여 산출한 기초재정 수지를 명목 GDP로 나누어 산출

2. 2026년 기준

자료: IMF, 「Fiscal Monitor」(202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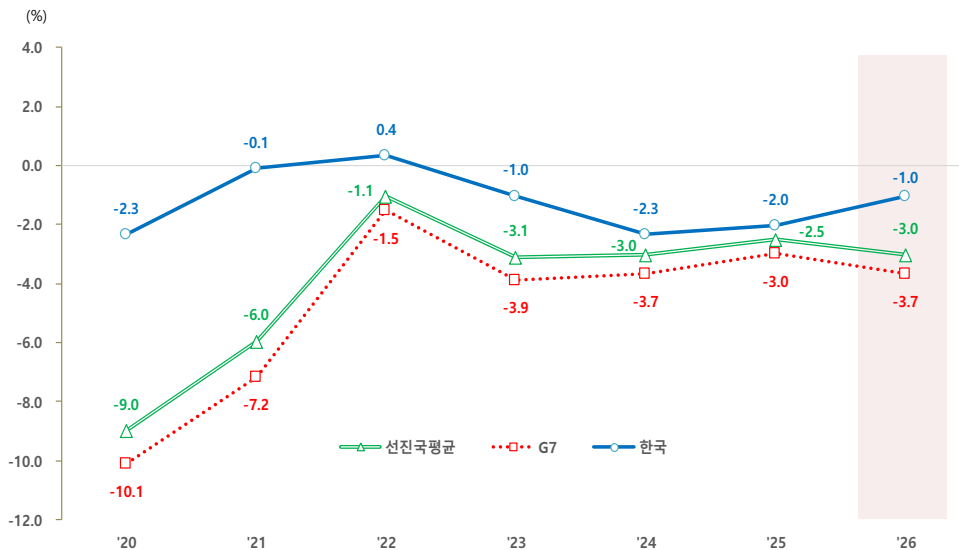
3) 기초재정수지는 일반정부 기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후 순이자비용을 더하여 산출한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4) IMF는 1인당 국민소득, 대외거래 규모 등을 통해 선진국, 신흥국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IMF 기준 37개 선진국⁵⁾의 GDP 대비 평균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2020년 △9.0%를 기록하였으나 개선세를 보이며 2022년 △1.1%를 기록하였고 이후 등락을 보이며 2023년 △3.1%, 2024년 △3.0%, 2025년 △2.5%, 2026년 △3.0%를 나타냈다. G7 국가도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며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가 2020년 △10.1%를 기록한 이후 2022년 △1.5%로 개선되었으나 2023년 △3.9%, 2024년 △3.7%, 2025년 △3.0%, 2026년 △3.7%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2020년 △2.3%에서 2022년 0.4%를 나타낸 이후 하락하며 2024년 △2.3%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 2026년 각각 △2.0%, △1.0%를 나타냈다.

[일반정부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 추이 비교]



주: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에서 순이자비용을 더하여 산출한 기초재정수지를 명목 GDP로 나누어 산출

자료: IMF, 「Fiscal Monitor」(2026.10)

5) IMF 기준 선진국은 38개국이나 싱가포르 1개국에 대해 IMF가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를 발표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다.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검토 필요

정부는 국세수입 확대 등으로 2027~2030년 재정수지가 2026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관리재정수지가 2027년 개선된 이후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2028~2030년 재정적자 규모 및 GDP 대비 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재정지출 확대의 비가역성, 세수 증가세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 목표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 반도체 호조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6~2030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속’ 등을 설정하고 성장모멘텀 확보,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퍼지컬AI·AIDC) 재정지원 등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 강화, 청년 및 교육·인재 등에 집중 투자를 위해 총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2027년 △3.1조원(GDP 대비 △0.1%)에서 2030년 △100.8조원(GDP 대비 △2.9%)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자규모가 확대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통합재정수지 역시 2027년 59.9조원(GDP 대비 1.9%)에서 2030년 △20.6조원(GDP 대비 △0.6%)으로 악화될 계획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p)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전년대비 증감			
						2027	2028	2029	2030
통합 재정수지 (GDP 대비)	△52.5 (△1.9)	59.9 (1.9)	25.8 (0.8)	△5.6 (△0.2)	△20.6 (△0.6)	112.4 (3.8)	△34.1 (△1.1)	△31.4 (△1.0)	△15.0 (△0.4)
관리 재정수지 (GDP 대비)	△107.6 (△3.8)	△3.1 (△0.1)	△48.0 (△1.5)	△83.4 (△2.5)	△100.8 (△2.9)	104.5 (3.7)	△44.9 (△1.4)	△35.4 (△1.0)	△17.4 (△0.4)

주: 1. 전년대비 증가율의 경우 GDP 대비 비율은 전년 대비 %p 차이임.

2. 2026년은 추정 기준

3.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6~2030년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따르면 2027년 재정수지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한 이후 2028~2030년 재정수지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에 대한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으로 ‘성장동력, 구조적 난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속, 불필요한 지출의 양적 감축, 재정구조 혁신으로 질적 리모델링, 국민주권재정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재정관리 목표 및 구체적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없이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6~2030년 재정운용 기본방향 비교]

구분	재정총량 관리방안
2024~2028년 재정운용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지출소요 대비 등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지속 등 ② 건전재정기조 하에서도 정부가 해야할 일은 확실하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생태계 조성 and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대비 역량 제고 ③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으로 재정운용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행적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유사·중복 정비, 지출 재구조화 추진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을 법제화 등 ○ 민자사업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2025~2029년 재정운용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경기회복·경제성장 적극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과 부문에 투자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경제 회복·성장 지원 ○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지원, 소비진작·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육성, 인구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에 재정을 선택·집중 투자 ② 재정-경제 선순환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경제성장 및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 ○ 低성과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등 ③ 재정운용 효율성 및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평가 예산환류 강화, 예타제도 개편 등 재정관리 효율화 등 ○ 국민참여 확대,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 및 재정교육 강화 등

구분	재정총량 관리방안
2026~2030년 재정운용 기본방향	<p>① 성장동력, 구조적 난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대한 재정투자로 성장모멘텀을 확보하고 구조적 전환기 대응 ○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지원 등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 ○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세수 증가분 청년, 성장동력 등 집중 투자 <p>② 불필요한 지출의 양적 감축, 재정구조 혁신으로 질적 리모델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구조조정을 상시·지속 단행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 ○ 의무지출 구조개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 등 <p>③ 투명한 재정운용, 국민주권재정의 실질적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 재정혁신을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 재정정보 공개 확대, 국민 체감형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적 충격 가능성, 양극화 등을 고려 시, 재정정책이 경기상황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단기적인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우리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운용 목표 설정과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국가채무의 추이 및 2026~2030년 계획

정부는 국가채무를 2027년 1,519.8조원(GDP 대비 48.3%)에서 2030년 1,734.1조원(GDP 대비 49.0%)으로 2027~2030년 동안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금융불확실성 확대 우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증가하며 국가채무 증가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1,412.8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30년 1,734.1조원(GDP 대비 49.0%)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망 기간인 2026~2030년 동안 연평균 5.3% 증가하는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변화 추이]

(단위: 조원, %, %p)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전년대비 증감(증감률)			
						2027	2028	2029	2030
2026~2030년 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D1)	1,412.8	1,519.8	1,600.3	1,659.1	1,734.1	107.0	80.5	58.8	75.0
						(7.6)	(5.3)	(3.7)	(4.5)
(GDP 대비)	(50.6)	(48.3)	(48.9)	(48.8)	(49.0)	(△2.3)	(0.6)	(△0.1)	(0.2)

주: 1. 2026년 국가채무(D1) 수치는 추경 기준

2. 반올림에 따른 단수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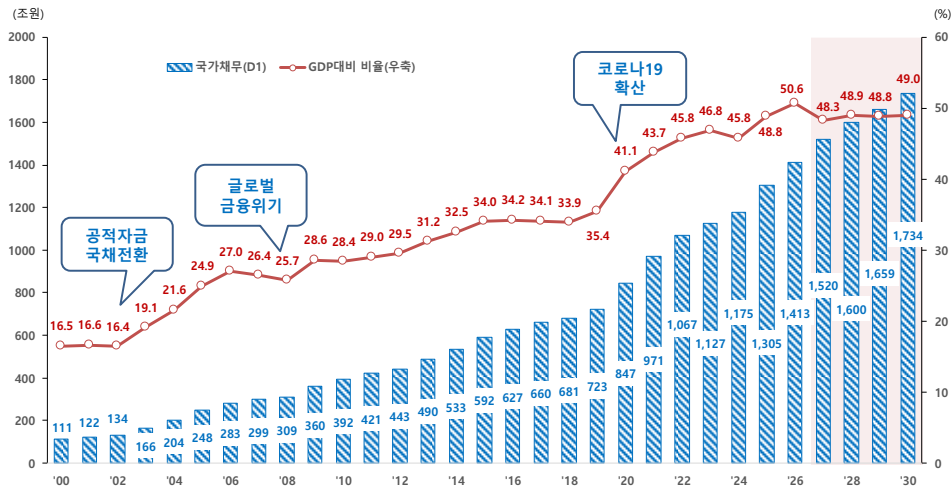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

과거 국가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2~2003년 신용카드 대란 위기 극복과정에서 소요된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으로 인해 2006년 GDP 대비 27.0%까지 도달하였다. 이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 결과 2015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4.0%로 증가하였고,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거치며 또다시 급증하여 2025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8%에 해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당하는 1,305.2조원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최근 성장모멘텀 확보,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03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734.1조원(GDP 대비 49.0%)로 증가할 계획이다.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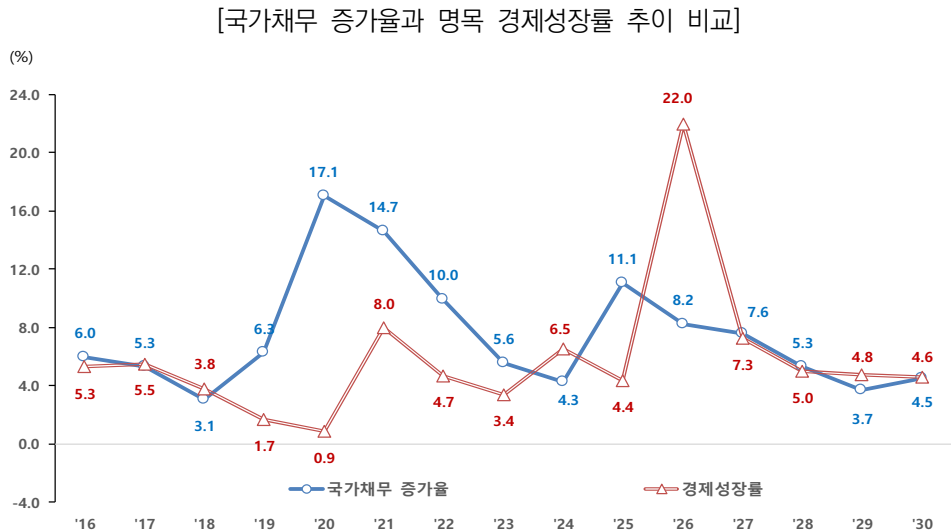
주: 2026년 수치는 추정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6.9.

국가채무 증가율과 명목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 대응 등으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국가채무 증가율에서 경제성장률을 차감한 차이가 크게 확대된 이후 축소되는 양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NABO 전망 기준 2026년 명목 경제성장률이 2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율을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2027년 이후에는 두 지표간 차이가 축소되며 두 지표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국가채무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각각 17.1%, 0.9%를 나타내며 국가채무 증가율에서 경제성장률을 차감한 차이가 16.2%p를 기록한 이후 차이가 축소되며 2023년 2.2%p 수준을 나타냈고 202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국가채무 증가율을 2.2%p 상회하였다.¹⁾ 2025년 국가채무 증가율에서 경제성장률을 차감한 차이가 6.7%p로 확대된 이후 2026년에는 명

1) 다만 2024년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외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규모를 당초 증기재정운용계획 대비 43.5조원 확대하여 편성하였고 이를 전액 집행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채 추가발행 없이 세수여건 악화에 대응한 점 등에 기인한다.

목 경제성장률의 큰 폭 상승으로 $\Delta 13.8\text{p}$ 를 나타내고 2027~2030년에는 두 지표 간 차이가 $\Delta 1.1\sim 0.3\text{p}$ 로 안정적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주: ~2025년 실적치, 2026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경제성장률은 NABO 중기 경제전망
 자료: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NABO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1,413.7조원에서 2030년 1,711.4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6년 43.3%에서 2030년 42.5%로 소폭 하락($\Delta 0.8\text{p}$)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망기간(2026~2030년) 동안 국가채무 증가율이 NABO 경제전망에 따른 명목GDP의 연평균 증가율을 하회하기 때문이다.

[NABO 중기재정전망: 국가채무]

(단위: 조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	1,413.7	1,512.4	1,586.7	1,642.2	1,711.4	4.9
(전년 대비 증가율)	(8.3)	(7.0)	(4.9)	(3.5)	(4.2)	
(GDP 대비 비율)	(43.3)	(43.2)	(43.2)	(42.6)	(42.5)	

주: 2026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5회계연도 결산 대비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이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2026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수준의 국제비교는 IMF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General Government Debt, % of GDP)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정부재정통계기준(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산출²⁾ 하며, 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 주로 활용되는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IMF가 2026년 10월 발표한 「Fiscal Monitor」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를 38개 선진국³⁾과 비교해 보면, 202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47.3%로 대상국가 38개국 중 23위 수준이며, 38개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107.8%⁴⁾에 비해 절반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199.4%)이며 주요국 중 이탈리아(137.9%), 미국(126.8%), 프랑스(118.5%), 영국(102.0%), 스페인(97.6%), 독일(64.6%), 호주(52.6%) 등이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네덜란드(45.4%), 노르웨이(40.0%), 스위스(38.3%), 아일랜드(33.5%)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2) 일반정부 부채(D2)의 포괄범위, 산출기준, 주요 활용 등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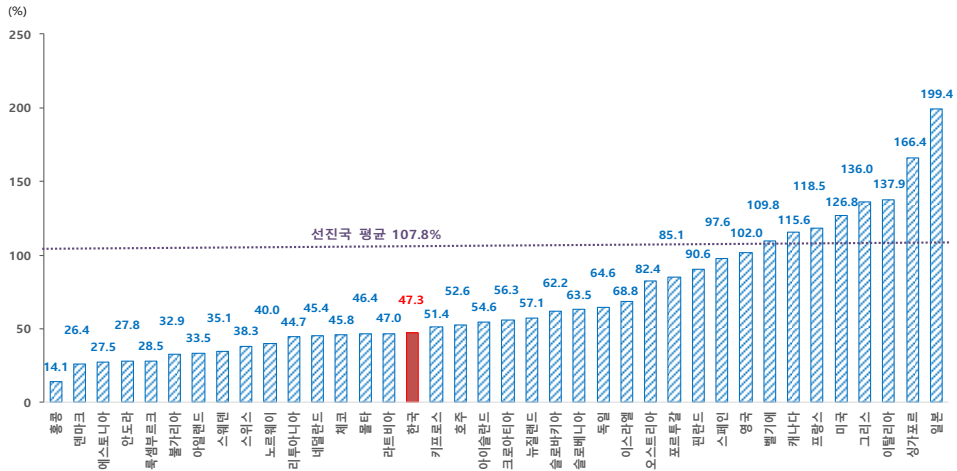
재정지표	포괄범위	산출기준	주요 활용
일반정부 부채(D2)	D1 + 비영리 공공기관	국제지침(GFS), 발생주의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IMF, OECD)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IMF는 1인당 국민소득, 대외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 개도국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4) IMF가 발표하는 GDP 가중평균 기준이며, 단순평균 기준 2026년 38개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70.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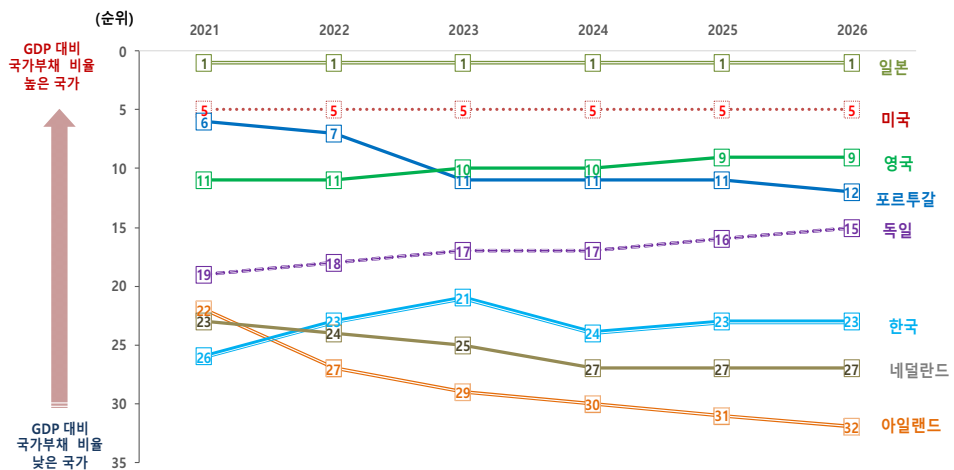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국제 비교(2026년 기준)]



주: GDP 대비 국가부채(D2 기준) 비율
 자료: IMF, 「Fiscal Monitor」(2026.10)

다만,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의 순위는 전반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1년 기준 38개 선진국 중 26위 수준이었으나 이후 등락이 나타나는 가운데 상승하며 2026년 기준 23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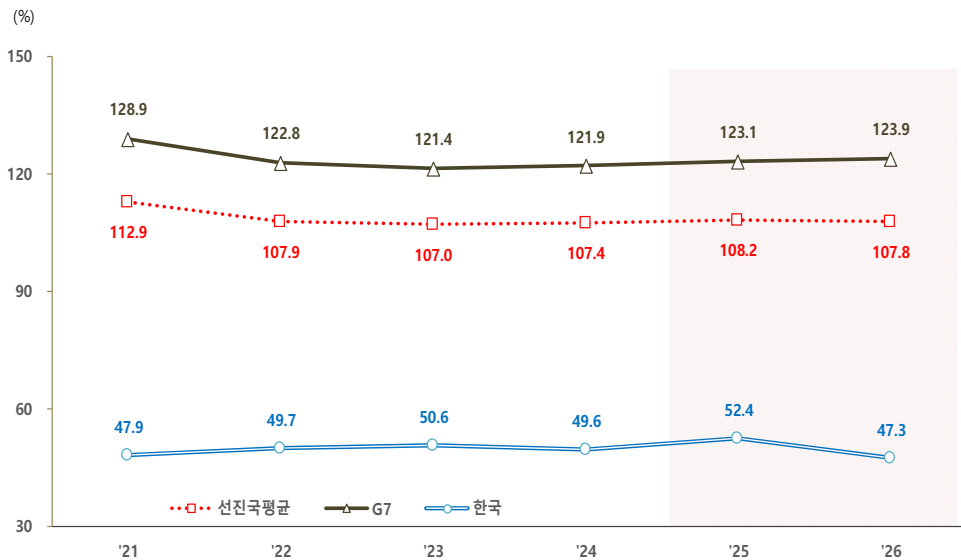
[선진국(38개국) GDP 대비 국가부채(D2기준) 비율 순위 추이]



주: 선진국은 IMF 분류 기준
 자료: IMF, 「Fiscal Monitor」(2026.10)

38개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1~2023년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 2024~2025년 소폭 상승한 후 2026년 하락하였다. 38개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1년 112.9%를 나타낸 이후 하락하며 2023년 107.0%를 기록하였고 2024년 107.4%, 2025년 108.2%, 2026년 107.8%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등락을 나타내며 2021년 47.9%에서 2023년 50.6%로 상승하였으나 2024년 49.6%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등락은 최근에도 지속되며 2025년 52.4%, 2026년 47.3%를 나타냈다. 한편 선진국 중 G7 국가의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1년 128.9%에서 2023년 121.4%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26년 123.9%를 나타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추이 비교]



주: GDP 대비 국가부채(D2 기준) 비율

자료: IMF, 「Fiscal Monitor」(2026.10)

다. 국가채무의 구성별·성질별 증가 요인 분석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국가채무의 증가를 구성별·성질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2026~2030년 국가채무는 2026년 1,412.8조원에서 2030년 1,734.1조원으로 321.3조원(22.7%)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국가채무의 증가는 주로 국채 증가에 기인한다.

국가채무를 구성별로 살펴보면 국채는 2026년 1,374.7조원에서 2030년 1,694.9조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할 계획이다. 국채는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로 구분되는데, 국고채의 경우 2026~2030년 중 연평균 5.6%로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기록할 계획이며 국민주택채권과 외평채는 동기간 각각 연평균 2.6%,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평채는 2025년에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 등으로 외평채 잔액 규모가 전년대비 16.7조원 증가한 이후 2027년 이후 40조원 내외의 잔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⁵⁾ 2026~2030년 중 국가채무 증가분 321.3조원 중 국채가 320.2조원으로 99.7%의 비중을 점유하며, 이 중 국고채가 307.8조원으로 95.8%를 차지할 계획이다.

[구성별 국가채무 추이와 전망]

(단위: 조원, %)

구 분	국가 채무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	국민 주택채	외평채			
2019	723.2	(35.4)	699.0	696.3	611.5	76.4	8.3	2.6	0.1	24.2
2020	846.9	(41.1)	819.2	815.2	726.8	78.9	9.5	3.3	0.7	27.5
2021	970.7	(43.7)	939.1	937	843.7	82.2	11.2	2	0.1	31.5
2022	1,067.4	(45.8)	1,033.4	1,031.5	937.5	82.2	11.8	1.9	0.1	33.9
2023	1,126.8	(46.8)	1,092.5	1,091.1	998.0	81.6	11.5	1.2	0.2	34.3
2024	1,175.0	(45.8)	1,141.2	1,139.8	1,047.9	79.1	12.8	1.2	0.2	33.9

5) 원화표시 외평채는 2025년 13.7조원 발행되었으며 2026년, 2027년에도 연간 13.7조원 발행이 계획되어 있다.

(단위: 조원, %)

구 분	국가 채무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국고채	국민 주택채	외평채			
2025	1,305.2	(48.8)	1,268.1	1,266.5	1,161.3	75.6	29.5	1.5	0.1	37.1
2026	1,412.8	(50.6)	1,376.1	1,374.7	1,269.6	69.8	35.3	1.3	0.1	36.7
2027	1,519.8	(48.3)	1,482.7	1,481.1	1,366.0	69.8	45.3	1.3	0.3	37.1
2028	1,600.3	(48.9)	1,563.0	1,561.4	1,448.1	71.9	41.4	1.3	0.2	37.4
2029	1,659.1	(48.8)	1,621.5	1,620.0	1,506.3	73.5	40.2	1.4	0.2	37.6
2030	1,734.1	(49.0)	1,696.4	1,694.9	1,577.4	77.4	40.2	1.4	0.1	37.7
'19~'30 증가율	8.3	-	8.4	8.4	9.0	0.1	15.4	△5.5	0.0	4.1
'26~'30 증가율	5.3	-	5.4	5.4	5.6	2.6	3.3	1.9	0.0	0.7

주: 2019~2025년은 결산기준, 2026년은 추정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26.9. 등

둘째, 2026~2030년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동 기간 국가채무는 일반 회계 적자보전 등 대응자산이 없어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이 수반되는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 시 대응자산을 활용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체상환할 수 있는 채무이다. 이에 반해,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상환 시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향후 국민부담으로 연결되는 채무이다.

[성질별 국가채무 개요]

구분	개념	종류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해야 하는 채무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고채,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금융성 채무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존재해 채무상환시 대응자산을 사용하여 일부 또는 전부 채무상환이 가능한 채무 (대응자산이 채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음)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 등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참고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26년 1,025.2조원에서 2030년 1,312.3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연평균 증가율은 동 기간 전체 국가채무 증가율 5.3% 및 금융성 채무 증가율 2.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26년 72.6%에서 2030년 75.7%로 3.1%p 확대될 계획이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기타 적자성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 적자보전이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비중은 2026년 95.3%에서 2030년 96.9%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 비중은 2026년 27.4%에서 2030년 24.3%로 하락할 계획이며, 금융성 채무 중 외환시장 대응 관련 채무 비중은 2026년 61.5%에서 2030년 57.5%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 및 구성 내역]

(단위: 조원, %)

구 분	국가 채무	(GDP 대비)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				
				일반 회계 적자 보전	공적 자금	기타 적자 성	지방 정부 순채무		외환 시장	국민 주택	공자 기금 여유 재원 조정	기타 금융성
2019	723.2	(35.4)	407.6	334.7	44.1	4.6	24.2	315.6	247.2	76.4	△34.9	26.9
2020	846.9	(41.1)	512.7	437.5	42.8	5.2	27.5	333.9	256.4	78.9	△39.5	38.1
2021	970.7	(43.7)	597.5	523.1	38.6	4.2	31.5	373.2	263.8	82.2	△23.7	50.9
2022	1,067.4	(45.8)	676	605.8	32.2	4.1	33.9	391.3	265.7	82.2	△15.3	58.8
2023	1,126.8	(46.8)	726.4	660.1	28	4.1	34.2	400.3	251.0	81.6	7.7	60.1
2024	1,175.0	(45.8)	815.4	756.7	20.6	4.0	33.9	359.8	210.3	79.1	4.0	66.4
2025	1,305.2	(48.8)	926.5	870.4	15.1	3.9	37.1	378.8	231.7	75.6	△0.7	72.1
2026	1,412.8	(50.6)	1,025.2	977.3	7.3	3.9	36.7	387.6	238.2	69.9	0.4	79.1
2027	1,519.8	(48.3)	1,117.1	1,076.0	-	4.0	37.1	402.7	247.8	69.8	2.8	82.4

(단위: 조원, %)

구 분	국가 채무	(GDP 대비)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				
				일반 회계 적자 보전	공적 자금	기타 적자 성	지방 정부 순채무		외환 시장	국민 주택	공자 기금 여유 재원 조정	기타 금융성
2028	1,600.3	(48.9)	1,192.4	1,151.1	-	3.8	37.4	408.0	243.9	71.9	2.8	89.4
2029	1,659.1	(48.8)	1,245.8	1,204.4	-	3.7	37.6	413.3	242.7	73.5	1.5	95.7
2030	1,734.1	(49.0)	1,312.3	1,271.0	-	3.6	37.7	421.9	242.7	77.4	3.4	98.4
19~30 증가율	8.3	-	11.2	12.9	-	△2.2	4.1	2.7	△0.2	0.1	-	12.5
26~30 증가율	5.3	-	6.4	6.8	-	△2.0	0.7	2.1	0.5	2.6	-	5.6

주: 1. 공공자금 여유재원 조정의 음수 부분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각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수 받은 여유자금을 활용함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의 재원으로 발행했어야 하는 국고채를 적게 발행한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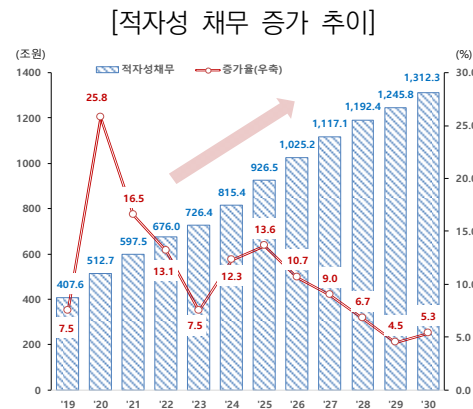
2. 2019~2025년은 결산기준, 2026년은 추경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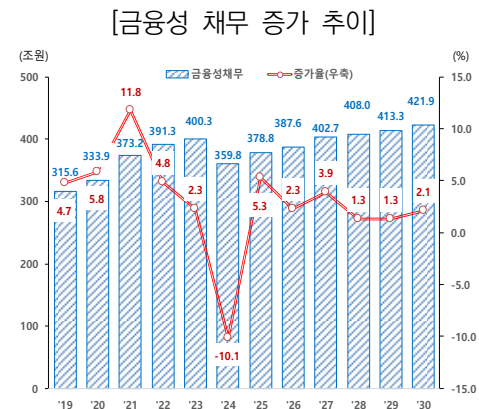
라. 국가채무의 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최근 대응자산이 없어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이 수반되는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국가채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7년 예산안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2026~2030년 국가채무가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국가채무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악화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국가채무 목표 및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6조원에서 2025년 926.5조원으로 518.9조원(127.3%)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14.7% 증가한 수준이다. 동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6조원에서 378.8조원으로 63.2조원(20.0%)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1%를 기록하였다. 연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의 약 4.7배 수준이며 증가 규모 기준으로 8.2배 수준이다. 2026~2030년에도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간 증가율 차이는 지속될 계획이다. 적자성 채무가 2026년 1,025.2조원에서 2030년 1,312.3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성 채무는 동 기간 387.6조원에서 421.9조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었다. 2026~2030년 적자성 채무 증가율은 금융성 채무 증가율의 3.0배 수준이다. 따라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규모 차이도 확대될 계획이며, 2019년 기준 적자성채무/금융성 채무는 1.3배 수준이었으나 2030년에는 3.1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료: 기획예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 결과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72.6%에서 2030년 75.7%로 3.1%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2019~2030년 동안 연평균 12.9%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부터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 이상(51.7%)을 상회하고 2030년에는 73.3%로 국가채무의 70%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의 국가채무 대비 비중은 2026년 국가채무 대비 27.4%에서 2030년 24.3%까지 감소하며, 금융성 채무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의 경우 2026년 16.9%에서 2030년에 14.0% 수준까지 하락할 계획이다.

[국가채무(D1) 대비 적자성채무 및 금융성 채무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적자성채무		금융성채무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용
2019	56.4	46.3	43.6	34.2
2020	60.5	51.7	39.4	30.3
2021	61.6	53.9	38.4	27.2
2022	63.3	56.8	36.7	24.9
2023	64.5	58.6	35.5	22.3
2024	69.4	64.4	30.6	17.9
2025	71.0	66.7	29.0	17.8
2026	72.6	69.2	27.4	16.9
2027	73.5	70.8	26.5	16.3
2028	74.5	71.9	25.5	15.2
2029	75.1	72.6	24.9	14.6
2030	75.7	73.3	24.3	14.0

자료: 기획예산처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 자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하므로 국가채무 총량뿐 아니라 채무의 질에 대한 적극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2027년 예산안,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서 적자성 채무 증가 등 국가채무의 질에 대한 관리 방안 및 관리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적자성 채무 관리목표 및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20년 코로나19 등의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World Bank 및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재정위험(fiscal risk)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였다.²⁾ 국제기구에서는 재정위험을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및 자산·부채 등 재정결과가 예산편성이나 재정전망 당시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요인이나 벗어날 가능성(확률)로 정의하고 있으며, 각 국가로 하여금 각국의 상황에 맞는 재정위험을 분석·평가하고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³⁾ 이에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재정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위험에 대비·관리하고 있다.⁴⁾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대상이 주로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D1)⁵⁾, 국가보증채무 등에 국한되어 우리나라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재정위험 요소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⁶⁾ 등에 따라 재정운용 방향 및 목표, 중장기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2) Cebotari 외, “Fiscal Risks - Sources, Disclosure, and Management”, IMF, 2009. 및 IMF의 「Fiscal Monitor」(2021.10) 등에서 재정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World Bank와 IMF의 경우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재정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Fiscal Risk Toolkit)을 제공하고 있다.

4)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예산책임청(OBR)에서는 재정위험 요인 분류 매트릭스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위험 및 장기전망 보고서(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report)」를 2017년에 최초 발간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 이후 지금의 형태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6년 7월 보고서에서는 장기재정 전망과 더불어 보건 및 연금 분야 중심의 구조적 재정지출 증가 등을 분석하였다.

5) 국가채무(D1)의 포괄범위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재정지표	포괄범위	산출기준	주요 활용
국가채무(D1)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예산·결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6)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재정전망을 담고,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을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성격의 계획으로, 실제 재정 운용과정에서도 계획의 방향성 등이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기변동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당초 계획과 실제 재정운용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미 예측된 재정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므로,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나 우발부채의 현실화와 같은 위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대응책을 담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또한 재정목표 또는 전망된 재정결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위험요인이나 벗어날 가능성 등 재정위험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관리체계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고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 재정위험인 보증채무, 우발부채, 공기업 부채, 민간 부채를 포함한 총부채, 국가채무 이자비용 증가 등에 따른 경직성 심화, 거시금융 환경변화 등이 가지는 위험은 전반적으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정의 방향성 및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검토하는 한편, 다양한 강도의 경제·사회적 위기 시나리오를 설정, 각 시나리오별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변동폭을 예측하며,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비상 재정운용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재정위험요인을 검토한다.

-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국가보증채무 증가폭 확대

첫째,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의 직접적인 채무는 아니므로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증 대상인 주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직접 채무부담을 떠안게 되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2027년 이후 한미전략투자채권 신규 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확대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될 계획이므로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 제92조7)와 동법 시행령 제44조8)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하여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는 2025년 15.6조원에서 2026년 27.7조원으로 12.1조원, 7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27년에는 2026년의 2배를 상회하는 60.0조원, 2030년에는 157.3조원(GDP 대비 4.4%)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증가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5~2030년 기간 국가보증채무는 908.3% 증가할 계획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약 58.8% 수준이다. 또한 GDP 대비 국가보증채무 비율은 2025년 0.6%, 2026년 1.0%, 2027년 1.9%까지 상승하며 2030년에는 GDP의 4.4%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7) 「국가재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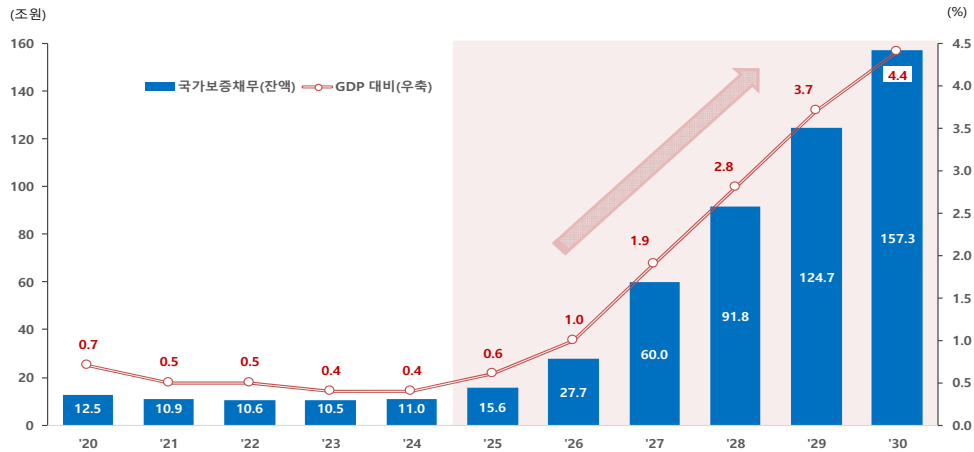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 ⑦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보증채무의 전망과 산출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보증채무 추이 및 계획]



주: 2026년 이후 계획치

자료: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5~2030년 국가보증채무 증가를 기금별로 살펴보면, 국가보증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과 한미전략투자채권의 신규발행 및 발행량 확대 등에 기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보증채무 중 2026년 신규로 발행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잔액은 2026년 6.4조원에서 2030년 78.5조원으로 증가할 계획이며, 2027년부터 신규로 보증되는 한미전략투자채권은 2027년 10.4조원에서 2030년 41.7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잔액은 2025년 4.9조원에서 2030년 22.8조원으로 증가할 계획이며, 한국장학재단채권은 동 기간 10.8조원에서 14.3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5~2030년 보증채무별 국가보증채무 잔액 추이]

(단위: 조원, %, %p)

구분	2025(A)	2026	2027	2028	2029	2030(B)	증감(B-A)
국가보증채무	15.6	27.7	60.0	91.8	124.7	157.3	141.7
(GDP 대비)	(0.6)	(1.0)	(1.9)	(2.8)	(3.7)	(4.4)	(3.8)
- 장학재단채권	10.8	11.6	12.4	13.0	13.7	14.3	3.5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4.9	9.7	15.7	17.9	20.3	22.8	17.9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	6.4	21.5	40.1	59.4	78.5	78.5
- 한미전략투자채권	-	-	10.4	20.8	31.3	41.7	41.7

주: 2025년은 결산 기준, 2026~2030년은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러한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의 확정채무가 아니므로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위험이 있고, 특히 2030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7년에 발행 예정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1조 2,100억원은 근거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법률 제정 및 국회 보증동의 이후 이를 관리계획에 적시에 반영하여 국가보증채무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의 기금채권은 2027년 발행될 예정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법」 제9조의2제1호9)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는 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및 한미전략투자채권이 국가보증채무로 제시되어 있을 뿐,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26~2030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 보증채무	27.7	60.0	91.8	124.7	157.3
(GDP 대비 ¹⁾ , %)	(1.0)	(1.9)	(2.8)	(3.7)	(4.4)
- 한국장학재단채권	11.6	12.4	13.0	13.7	14.3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9.7	15.7	17.9	20.3	22.8
-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6.4	21.5	40.1	59.4	78.5
- 한미전략투자채권 ²⁾	-	10.4 (70억달러)	20.8 (140억달러)	31.3 (210억달러)	41.7 (280억달러)

주 1) '26~'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전망 반영

2) 발행액을 달러 기준으로 설정함에 따라 예산 편성 환율(1USD = 1,490원) 적용

자료: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9)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시점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기금채권 1조 2,10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현행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는 이에 관한 정보가 없어 국회가 동 채권의 발행이 국가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2028년 이후의 기금채권 발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국가보증채무의 증가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동 기금의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작성 시점에 채권 발행이 가능하지 않았던 데 따른 것으로, 현행 관리계획에 미반영된 것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참고로, 한미전략투자채권의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제정되어 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아직 보증잔액이 없고 2027년부터 발행될 예정인 단계에서도 「2026~2030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신규 보증채무를 발행 이전이라도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도 법률 제정 및 보증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향후 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동 기금채권 관련 법률 제정 및 국회 보증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보증채무를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적시 반영하고, 동 채권발행에 따른 국가보증채무 계획의 변동 규모와 중기 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동 기금의 보증채무를 포함한 총국가보증채무 규모, 증가폭에 대한 면밀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채무 이자부담 확대

(1) 현 황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결산기준 국가채무 추이를 살펴보면, 국가채무는 2021년 970.7조원에서 2025년 1,305.2조원으로 증가하고 이 중 국고채 규모는 2021년 843.7조원에서 2025년 1,161.3조원으로 확대되었다.

[2021~2025년 국가채무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국가채무	970.7	1,067.4	1,126.8	1,175.0	1,305.2
중앙정부채무	939.1	1,033.4	1,092.5	1,141.2	1,268.1
○ 국채	937.0	1,031.5	1,091.1	1,139.8	1,266.5
- 국고채	843.7	937.5	998.0	1,047.9	1,161.3
- 국민주택채권	82.2	82.2	81.6	79.1	75.6
- 외평채	11.2	11.8	11.5	12.8	29.5
○ 차입금	2.0	1.9	1.2	1.2	1.5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1	0.2	0.2	0.1
지방정부순채무	31.5	33.9	34.3	33.9	37.1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자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 주택도시시기금 국공채이자 및 민간예수금 이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 등으로 구성된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 규모는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1,412.8조원에서 2030년 1,734.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GDP 대비 비율은 동 기간 50.6%에서 49.0%로 하락할 계획이다.

국가채무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채무는 같은 기간 1,376.1조원에서 1,696.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국고채가 1,269.6조원에서 1,577.4조원으로 증가하여 국가채무 증가를 견인하게 된다. 한편, 국민주택채의 경우 동 기간 69.8조원에서 77.4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채무]

(단위: 조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 (GDP 대비)	1,412.8 (50.6)	1,519.8 (48.3)	1,600.3 (48.9)	1,659.1 (48.8)	1,734.1 (49.0)	5.3
중앙정부채무	1,376.1	1,482.7	1,563.0	1,621.5	1,696.4	5.4
국채	1,374.7	1,481.1	1,561.4	1,620.0	1,694.9	5.4
- 국고채	1,269.6	1,366.0	1,448.1	1,506.3	1,577.4	5.6
- 국민주택채	69.8	69.8	71.9	73.5	77.4	2.6
- 외평채	35.3	45.3	41.4	40.2	40.2	3.3
차입금	1.3	1.3	1.3	1.4	1.4	1.9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3	0.2	0.2	0.1	0.0
지방정부순채무	36.7	37.1	37.4	37.6	37.7	0.7

주: 2026년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이자지출을 살펴보면,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33조 7,144억원에서 2030년 48조 9,482억원으로 증가되는 추세가 나타난다. 이자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상승세를 보이며 2026년 1.21%에서 2030년 1.38%로 0.1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6~2030년 이자지출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이자지출 (GDP 대비)	337,144 (1.21)	399,765 (1.27)	425,833 (1.30)	456,972 (1.34)	489,482 (1.38)	9.8
- 공공자금관리기금	292,705	350,163	376,739	407,195	441,167	10.8
- 주택도시기금	16,867	21,254	22,583	23,502	21,987	6.9
- 기타	27,573	28,347	26,511	26,275	26,328	△1.1

주 1) 2026년은 제1회 추경 기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계획치

2) 명목GDP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정부 전망치 기준

자료: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 분석의견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이자지출 확대로 재정운용 상 경직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최근 금융시장 내 변동성 증대, 시장금리 상승세 등으로 국가채무의 이자 부담이 계획 대비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국가채무 이자비용 증가 리스크에 대한 관리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국고채 증가 규모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출에 따르면, 국고채 잔액은 2026년 108.3조원 증가한 이후 증가 폭이 감소하며 2029년 58.2조원, 2030년 71.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계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출은 2026년 29.3조원에서 2030년 44.1조원 수준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국고채 증가 규모 대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출의 비율은 2026년 27.0%에서 2029년 70.0%까지 상승한 후 2030년 6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 대비 이자지출 규모도 2026년 3.9%에서 2030년 4.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2030년 국고채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출]

(단위: 조원, %)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국고채(잔액)	1,269.6	1,366.0	1,448.1	1,506.3	1,577.4	5.6
국고채 증가분(A)	108.3	96.4	82.1	58.2	71.1	-
총지출(B)	753.0	820.9	894.6	957.4	1,005.2	7.5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출(C)	29.3	35.0	37.7	40.7	44.1	10.8
국고채 증가분 대비 비율(C/A)	27.0	36.3	45.9	70.0	62.0	-
총지출 대비 비율(C/B)	3.9	4.3	4.2	4.3	4.4	-

주: 2026년은 추정 기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계획

자료: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원금 및 이자 상환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82.5조원에서 2025년에는 144.8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7년에는 167.0조원까지 증가할 계획이다. 이자지출의 경우 동 기간 18.2조원에서 40.4조원으로 증가하여 2배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021~2027년 국고채 원금 및 이자 상환규모]

(단위: 조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국고채원금상환	64.3	74.2	104.7	108.4	114.5	116.2	126.6
국고채이자상환	18.2	20.1	24.0	27.7	30.3	34.4	40.4
합 계	82.5	94.3	128.7	136.1	144.8	150.6	167.0

주: 1. 2025년 이후 개인투자용 국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액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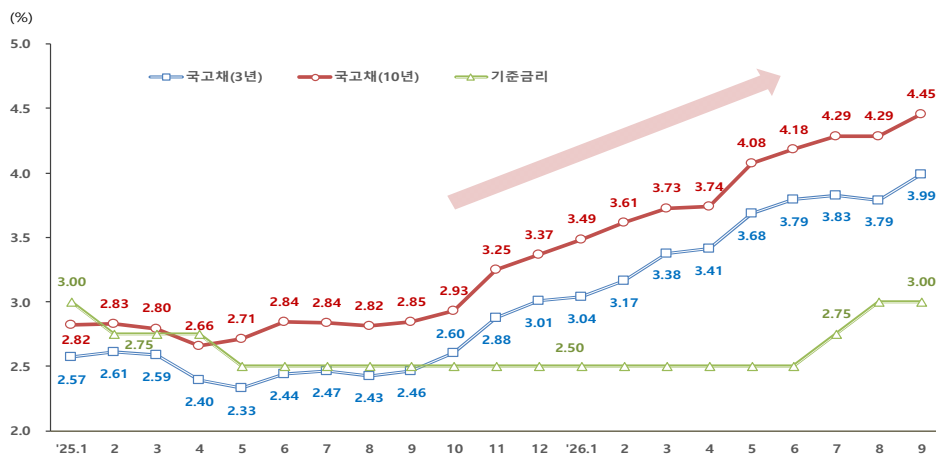
2. ~2025년 결산 기준, 2026년 이후 계획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가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확장적 재정기조에 따라 중기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여 국고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 상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고채 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국고채 3년물 및 10년물 금리는 2025년 5월 이후 전반적 상승세를 지속하며 2025년 5월 기준 각각 2.33%, 2.71%에서 2026년 9월 기준으로는 각각 3.99%, 4.45%로 상승한바, 국고채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준금리가 2026년 7월, 9월에 0.25%p씩 인상되었고, 금리인상의 초입임을 고려할 때 금리의 상방압력은 일정기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국고채 및 기준금리 추이]



주: 국고채는 월평균 금리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출은 의무지출이며, 이자상환을 위한 재정지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정운용상의 경직성이 확대되고, 재정수입 증가 또는 재정지출 감소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이자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도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하게 되어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가 추가적인 국고채 발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의 증가 추이 및 그에 따른 이자지출소요 등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 대미투자 및 고환율 등 대외 환경에 따른 위험 요인

(1) 대미투자에 따른 지출소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대미투자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한미전략투자채권을 국가보증 채무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부로부터 차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국가보증 방식의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과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의 규모 및 위험성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025년 2월 10일과 3월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특정 제품군 외에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기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4월 5일(토) 자정부터 모든 수입품 대상 기본관세 10%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당초 4월 9일(수) 자정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특정 국가들은 별도로 지정된 상호관세율이 적용되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25%의 상호관세율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었으나, 9일(수)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를 90일 유예하였고, 12일(토) 일부 품목(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종료를 앞둔 2025년 7월 31일 관세율을 15%로 조정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하였고, 이와 함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였다. 또한, 2025년 8월 양국 정상 회담 시 국내 주요 대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원전, 전력, 바이오, 에너지 등에 약 1,500억 달러(총 209조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이후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이행방안에 대해 한미 양국 간 의견 조율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었고, 2025년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총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 달러의 상환을 두기로 했고, 1,500억 달러는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을 통한 직접투자와 보증 등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 발표 주요 경과]

일자	내용
2025.2.10.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대해 3월 12일부터 25% 관세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 서명
2025.3.12.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발효(25%)
2025.3.26.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25% 관세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서명
2025.4.2.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수입품 대상 기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서명 - 4월 5일(토)부터 모든 수입품 대상 기본관세(10%) 적용 - 4월 9일(수)부터 국가별 상호관세율로 변경 적용(우리나라 25%)
2025.4.3.	미국 외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발효(25%)
2025.4.5.	모든 수입품 대상 기본관세(10%) 적용 정식 발효
2025.4.9.	美) 국가별 상호관세율 적용 90일 유예 발표
2025.4.12.	美)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 일부품목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 발표
2025.5.3.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발효(25%)
2025.6.4.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 50%로 상향
2025.7.31.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관세율 조정(25%→15%)에 합의 - 향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및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 -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관세율(50%) 유지
2025.8.26.	한미 정상 회담 개최 - 국내 주요 대기업 1,500억 달러 추가 대미 투자 발표
2025.10.29.	APEC 계기 한미 정상 회담에서 관세 협상 합의 - 총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 현금 투자(연간 200억 달러 한도) -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보증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후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이하 “전략적투자”라 함)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투자법’)을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가결하였고 3월 17일에 공포되어 2026년 6월 18일에 시행되었다. 동 법률에 따라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로 설립하였으며,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설립 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은 공사의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한다.¹⁰⁾ 한미전략투자채권은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나 정부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가 해당 채무를 보증할 경우 장학재단채권,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같이 국가보증채무로 분류되어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대미투자가 국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국가보증 방식의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과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및 위험성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한미전략투자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사업 추진 의사 및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회와의 협력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¹¹⁾

1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1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사의 출연금
2. 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3. 제42조제1항에 따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선협력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제1항제2호의 위탁자산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대미투자계정의 재원으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1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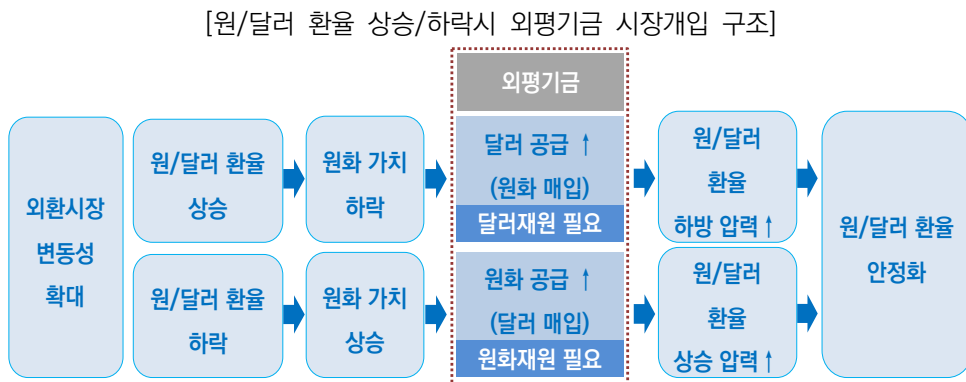
제51조(국회에 대한 사전 보고) ① 운영위원회가 제12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 또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

(2)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대응여력 검토 필요

첫째, 최근 대미 전략적 투자 가시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으로 외화 대응 여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바, 외환시장의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 재원에 대한 안정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기금의 대응여력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대내외불확실성 확대, 고물가·고금리, 외환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시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하락) 압력이 강화될 경우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달러(원화)를 공급하고 원화(달러)를 매입하는 형태의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외평기금의 달러(원화) 재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5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변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6년 들어와 외환시장 변동성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5년 이후 미 연준의 기준금리 방향성 및 조정 속도, 물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금융시장 내 자금 유출입 확대, 미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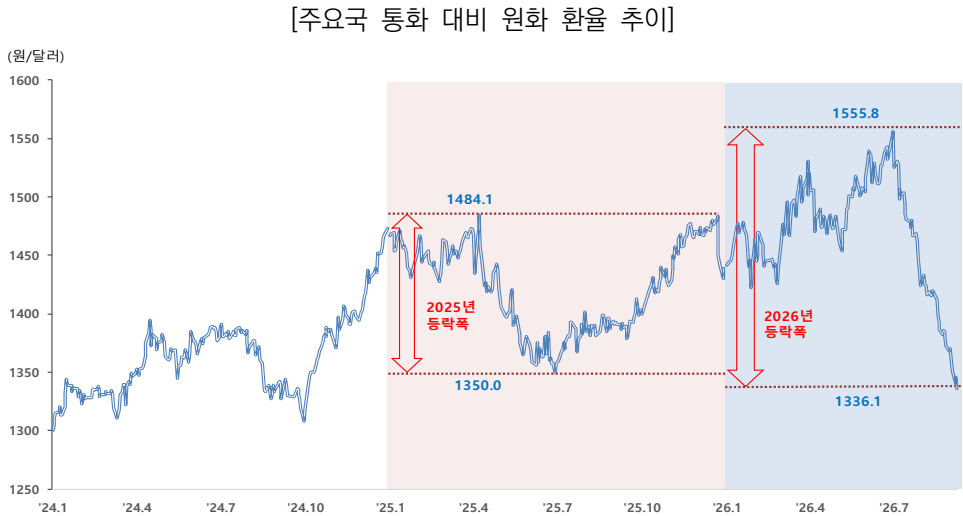
의결한 경우 정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위한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개최 시에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국회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요국 간 관세 불확실성 등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2025년 1~4월 1,430~1,480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였으나 6월말 1,350원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 상승세를 보이며 2026년 7월초 1,555.8원을 나타냈다.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9월 9일 기준 1,336.1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 중 일별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은 134.1원이었으나 2026년 1월 1일~ 9월 9일 중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은 219.7원으로 확대되었다.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한편, 외환시장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3분기~4분기 환율 변동성은 0.35~0.37% 수준이었으나 2026년 1분기~2분기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며 0.52~0.60%를 나타냈다.

[환율 변동성 추이]

(단위: 기간중 일평균,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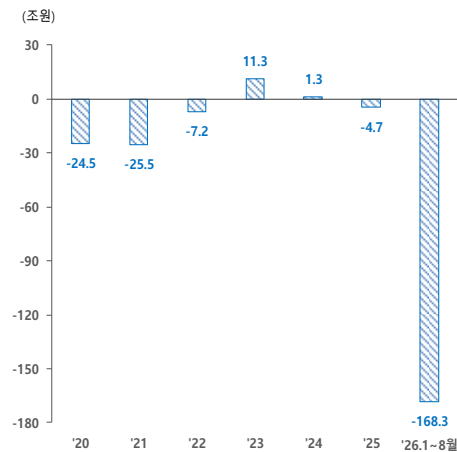
구분	2025년				2026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7월
변동폭	5.3	8.6	4.9	5.4	8.8	7.8	6.6	7.6	8.0
변동률	0.36	0.61	0.35	0.37	0.60	0.52	0.45	0.50	0.53

자료: 한국은행

또한 최근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하며 등락폭을 확대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2026년 7월까지 3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여 원/달러 환율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5년은 1,231억 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2026년 들어서도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1~7월 기준 2025년 연간 경상수지 대비 1,100억 달러가 증가한 2,33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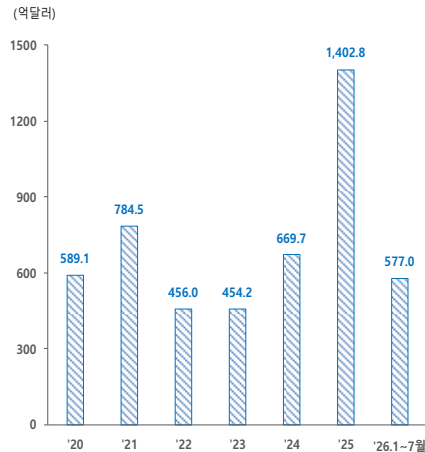
반면 최근 미·이란 무력충돌 등을 포함한 대외불확실성 확대는 안전자산 선호를 높여 환율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며,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이탈, 국외 주식투자 확대 등도 환율의 상방요인이다. 또한 2026년 6월 「한미전략투자법」 시행과 함께 연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점은 환율의 상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외국인 투자자 KOSPI 시장 순매입 추이]



자료: Fnguide

[우리나라의 해외증권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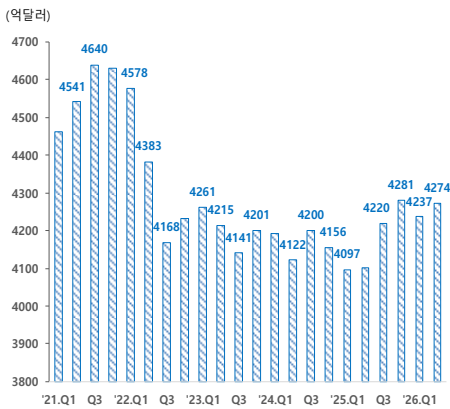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외환 대응여력을 살펴보면, 외환보유액은 2021년 3분기 4,64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5년 1분기에는 2021년 3분기 대비 543억 달러 감소한 4,09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5년 말 4,281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26년 2분기 4,274억 달러를 나타냈다. 다만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시장안정화조치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2024년 중 외환

당국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111.7억 달러 순매도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2024년의 2배를 상회하는 279.7억 달러의 순매도를 나타냈다. 2026년 1분기에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1,500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내 달러 순매도 규모는 136.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3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어 외환당국의 달러 순매도를 통한 시장안정화 조치 규모는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외환당국의 순거래액]

	(단위: 억달러)				
	2024년	2025년		2026	
	연간	연간	3/4	4/4	1/4
순거래	△111.7	△279.7	△17.5	△224.7	△136.3

주: 시장안정화를 위해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외환 순거래액

자료: 한국은행

정리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대내외불확실성, 글로벌 금융 및 물가 불안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외환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시장대응을 위한 원화 및 외화의 가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 대응여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 시 외평기금 등의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환율 변동성을 축소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공공기관 부채 확대

(1) 현 황

①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37개 공공기관

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국가재정법」 제9조의2¹²⁾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¹³⁾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¹⁴⁾에 근거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다. 2026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공기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개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총 37개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년도 대상 기관과 비교할 때,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5회계연도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여 신규로 추가되었다.

12)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25. 10. 1., 2026. 3. 10.>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부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2.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사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공공기관 현황]

구분		공공기관
공기업 (20개)	손실보전규정有 (3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u>한국광해광업공단</u>
	손실보전규정無 (17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주)강원랜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u>한국석유공사</u>
준정부기관 (17개)	손실보전규정有 (7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손실보전규정無 (10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철도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 밑줄로 표시된 기관은 자본잠식 기관임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②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공공기관(37개) 재무지표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공공기관(37개)의 2026~2030년 중장기 재무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자산 규모는 2025년(1,086.5조원) 대비 65.6조원 증가한 1,152.1조원으로 예상되고, 2030년에는 2026년 대비 305.8조원 증가한 1,457.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공공기관의 2026년 부채 규모는 2025년(720.0조원) 대비 58.3조원 증가한 778.3조원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은 208.2%로 전년(196.5%) 대비 11.7%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30년에는 부채 규모가 2026년 대비 219.1조원 증가한 997.4조원으로 확대되고, 부채비율도 216.6%로 8.4%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상 공공기관(37개)의 2026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2.0조원으로 2025년(12.8조원)보다 10.8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에너지 가격, 환율 상승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2028년 11.7조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감소하여 2030년에는 9.5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공공기관(37개)의 재무 실적 및 전망]

(단위: 조원, %, %p)

구분	2025(실적) (A)	2026 (B)	증감 (B-A)	2027	2028	2029	2030 (C)	증감 (C-B)
자산	1,086.5	1,152.1	65.6	1,221.4	1,305.3	1,381.9	1,457.9	305.8
부채	720.0	778.3	58.3	828.0	892.9	949.4	997.4	219.1
부채비율	196.5	208.2	11.7	210.5	216.5	219.5	216.6	8.4
당기순이익	12.8	2.0	△10.8	10.9	11.7	10.8	9.5	7.5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2026년 금융부채는 616.9조원으로, 2025년 568.0조원 대비 48.9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이후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동 기간 총 192.6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26~2030년 5년간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평균 54.6%,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평균 80.1%로 나타난다. 이는 전년도 계획(2025~2029년)의 평균(각각 50.2%, 76.2%)보다 높은 수준이다. 즉, 금융부채는 총자산의 54.6%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고, 총부채 중 80.1%가 금융부채로 구성됨에 따라 향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기관별 현금흐름 관리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37개)의 금융부채 전망]

(단위: 조원, %, %p)

구분	2025 (실적)(A)	2026 (B)	2027	2028	2029	2030 (C)	증감 (B-A)	증감 (C-B)	평균 (‘26~’30)
금융부채	568.0	616.9	659.4	712.7	767.4	809.5	48.9	192.6	713.2
총자산 대비	52.3	53.5	54.0	54.6	55.5	55.5	1.2	2.0	54.6
총부채 대비	78.9	79.3	79.6	79.8	80.8	81.2	0.4	1.9	80.1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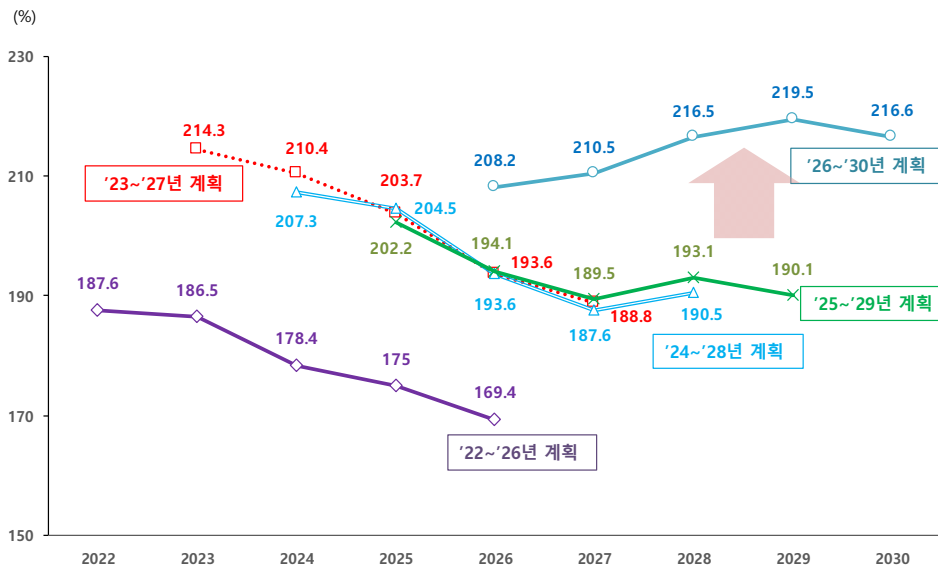
(2) 분석의견

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 상승 전망에 따른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가 미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2012년부터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6년 제출된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부채비율이 2026년 208.2%에서 2029년 219.5%까지 상승한 후 2030년 216.6%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전년도 계획(2025년 202.2% → 2029년 190.1%) 대비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추정) 및 실적치]



주: 각 연도별 표식은 실적치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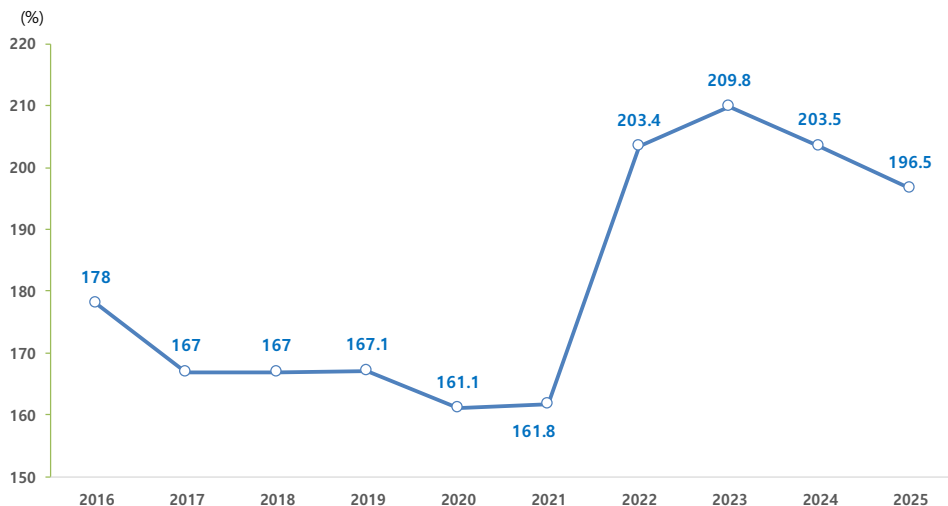
자료: 각 연도별 기획예산처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전체 공공기관의 연도별 실제 부채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부채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공공기관의 실제 부채비율은 2016년에는 178%,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161.1~

167.1%로 5년간 160%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채 등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부채비율은 203.4%로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8~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예측한 2022년 부채비율 156~187.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후 부채비율은 2023년 209.8%, 2024년 203.5%로 20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5년 196.5%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26~2030년 계획」은 2026년부터 다시 200%를 초과하여 2029년 219.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부채비율 200% 미만’을 부채관리 목표로 설정하였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므로 부채비율 상승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공공기관 부채비율(실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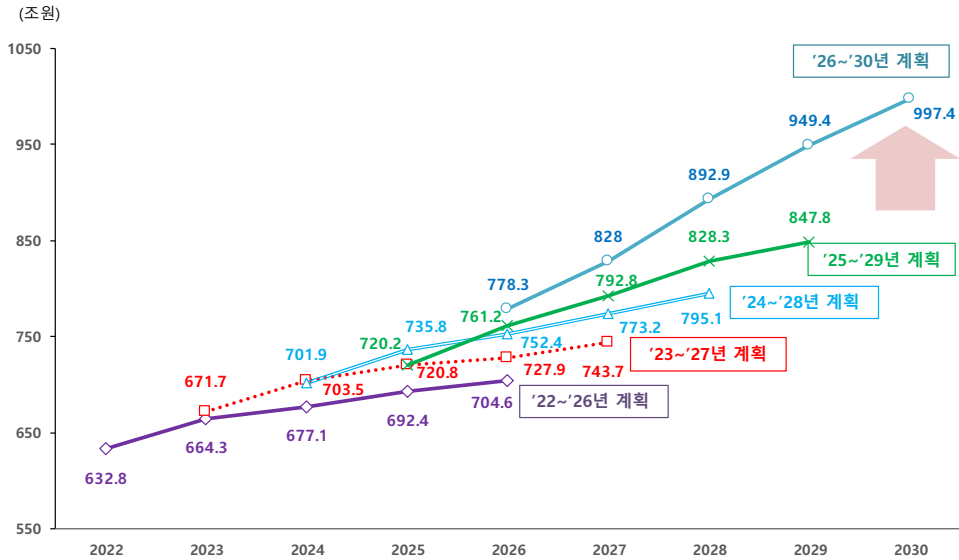


자료: 각 연도별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부채규모 전망치도 부채비율과 유사하게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3년 정부의 부채관리계획 시행 이후 2014~2018년 계획에서는 부채규모가 최대 510조원대로 전망되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부채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6~2030년 계획」에서는 부채규모가 2025년 말 실적치 720.0조원에서 2026년 778.3조원, 2030년 997.4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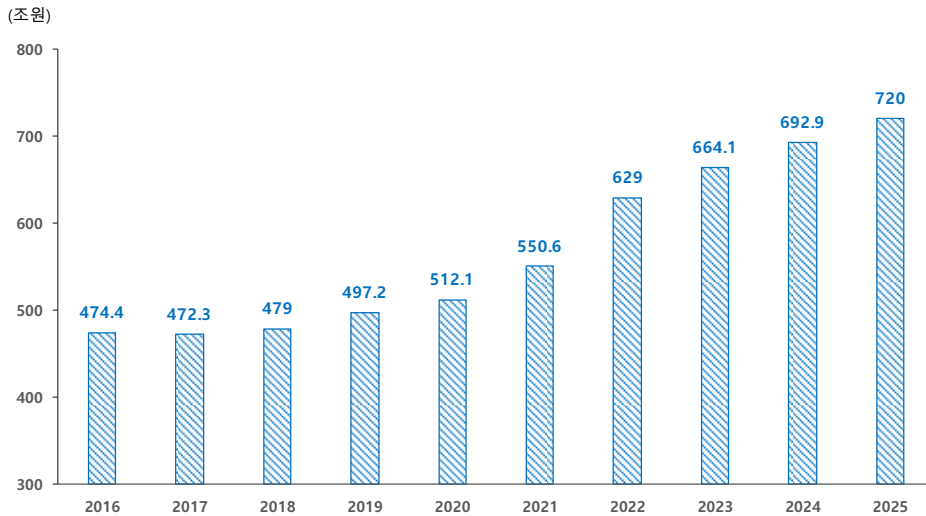
[연도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규모(추정) 및 실적치]



자료: 각 연도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 전체 공공기관의 연도별 실제 부채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부채규모는 2013~2017년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472.3조원에서 2025년 720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공공기관 부채규모(실적치)]



자료: 각 연도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제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2030년 계획」상 37개 대상 기관 중 24개 기관의 부채가 2026년 대비 2030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기관의 부채 증가액은 총 249.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26년 197.5조원에서 2030년 372.8조원으로 175.3조원(88.8%) 증가하여, 24개 기관 증가액의 70.2%를 차지한다.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2026년 대비 2030년 부채증가 기관]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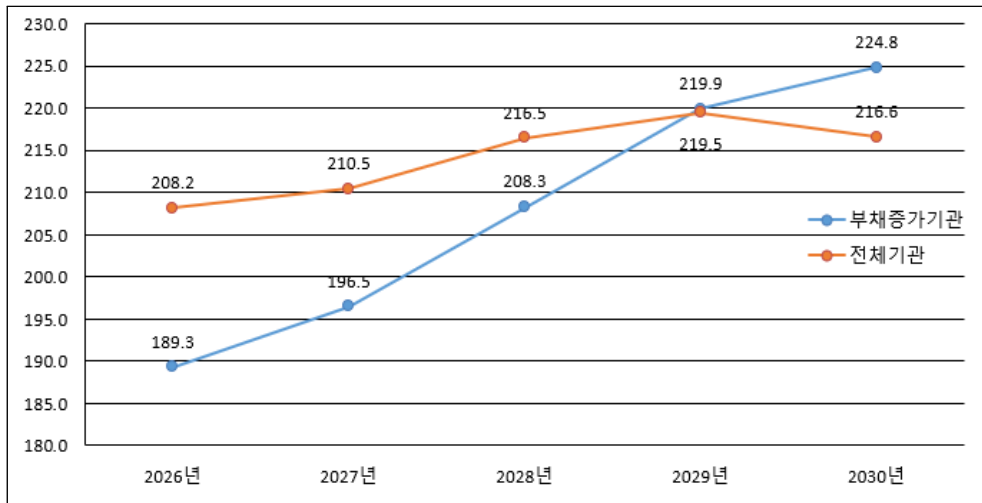
구분		2026 (A)	2027	2028	2029	2030 (B)	차이	
							금액 (C=B-A)	비율 (C/A)
SOC (6개)	국가철도공단	21.8	22.8	24.2	25.1	25.1	3.3	15.1
	인천국제공항공사	7.49	7.50	7.28	7.31	7.60	0.11	1.5
	한국공항공사	2.0	2.5	2.7	3.0	3.3	1.3	65.0
	한국도로공사	47.9	50.4	52.0	54.2	56.7	8.8	18.4
	한국수자원공사	11.8	12.4	14.1	16.1	18.5	6.7	56.8
	한국토지주택공사	197.5	236.2	287.9	334.8	372.8	175.3	88.8
에너지 (7개)	한국남동발전	7.9	8.4	9.1	9.1	10.9	3.0	38.0
	한국남부발전	7.5	8.0	9.3	10.6	11.3	3.8	50.7
	한국동서발전	6.3	7.4	9.1	10.7	12.0	5.7	90.5
	한국서부발전	8.4	8.7	9.1	9.4	9.6	1.2	14.3
	한국수력원자력	54.7	56.6	59.8	63.7	66.8	12.1	22.1
	한국전력공사(별도)	122.9	124.5	124.4	126.2	132.3	9.4	7.6
	한국중부발전	9.93	9.67	10.15	10.08	10.24	0.31	3.1
금융 (6개)	국민건강보험공단	21.1	21.8	22.3	22.9	23.3	2.2	10.4
	기술보증기금	1.99	2.32	2.14	2.10	2.02	0.03	1.5
	신용보증기금	3.98	4.19	4.24	4.17	4.05	0.07	1.8
	주택도시보증공사	2.2	2.2	4.2	5.2	5.7	3.5	159.1
	한국무역보험공사	3.16	3.17	3.19	3.22	3.25	0.09	2.8
	한국장학재단	11.7	12.0	12.4	12.8	13.2	1.5	12.8
기타 (5개)	강원랜드	0.88	0.89	0.93	0.97	0.98	0.10	11.4
	근로복지공단	3.0	4.1	5.2	6.5	7.9	4.9	16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0	0.19	0.20	0.20	0.21	0.01	5.0
	한국농어촌공사	17.5	19.1	20.5	21.9	22.6	5.1	29.1
	한국산업단지공단	1.4	1.6	2.0	2.4	2.5	1.1	78.6
부채증가 기관 합계(24개)		573.1	626.5	696.3	763.4	822.9	249.8	43.6
전체 기관(37개)		778.3	828.0	892.9	949.4	997.4	219.1	28.2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2030년 계획」 수립 대상 기관의 총 부채비율은 2026년 208.2%에서 2030년 216.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채가 증가하는 24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2026년 189.3%로 전체 대상 기관 평균보다 낮지만, 2030년에는 224.8%로 전체 대상 기관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연도별 부채비율 전망]

(단위: %)



주: 부채증가 기관(24개)은 기관별 재무전망 수치로 산출(한국전력공사는 별도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025년 기준 정부로부터 전체 공공기관이 지원받은 정부순지원수입¹⁵⁾은 총 140.1조원에 달하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출자금 등 다양한 지원유형을 포함하고 있는바, 유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일정 수준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에는 정부의 출자 등 재정지원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15) 정부순지원수입이란 국회에서 의결되는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으로서 출연금, 출자금,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위탁수입, 기타수입 등을 말한다. 정부순지원수입은 해당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된 공공기관의 수입이므로, 보조 또는 기금 전입 자금의 단순 전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하지 않는 자금과 민간으로부터의 전입액 등 정부 외 주체로부터의 수입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정부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계획대로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가 정부 재정의 추가적인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¹⁶⁾)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2024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총지출 증가폭이 총수입 증가폭을 상회하며 공공부문 수지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고, 이는 공공부문 부채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25년 공공부문 총수입은 1,192.1조원으로 2024년(1,139.1조원)에 비해 53.0조원(4.7%)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재산소득 수취가 줄어들었으나 조세수입, 사회부담금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2025년 1,275.2조원으로 2024년(1,208.1조원)에 비해 67.0조원(5.5%) 증가하였으며, 주로 기타경상이전, 최종소비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에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83.1조원 적자로 2024년(△69.1조원)에 비해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공공부문 주요 재정지표]

(조원, %, %p)

	2020	2021	2022	2023	2024 (C)	2025 (D)	차이 (D-C)
총수입(A)	887.1 (1.0)	995.6 (12.2)	1,118.2 (12.3)	1,119.2 (0.1)	1,139.1 (1.8)	1,192.1 (4.7)	53.0
조세 ²⁾	392.6	463.3	520.2	467.1	456.8	502.0	45.2
매출액 등 ³⁾	201.3	220.9	254.5	264.5	266.5	268.4	1.9
사회부담금 ⁴⁾	183.8	197.4	215.1	229.9	240.3	251.5	11.1
재산소득 수취 ⁵⁾	57.9	58.9	74.7	100.9	113.9	108.4	-5.4

16) 공공부문에 포함된 공기업은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117개,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43개, 중앙정부 금융공기업 12개 등 총 172개로, 앞서 공공기관 부채 분석대상 37개 공공기관과는 차이가 있다.

(조원, %, %p)

	2020	2021	2022	2023	2024 (C)	2025 (D)	차이 (D-C)
총지출(B)	946.2 (9.6)	1,023.3 (8.1)	1,176.9 (15.0)	1,168.3 (△0.7)	1,208.1 (3.4)	1,275.2 (5.5)	67.0
최종소비지출 ⁶⁾	349.6	378.3	409.9	428.1	447.5	469.2	21.7
사회수혜금 ⁷⁾	127.9	138.7	157.1	164.5	177.5	192.6	15.2
투자 ⁸⁾	136.1	142.5	158.3	158.0	164.1	171.8	7.7
기타경상이전 ⁹⁾	120.8	130.5	145.5	108.2	119.7	144.0	24.2
수 지(A-B)	△59.1	△27.7	△58.7	△49.1	△69.1	△83.1	△14.0
명목GDP 대비 비율							
총수입	43.1	44.8	48.0	46.5	44.4	44.5	0.1
총지출	46.0	46.0	50.6	48.5	47.1	47.6	0.5
수지	△2.9	△1.2	△2.5	△2.0	△2.7	△3.1	△0.4

주: 1)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3) 일반정부 상품비상품판매수입+공기업 매출액

5) 이자, 배당금 수입 등

7) 기초연금, 국민연금 지급액 등

9) 민간으로의 지원금 등

2) 생산 및 수입세 + 경상세 + 자본세

4)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수취액

6) 정부서비스 생산비용, 건강보험 급여비 등

8) 총고정자본형성 + 재고증감

자료: 한국은행

공공부문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는 공공부문의 부채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공적연금 총당부채 적절한 관리 필요

공적연금 총당부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향후 국가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나 미래에 지급해야 할 부채라는 점에서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 총당부채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연금수급자에게 향후에 지급해야 할 부채로,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미래에 지급해야 할 부채라는 점에서 공적연금 관련 장기 재정부담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는 4개 공적연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연금총당부채와 퇴직수당총당부채를 총당부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이러한 총당부채를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인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¹⁷⁾. 「연금 회계처리지침」(재정경제부예규)¹⁸⁾은 이처럼 국가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되는 연금총당부채 및 퇴직수당총당부채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한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국가를 위해 근로서비스를 제공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향후에 국가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교환거래에 해당하며, 이와 같이 '재화 및 용역의 수취 대가로 미래 금전·기타자원의 제공 약속이 있는 거래'가 있을 경우 관련 연금총당부채를 국가의 부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에 국가와의 '교환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에 따라 연금총당부채를 국가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2025년 국가재무제표에서 인식한 연금총당부채의 합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총당부채는 1,076.4조원으로 전년 대비 24.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군인연금총당부채 등은 268.1조원으로 전년 대비 7.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

17)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② 부채는 차입부채, 총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21조(총당부채) 총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총당부채, 퇴직수당총당부채, 보증총당부채, 보험총당부채 및 기타 총당부채를 말한다.

18) 「연금 회계처리지침」(재정경제부예규) 연금총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

4. (연금총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 (1) "연금총당부채"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하여 인식하며, 「공무원연금법」제28조 급여와 「군인연금법」 제7조의 급여 중 아래의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제7조의 급여 중 상이연금을 추가로 포함한다.

금충당부채 등이 국가재무제표상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50.8%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5년 기준 48.5%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재무제표 인식 연금충당부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A)	2025(B)	증감(B-A)	연평균 증가율
연금충당부채(A)	1,138.1	1,181.3	1,230.2	1,312.9	1,344.4	31.5	4.3
- 공무원연금	904.5	939.7	985.0	1,052.3	1,076.4	24.1	4.4
- 군인연금	233.6	241.6	245.2	260.6	268.1	7.5	3.5
부채(B)	2,195.3	2,326.0	2,439.5	2,585.7	2,772.0	186.3	6.0
부채 대비 (A/B)	51.8	50.8	50.4	50.8	48.5	-	-

주: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재직자와 연금수급자의 평가시점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 향후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달리 연금충당부채가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와 함께 제출되는 연금보고서에는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 연금사업의 기금운용 현황과 수입·지출, 장기재정추계 등만 적시되어 있을 뿐 연금충당부채의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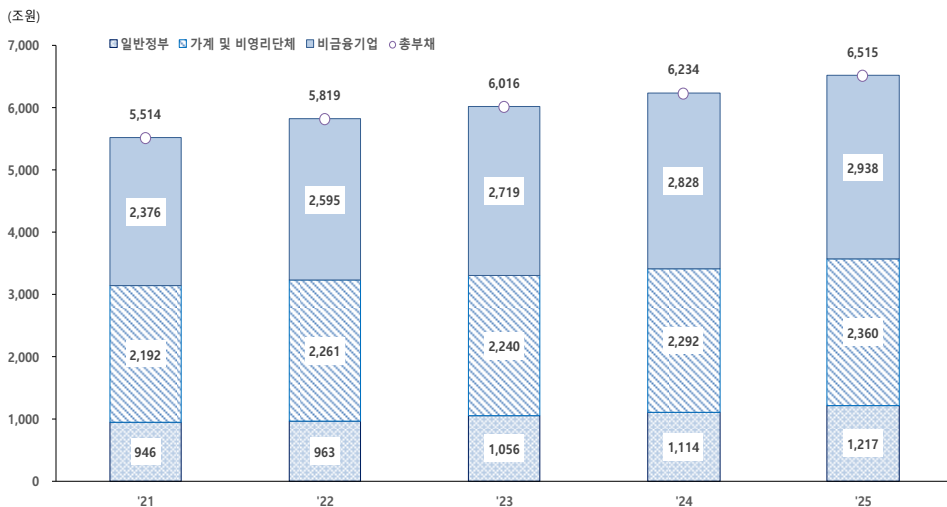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대한민국 사회보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2049년 적립금이 최고점에 이른 후 2050년부터 기금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2069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2028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42년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연금 적립금 고갈 후에는 연금소요를 보충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 지급소요와 재원 부족 가능성을 추계·공개하고, 국가재무제표상 부채 인식 여부는 회계기준 및 법적 지급의무를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역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과 같이 공적연금에 해당하며, 해당 연금들의 충당부채는 향후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부채라는 점에서 동 연금들의 충당부채에 대해서도 그 규모를 공개하고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바. 가계와 기업부문의 부채를 포함한 총부채 증가

우리나라의 총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이미 G20 국가의 평균 수준에 도달해 있는 점, 과거 국내외 경제·금융위기 발생 시 기업 등 민간부채의 부실이 공적자금 등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된 사례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채무뿐 아니라 민간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에 대한 관리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과 일반정부 부문의 부채를 포괄하는 총부채 규모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총부채는 2021년 5,514조원 수준에서 2025년 말 기준 6,515조원으로 2021년 말 대비 1,001조원(18.1%) 증가하였다. 부문별 부채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비금융기업 부채는 2021년 말 대비 2025년 말 562조원(23.7%)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는 167조원(7.6%), 일반정부 부채는 271조원(28.6%) 증가하였다. 한편 2025년 우리나라 총부채는 2024년 대비 281조원 증가하였으며, 총부채 증가 중 비금융기업부채가 110조원, 일반정부 부채 103조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는 68조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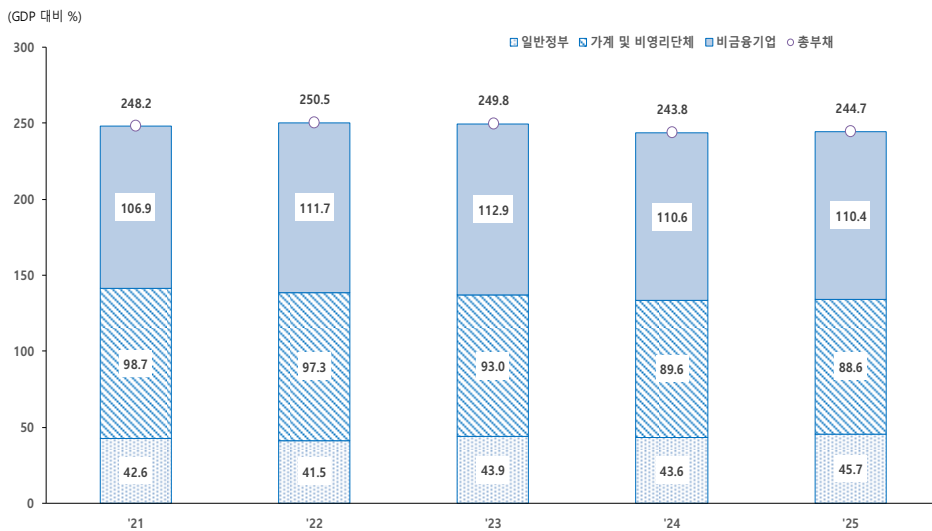
[우리나라 부문별 부채 및 총부채 추이]



주: 가계, 비금융기업, 일반정부 부채는 평가기준, 적용환율 등의 차이로 금액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자료: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21년 이후 240~250%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총부채는 2021년 248.2%에서 2022년 250.5%까지 상승한 이후 등락을 보이며 2025년 244.7%를 나타냈다. 부문별 GDP 대비 부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2021년 말 대비 2025년 3.5%p 상승하였으며, 동 기간 GDP 대비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는 10.1%p 하락, 일반정부 부채는 3.1%p 높아졌다.

[우리나라 부문별 부채 및 총부채 추이_GDP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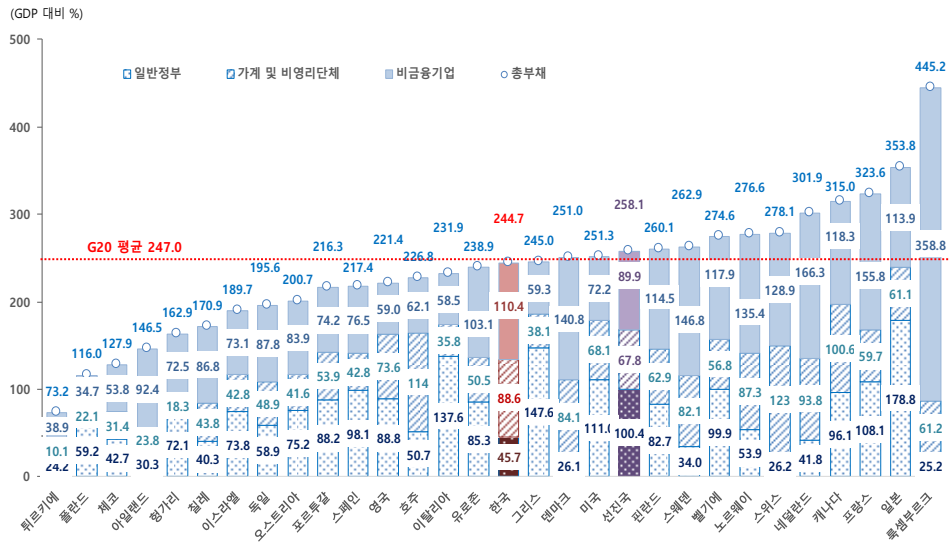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4.7%로 주요 28개 국가 중 14위 수준이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445.2%이다. 그 뒤로 일본(353.8%), 프랑스(323.6%), 캐나다(315.0%), 네덜란드(301.9%) 순이며, 미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51.3%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244.7%)은 BIS분류 기준 선진국¹⁹⁾ 평균 258.1% 대비 13.4%p 낮은 수준이나, G20 국가 평균인 247.0%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부문별 부채 및 총부채 규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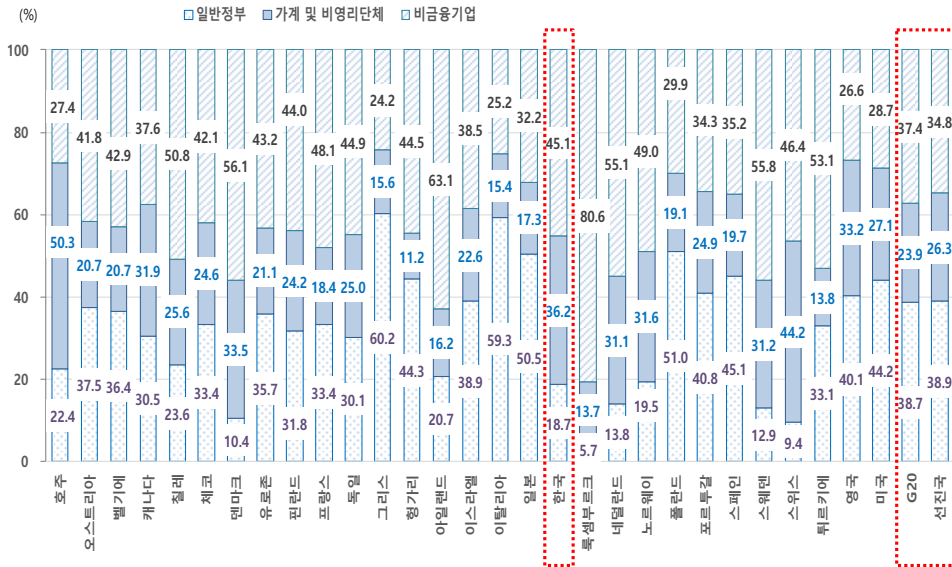
주: 2025년 말 기준

자료: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 총부채의 부문별 비중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총부채 중 비금융기업 부채가 45.1%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가 36.2%, 일반정부 부채가 1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일반정부 부채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을 하회하는 수준이나 민간 부문(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중은 81.3%로 선진국의 61.1% 대비 20.2%p 높은 수준이다. 이는 G20 국가 평균과 비교시에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총부채 중 민간부채 비중(81.3%)은 G20 국가 평균 61.3% 대비 20.0%p 높은 수준이다.

19) BIS는 1인당 소득, 글로벌 금융시스템 통합도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유로존 국가,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부문별 부채 및 총부채 비중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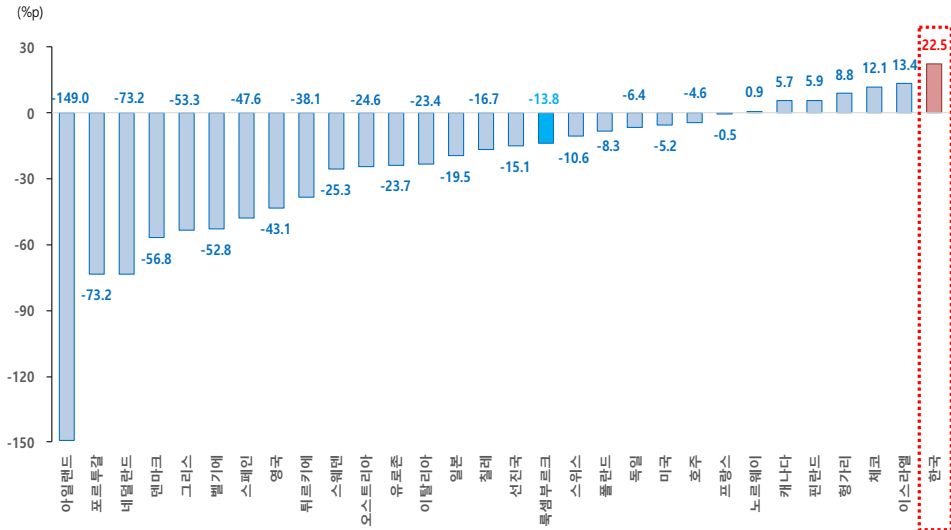


주: 2025년 말 기준

자료: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6년 6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 증가폭을 28개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2019년 대비 2025년 GDP 대비 총부채 비율 증가폭은 22.5%p로 주요 28개 국가 중 가장 큰 증가 규모를 나타냈으며, 동 기간 총부채 비율 증가폭이 한국에 이어 2위인 이스라엘(13.4%p)에 비해서도 9.1%p 차이를 보였다. 뒤로 체코(12.1%p), 헝가리(8.8%p), 핀란드(5.9%p), 캐나다(5.7%p), 노르웨이(0.9%p) 순이며, 2019년 대비 2025년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 국가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 국가는 동 기간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하락하였다. 주요국 중 2019년 대비 2025년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하락한 국가를 살펴보면 아일랜드(△149.0%p), 스페인(△47.6%p), 영국(△43.1%p), 일본(△19.5%p), 독일(△6.4%p), 미국(△5.2%p) 등이 있다.

[총부채 GDP 대비 증가폭 국제비교]



주: 2019년 말 대비 2025년 말 기준

자료: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26년 6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과거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등으로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시기에 금융기관이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출해 준 자금을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해 금융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정부가 공적자금²⁰⁾을 투입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 등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한 사례가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 민간부문의 부채가 일부 국가채무로 전환되었다. 실제 정부는 1997년 11월~2025년 6월까지 은행, 증권·투신, 보험, 저축은행 등에 168.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출자, 부실채권매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 부실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상환 책임을 정부가 직접 부담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된 규모는 49조원이다.

최근 가계 및 기업 부채 증가로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총부채가 6,500조원을 상회하였으며, GDP 대비 총부채 비율도 244.7%로 G20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채(가계와 비금융기업 부채)의 총부채 대비 비중이 주요 선진국(60% 수준)과 달리 총부채의 80%를 상회하고 있고 과거

20) 정부가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을 나타내며, 기업에 대출해 준 돈을 기업부도 등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해 금융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금융기업으로부터 정부가 부실채권을 싼 값에 사주거나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금융기업의 재무적 건전성 개선을 지원한다.

공적자금 등을 통해 민간부채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부채가 국가채무 증가로 연결된 사례가 존재하는 바 국가채무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재정기조 및 재정지출의 효과 분석

2027년 및 2028~2030년 재정기조를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FI)를 통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7년 예산안을 경기적 요인을 제외한 재정기조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2027년 예산안의 재정정책 기조는 FI¹⁾기준으로 2026년 대비 긴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국세수입 확대에 따른 재정수지 개선에 주로 기인한다.

재정정책 기조는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재정수지, 재정기조지표(a measure of fiscal stance: FIS)²⁾ 및 FIS의 전년도와의 차이를 의미하는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FI) 등 여러 가지 재정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정책 기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27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국세수입 증가로 2026년 추정 대비 25.7%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2027년 총지출은 2026년 추정 대비 9.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대비 2027년 예산안의 총수입 증가 폭이 총지출 대비 크게 나타나며 이에 관리재정수지는 2027년 △3.1조원(GDP 대비 △0.1%) 수준으로 2026년 추정 △107.6조원(GDP 대비 △3.8%) 대비 104.5조원(3.7%p) 개선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FI는 전년 대비 상대적 재정기조의 변화분을 의미하며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FI = \Delta \left(\frac{FIS}{Y} \right), \quad FIS = B^n - B, \quad B^n = t_0 Y - g_0 Y^*$$

여기서 FIS는 재정기조지표(a measure of fiscal stance)이며, Y 는 GDP, B 는 재정수지, B^n 은 구조적 재정수지, t_0 는 기준시점의 GDP 대비 재정수입, g_0 는 기준시점의 GDP 대비 재정지출, Y^* 는 잠재GDP를 의미한다. 즉, FIS는 $(t_0 \times \text{경상GDP} - g_0 \times \text{경상잠재GDP}) - \text{관리재정수지}$ 로 산출되며, FI는 $[(\text{금년 FIS} / \text{금년 경상GDP}) - (\text{전년 FIS} / \text{전년 경상GDP})] \times 100$ 으로 산출된다.

2) 재정기조지표는 자동안정화 기능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분을 통제된 상태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의 규모를 추정하여 재정기조의 확장성을 수량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이다.

반면 정부는 2028~2030년 총수입 증가율을 각각 4.5%, 3.4%, 3.4%로, 총지출 증가율은 각각 9.0%, 7.0%, 5.0%로 제시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2027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6년 대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2028~2030년에는 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관리재정수지는 2028년 $\Delta 48.0$ 조원(GDP 대비 $\Delta 1.5\%$)에서 2030년 $\Delta 100.8$ 조원(GDP 대비 $\Delta 2.9\%$)로 악화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지표를 통한 재정기조 분석 결과]

(단위: 조원, %)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추경	2027 예산안	2028 계획	2029 계획	2030 계획
총수입 (증가율)	573.9 ($\Delta 7.1$)	594.5 (3.6)	637.4 (7.2)	700.6 (9.9)	880.8 (25.7)	920.5 (4.5)	951.8 (3.4)	984.6 (3.4)
총지출 (증가율)	610.7 ($\Delta 10.5$)	638.0 (4.5)	684.1 (7.2)	753.0 (10.1)	820.9 (9.0)	894.6 (9.0)	957.4 (7.0)	1,005.2 (5.0)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Delta 87.0$ ($\Delta 3.6$)	$\Delta 104.8$ ($\Delta 4.1$)	$\Delta 104.2$ ($\Delta 3.9$)	$\Delta 107.6$ ($\Delta 3.8$)	$\Delta 3.1$ ($\Delta 0.1$)	$\Delta 48.0$ ($\Delta 1.5$)	$\Delta 83.4$ ($\Delta 2.5$)	$\Delta 100.8$ ($\Delta 2.9$)
FIS	31.8	45.8	37.4	34.2	$\Delta 72.7$	$\Delta 30.5$	2.3	16.6
FI	$\Delta 1.6$	0.5	$\Delta 0.4$	$\Delta 0.3$	$\Delta 3.1$	1.2	0.9	0.4

주: 1. FI 산출 시 적용된 2026~2030년 GDP 및 잠재GDP의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므로 정부의 산출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2026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으로 경기적 요인을 제외한 재정기조는 FI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FI는 전년 대비 상대적 재정기조 변화를 의미하며 FIS의 전년 대비 증감분으로 계산된다. 세부적으로 FIS 및 FI 지표는 잠재GDP³⁾ 등을 활용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의 자동적인 증감 부분을 제외하고 산출하는데, FI가 양(+)의 값을 가지면 전년도에 비하여 확장적, 음(-)의 값을 가지면 전년도에 비하여 긴축적임을 의미한다.

2027년 예산안의 FI는 2026년 추경 대비 $\Delta 3.1$ 로 전년대비 긴축적인 재정기조를 나타낸다. 이는 2027년 총수입이 전년대비 180.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3) 잠재GDP 성장률은 2026~2030년 2.2~2.3%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7년 NABO 경제전망」2026.9.)

가운데 총지출은 67.9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며 관리재정수지가 2026년 대비 104.5조원 개선된 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2026년 대비 9.0% 증가할 계획이나 2027년 총수입은 전년대비 25.7% 증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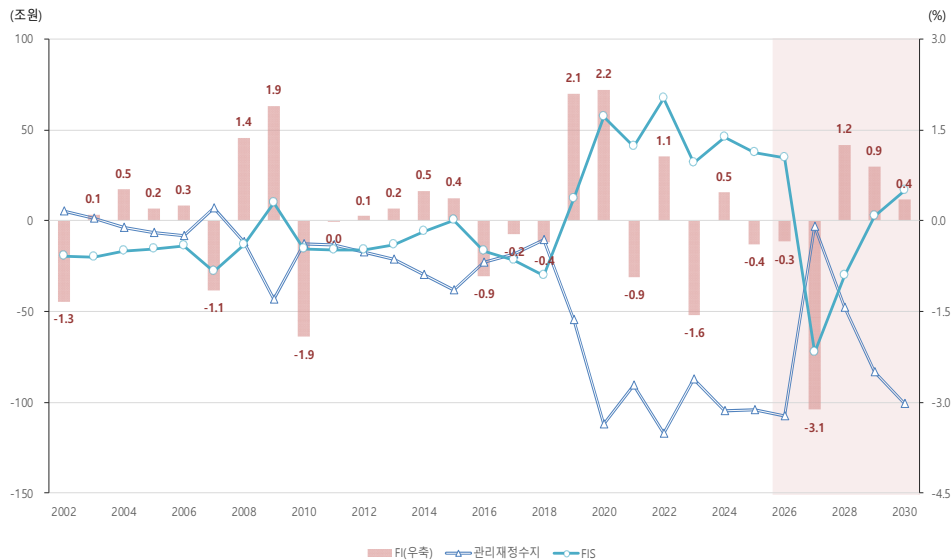
한편 FI는 전년과 비교하는 상대적 지표로서 기저효과 등의 영향을 받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정부의 중기 재정기조(2028~2030년)는 전년 대비 확장적 재정기조(FI 기준 0.4~1.2)를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8년~2030년 재정기조를 연도별 FI지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2028년 1.2, 2029년 0.9, 2030년 0.4로 양(+)의 FI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28~2030년 전년 대비 확장적 기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성장모멘텀 확보,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방향과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재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8~2030년 전년 대비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기조 지표(관리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 FIS, FI) 추이]



주: 2001~2025년은 결산, 2026년 추정, 2027년 이후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편, 「2026~2030년 NABO 재정전망」에 나타난 중기 재정기조(2027~2030년)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재정기조와 동일하게 2027년은 긴축적인 재정기조가 나타나며 2028~2030년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총수입의 경우 2026~2030년 정부 계획 대비 NABO 재정전망이 연도별로 9.4~83.4조원 더 큰 규모로 예상하였다. 총지출은 2026년~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이 정부 계획 대비 3.4~30.6조원 큰 규모로 전망되었다. 이에 관리재정수지는 NABO 재정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5.2~63.0조원 더 개선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반영한 재정정책 기조는 재정충격지수(FI)를 기준으로 2027년은 음(-)의 FI 값으로 전년 대비 긴축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며, 2028~2030년은 양(+)의 FI 값이 나타나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한 재정정책 기조이다.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재정지표를 통한 재정기조 분석 결과]

(단위: 조원, %)

구분	2026 전망	2027 전망	2028 전망	2029 전망	2030 전망
총수입 (증가율)	784.0 (23.0)	890.2 (13.5)	933.6 (4.9)	971.9 (4.1)	1,012.1 (4.1)
총지출 (증가율)	756.5 (10.6)	827.2 (9.4)	909.1 (9.9)	982.4 (8.1)	1,035.8 (5.4)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44.6 (△1.4)	4.3 (0.1)	△41.8 (△1.1)	△78.3 (△2.0)	△92.1 (△2.3)
FIS	△28.8	△80.1	△36.7	△2.8	7.9
FI	△2.3	△1.4	1.3	0.9	0.3

주: FI 산출 시 적용된 2026~2030년 GDP 및 잠재GDP, 재정지표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이므로 정부의 산출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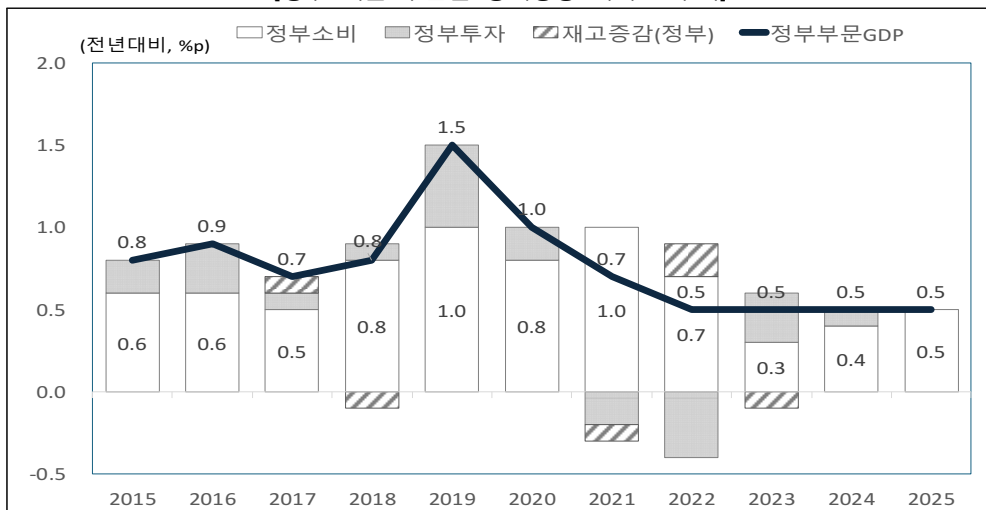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 2025년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

2025년 정부 부문의 실질 경제성장 기여도는 0.5%p를 기록하며 4년째 예년 평균 기여도 0.7%p(2001~2025년 평균)를 밑돌았다. 이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상당 폭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간의 소비여력 보강에 주안점을 두면서 그 추경의 경제적 효과가 민간소비 등 정부 이외 GDP 항목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국민소득 통계는 정부재원이 민간으로 이전되어 지출되는 경우 이를 정부의 최종 지출이 아니라 민간의 최종 지출(소비나 투자)로 인식한다.

지출 부문별로는 정부소비 기여도가 2024년 0.4%p에서 2025년 0.5%p로 높아졌으나 정부투자 기여도는 0.1%p에서 0.0%p로 낮아지며 전체적으로는 2024년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 지출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추이]



주: 공식 통계가 제공되지 않는 정부 부문 재고증감의 성장기여도는 정부 부문 전체 성장기여도에서 정부 소비 및 투자 성장기여도 합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산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부문의 지출 부문별 실질GDP 성장률 기여도 추이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음영은 성장기여도가 이례적으로 낮았던 해를 의미한다.¹⁾

[민간과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 추이]

(단위: %, %p)

연 도	실질GDP 성장률(%)	민간부문	정부부문	(정부소비)	(정부투자)
2001	4.7	4.0	0.9	0.6	0.2
2002	7.7	7.1	0.6	0.7	0.0
2003	3.1	2.0	1.1	0.6	0.6
2004	5.2	4.5	0.7	0.5	0.1
2005	4.4	3.7	0.6	0.6	△0.1
2006	5.2	4.3	0.9	0.9	0.0
2007	5.8	5.0	0.9	0.8	0.1
2008	3.0	2.4	0.6	0.6	0.0
2009	0.8	△1.3	2.2	0.9	1.2
2010	7.0	7.1	△0.1	0.8	△0.8
2011	3.7	3.6	0.1	0.4	△0.3
2012	2.5	2.0	0.5	0.6	△0.1
2013	3.3	2.4	0.9	0.7	0.2
2014	3.2	2.8	0.4	0.6	△0.3
2015	2.9	2.2	0.8	0.6	0.2
2016	3.2	2.3	0.9	0.6	0.3
2017	3.4	2.8	0.7	0.5	0.1
2018	3.2	2.4	0.8	0.8	0.1
2019	2.3	0.8	1.5	1.0	0.5
2020	△0.7	△1.8	1.0	0.8	0.2
2021	4.7	4.1	0.7	1.0	△0.2
2022	2.9	2.5	0.5	0.7	△0.4
2023	1.5	0.9	0.5	0.3	0.3
2024	2.2	1.6	0.5	0.4	0.1
2025	1.1	0.6	0.5	0.5	0.0
평 균	3.5 (1.88)	2.7 (2.10)	0.7 (0.44)	0.7 (0.18)	0.1 (0.37)

주: 1. 음영은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이례적으로 낮았던 해를 의미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2001~25년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인 0.26%p를 밑도는 경우)

2. 굵은 선은 최근 5 회계연도를 의미

3. 평균은 기간중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였으며 ()내는 표준편차

자료: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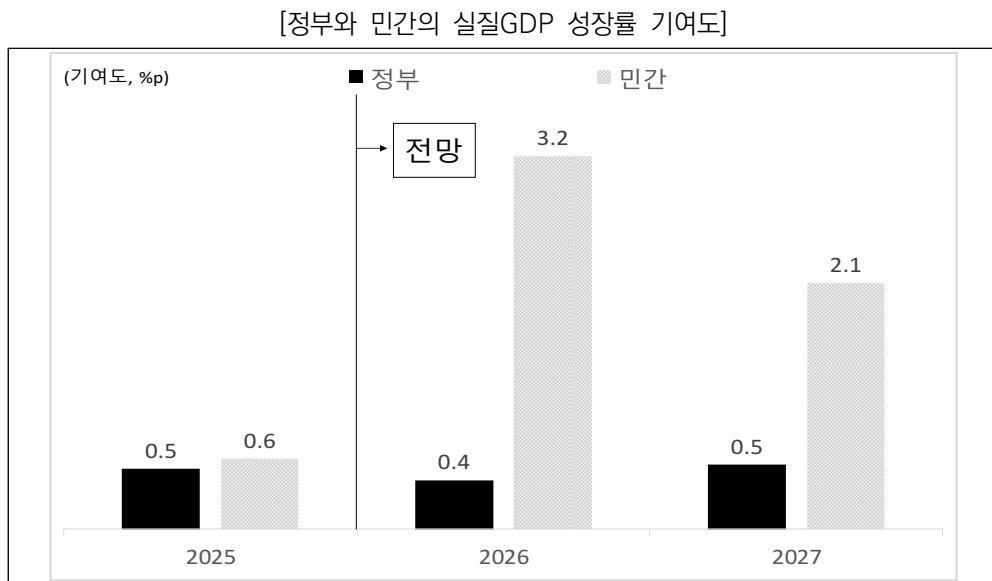
1)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2001~25년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인 0.26%p를 밑도는 경우를 이례적인 해로 판단하였다.

나.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 전망

정부부문의 실질GDP 성장기여도는 2026~2030년 중 0.5%p로 2021~2025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중앙정부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4%로 이전 5년의 4.1%(국회확정예산 기준)에 비해 두 배 이상이지만 국민소득 통계 상의 정부소비 및 투자와 직접 연관된 지출의 확대 속도가 민간투자와 수출의 증가율을 밑돌면서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1) 2026년 및 2027년 전망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2027년 0.5%p, 2026년 0.4%p로 2025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2027년 총지출 규모가 2026년 본예산 대비 12.8% 증가하여 예년의 평균 증가율 5.4%(2010~25년 평균)를 크게 상회하나, 국민소득 통계 상의 정부소비 및 투자와 직접 연관된 지출은 소폭 증가에 그치기 때문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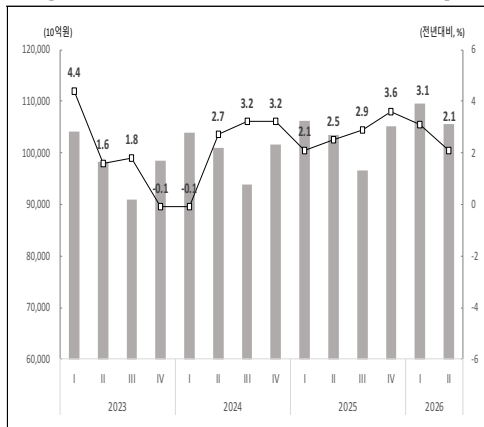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2)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예산안의 지출내역을 국민계정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여 추산한 결과를 보면, 2027년 예산안의 국민계정 기준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는 2026년 국회확정예산(추경포함) 대비 각각 5.5%, 7.6% 증가하여 예년 평균(2010~2025년) 4.2%와 6.2%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BOX]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정부GDP 전망”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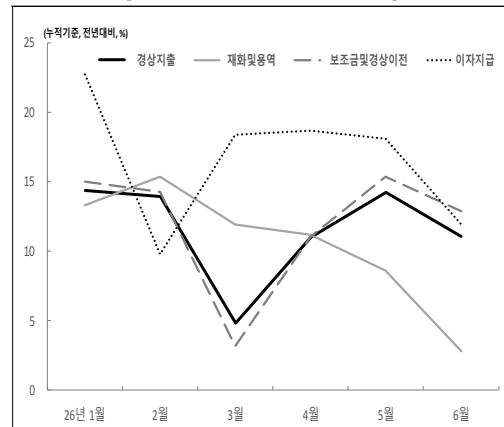
2027년 실질정부소비는 재정지출 증가세 확대, 건강보험급여비³⁾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0% 늘어 2026년(2.8%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 통합재정 총지출(396.5조원) 상 경상지출은 371.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1조원(11.1%)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소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 및 용역비는 52.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조원(2.8%) 증가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급여비 지급액은 2025년 94.7조원으로 전년(87.5조원)대비 8.2% 증가하여, 예년의 증가추세(2016~2024년 중 연평균 8.2% 증가)를 회복하였다. 2026년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48.2조원에 그쳤으나, 예년의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 중에는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 중 정부소비는 재화 및 용역비, 건강보험급여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여, 연간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할 전망이다.

[실질정부소비의 분기별 증감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합재정 경상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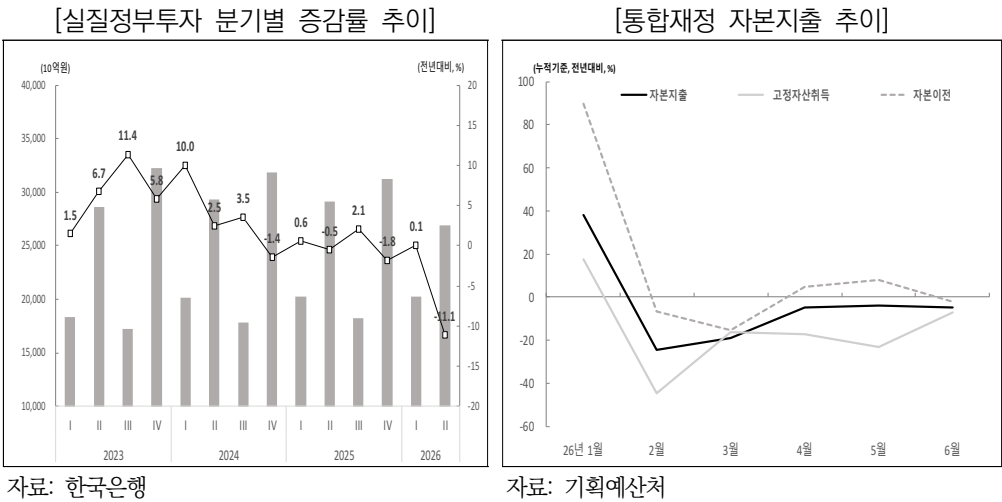


자료: 기획예산처

2027년 실질정부투자는 R&D 분야와 지역 및 도시 부문, 물류 등의 SOC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2.0% 늘어 2026년(△1.4%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 중 실질정부투자는 1/4분기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하고 2/4분기에는 11.1% 감소하며 전년대비 6.5% 감소하였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3) 건강보험급여는 무상급식과 함께 정부소비의 대표적인 사회보장현물수혜 항목이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이며, 2024년 기준 일반정부의 명목소비지출(447.5조원)에서 건강보험급여비가 포함된 사회보장현물수혜(145.5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피용자보수(169.5조원, 3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에 부진하였던 SOC 투자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겠으나, 연간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앙정부의 통합재정 자본지출은 고정자산취득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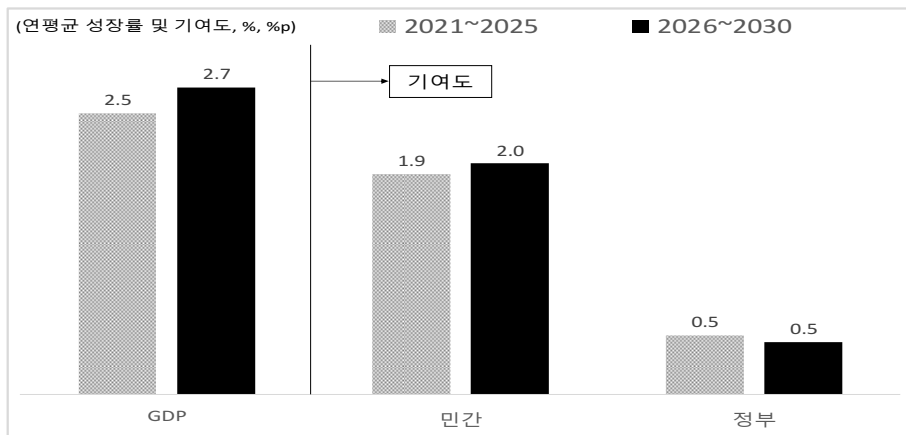


2027년 R&D 분야 예산(39.5조원)은 과학기술·통신 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2026년 본예산대비 4.0조원(11.2%) 확대 편성되어 정부부문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7년의 R&D 분야 예산 증가폭은 2026년 5.7조원(19.3%)에 비해 둔화된 것이다. 2027년 SOC 분야 예산(28.9조원)은 지역 및 도시부문, 물류 부문 등을 중심으로 전년(27.7조원)에 비해 1.2조원(4.0%) 확대 편성되었다. 그러나 증가폭은 도로와 철도부문을 중심으로 2026년(2.0조원, 8.3%)에 비해 축소되었다.

(2) 2026~2030년 전망

2026~2030년 기간 중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향후 5년 0.5%p로 이전과 비슷할 전망이다. 정부지출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사회보장현물수혜 관련 정부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4%로 총수입 증가율(연평균 9.9%)을 밑돌고⁴⁾, 동 기간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와 정부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7%, 1.2%로 전망된다.

[정부와 민간의 실질GDP 중기 전망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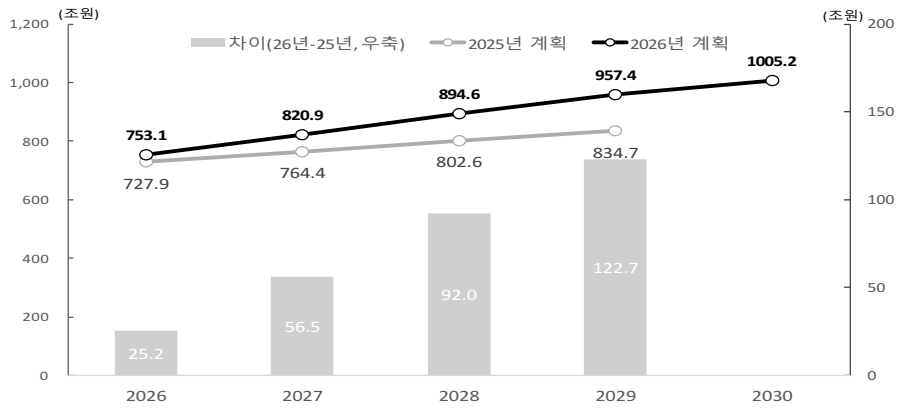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26~2030년 기간 중 실질정부소비는 연평균 2.7% 증가하여 지난 5년(2021~2025년, 연평균 3.3%)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재정 지출계획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비교가 가능한 2026~2029년 중 재정지출(총지출)은 연평균 74.1조원(의무지출 24.5조원, 재량지출 49.6조원) 확대 편성되었다. 확장적 재정운용기조가 전년보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무지출을 제외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2026~2030년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약 8.7%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⁵⁾

4)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산출한 증가율이다.

5) 2026년 71.2조원에서 2030년 99.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p. 44)

[2025년과 2026년 중기 재정지출계획 비교]



주: 2026년 계획의 2026년 재정지출은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25년과 2026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2030년 중기 재정계획과 재정수지]

(단위: 조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재정수입 (증가율)	675.2 (3.6)	700.6 (7.5)	880.8 (30.5)	920.5 (4.5)	951.8 (3.4)	984.6 (3.4)	9.9
재정지출 (증가율)	727.9 (8.1)	753.0 (11.8)	820.9 (12.8)	894.6 (9.0)	957.4 (7.0)	1,005.2 (5.0)	8.4
- 의무지출 (비중)	387.7 (53.3)	397.5 (52.8)	426.8 (52.0)	471.9 (52.7)	511.8 (53.5)	537.9 (53.5)	8.5
- 재량지출 (비중)	340.2 (46.7)	355.6 (47.2)	394.1 (48.0)	422.8 (47.3)	445.5 (46.5)	467.3 (46.5)	8.3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52.7 (△1.9)	△52.5 (△1.9)	59.9 (1.9)	25.8 (0.8)	△5.6 (△0.2)	△20.6 (△0.6)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107.8 (△3.9)	△107.6 (△3.8)	△3.1 (△0.1)	△48.0 (△1.5)	△83.4 (△2.5)	△100.8 (△2.9)	-

주: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 2026년 본예산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2026~2030년 기간 중 정부투자는 연평균 1.2% 증가하여 지난 5년(2021~2025년, 연평균 $\Delta 0.7\%$)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투자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대비 $\Delta 4.5\%$, $\Delta 7.7\%$ 위축되었던 영향으로 지난 5년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높지만, 팬데믹 이전(2016~2020년, 연평균 5.4%)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낮다.

정부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건설투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R&D와 SOC 분야의 재정지출은 각각 연평균 8.2%와 3.8%이다. 이전 5년(2021~2025년) 기간 중 R&D와 SOC 분야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4.5%, 2.9%였다. R&D 분야는 인공지능, 미래에너지 등 차세대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R&D 역량 및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SOC 분야 중 누적된 인프라 투자로 성숙기에 진입한 도로·철도 부문 SOC 건설 사업은 투자 규모가 조정되지만, 자율주행차 등 미래 성장동력과 국민 교통비 경감 등에 대한 투자는 증가할 전망이다.

[R&D와 SOC 분야의 재정지출 계획]

(단위: 조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가율
R&D (증가율)	35.5 (19.9)	39.5 (11.3)	42.4 (7.3)	45.8 (8.0)	48.6 (6.1)	(8.2)
SOC (증가율)	27.7 (9.1)	28.9 (4.3)	30.0 (3.8)	31.1 (3.7)	32.1 (3.2)	(3.8)

자료: 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가.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1) 소득분배 개요 및 현황

소득불평등은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표이다. 소득불평등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소득불평등 완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하며 재정정책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부는 공적연금과 각종 사회보장급여 등 공적이전 등을 통해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으로 조달한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¹⁾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지표를 살펴보면,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상승하였으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23년 0.392까지 하락하였으나 2024년 0.399로 상승하였다. 이는 2024년 전년대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추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처분가능소득(세후)	0.328	0.329	0.324	0.323	0.325
시장소득(세전)	0.405	0.405	0.396	0.392	0.399

주: 1.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을 나타냄.

2.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3. 시장소득(세전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4. 2025년 결과는 2026년 12월 발표될 예정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박승호 예산분석관(shpark@assembly.go.kr, 6788-4626)

1)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며 0과 1 사이의 비율로 정의되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갖는 완전한 평등을 의미하고,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한 사람이 전체 소득을 차지하는 완전한 불평등을 의미한다.

(2) 분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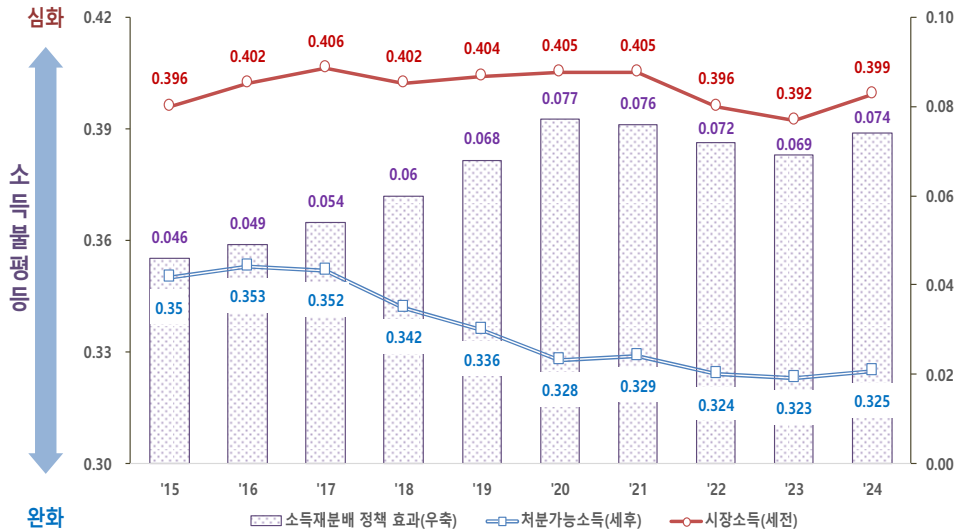
세후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2020년 이후 안정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지표인 2024년 상승하며 소득불평등 지표 개선이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OECD 주요국 대비 소득불평등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여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중기시계열에서 살펴보면,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6~2020년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 이후 등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세후 소득 기준인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6년 0.353에서 2020년 0.328로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2021년 0.329로 상승한 이후 2023년 0.323으로 낮아졌으나 2024년 0.325로 재차 상승하였다. 세전소득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도 2021년 0.405에서 2023년 0.392로 낮아졌으나 2024년 0.399로 상승하였다. 2024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와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소득불평등도가 일부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간 차이는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를 의미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정부의 조세 부과와 공적 이전 등이 소득불평등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OECD 등도 두 지니계수의 차이를 재분배 효과 측정에 활용하고 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간 차이를 살펴보면, 2021년 0.076에서 2023년 0.069로 축소된 후 2024년 0.074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공적이전과 조세·사회보험료 등은 시장소득 단계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일부 완화하였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의 전년 대비 악화까지 상쇄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동만으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선폭에는 조세·사회보험료의 영향이 포함되고, 고령화, 가구구성 변화 및 시장소득 분포의 변화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분배 효과의 확대와 최종적인 소득불평등 개선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니계수 및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 추이]



- 주: 1.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을 나타냄.
 2.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3. 시장소득(세전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4. 소득재분배 정책효과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간 차이를 의미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간 차이는 조세·사회보험료와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공적 이전지출은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이며 공적 이전소득은 가구소득에 직접 귀착되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장애수당,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양육수당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 최저생활 보장,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위기 시 소득 보전 등의 목적을 가진다.

공적 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재분배와 연계된 재정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126.6조원에서 2025년 164.3조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하나 2026년, 2027년 각각 7.2%, 8.6% 증가한 176.1조원, 191.2조원으로 계획되며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공적 이전소득 관련 재정지출 비율은 2020년 6.2%에서 2022년 5.5%까지 하락한 후 상승세를 보이며 2026년 6.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2027년에는 6.1%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공적 이전소득과 관련된 재정지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7년 기준 공적 연금이 전체 공적 이전소득 관련 재정지출 중 52.5%를 점유할 것으로 보이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실업급여가 각각 14.4%, 13.4%, 6.4% 수준을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2020~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공적연금이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기초연금 10.0%, 기초생활보장 9.4%, 산재보험급여 5.3%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공적 이전소득 관련 재정지출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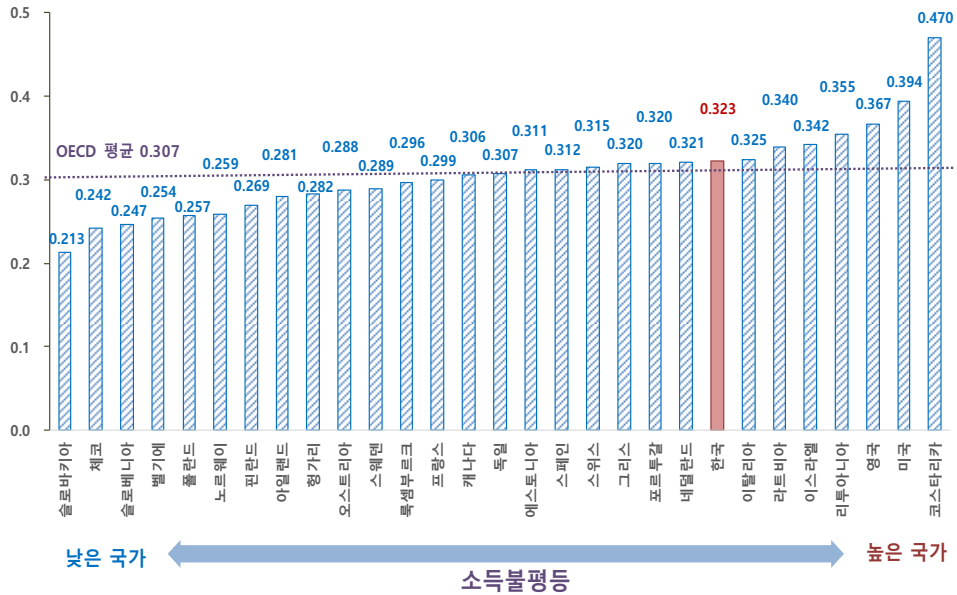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기초연금	13.2	15.0	16.3	18.2	19.6	21.2	23.1	25.7	10.0
공적연금	51.3	55.9	63.4	71.5	78.5	86.7	93.9	100.4	10.1
기초생활보장	14.7	15.5	16.9	17.5	19.1	20.9	23.2	27.6	9.4
장애수당	0.9	1.0	1.0	1.1	1.1	1.1	1.1	1.3	5.2
양육수당	5.7	3.3	4.1	4.9	6.1	5.5	6.0	6.6	2.1
실업급여	12.2	12.5	11.4	11.8	12.3	12.9	12.2	12.2	0.0
산재보험급여	6.0	6.5	6.7	7.3	7.6	8.0	8.1	8.6	5.3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5.1	9.5	2.3	0.0	-	-	-	-	-
기타 공적 이전	7.6	6.9	6.9	7.4	7.7	8.0	8.4	8.8	2.2
합 계	126.6	126.0	129.0	139.6	152.1	164.3	176.1	191.2	6.1
GDP 대비	6.2	5.7	5.5	5.8	5.9	6.1	6.3	6.1	-

- 주: 1. ~2025년 결산, 2026년 제1회 추정, 2027년 예산안 기준
 2. 2020~2025년 명목GDP는 실적, 2026~2027년 명목GDP는 정부 전망치 활용
 3. 공적 이전소득 관련 재정지출 규모는 급여지급액, 수당액, 지원금 등 실질적으로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 규모를 나타냄
 4. 양육수당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가정양육수당, 입양아동수당 등을 포함
 5. 기타는 공익형 직불금, 보훈급여, 상병수당 등 포함
 6. 공적 이전소득 관련 항목은 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과 동일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한국은행, 기획예산처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OECD 29개 국가 평균 0.307 대비 0.016 높은 상황이다. OECD 29개국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8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지니계수) 국제비교(2023년 기준)]



주: 1.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 기준
 2. OECD 평균은 단순평균 기준
 자료: OECD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고 최근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불평등 심화는 경제·사회적 불안, 자원의 비효율적 투자, 경제시스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득불평등 완화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접적 지원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가계 소득 안정화, 가계건전성 관리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재정지출의 지역균형성장 효과

(1) 현 황

지역균형성장은 지역 간 성장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성장역량을 높이는 것으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의 삶에 중요한 부분으로 재정이 담당하는 역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력, 생활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나 인구는 전체의 51.0%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밀도는 수도권의 경우 전국 평균 514명/㎢의 4배 수준인 2,219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의 30배를 상회하는 15,432명을 기록하였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서울은 73.6%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국 평균은 43.2%로 30.4%p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인당 지역총소득의 경우 서울은 6,903만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 5,020만원 대비 37.5% 높은 수준이며, 1인당 지역총소득이 가장 낮은 대구광역시의 3,618만원 대비로는 90.8% 높은 수준이다. 가구당 평균 순자산의 경우 수도권은 5억 8,832만원으로 비수도권의 3억 5,720만원보다 64.7% 높은 수준이며, 서울의 경우 7억 1,288만원으로 비수도권의 2배 수준이며, 전국 평균 4억 7,144만원 대비로는 51.2%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문화시설 수는 1,152개로 전국 문화시설 수 3,013개 중 38.2%, 비수도권은 1,861개로 61.8%를 점유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지표 현황]

구분	수도권(서울)	비수도권(전국)
인구(천명)	26,347(9,340)	25,338(51,685)
비중(%)	51.0(18.1)	49.0(100)
인구밀도(명/㎢)	2,219(15,432)	(514)
재정자립도(%)	(73.6)	(43.2)
1인당 지역총소득(천원)	(69,032)	(50,196)
가구당 순자산(만원)	58,832(71,288)	35,720(47,144)

구분	수도권(서울)	비수도권(전국)
문화시설수(개)	1,152(443)	1,861(3,013)
비중(%)	38.2(14.7)	61.8(100)

주: 1. 2025년 기준, 1인당 지역총소득은 2024년 기준
 2. 괄호() 안 수치는 서울 또는 전국 기준
 3. 문화시설수는 국립/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의 합계
 4.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을 의미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2) 분석의견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 당면한 국가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중요한 상황이며,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성장’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는 정책이며 이를 통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²⁾ 헌법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취지로 균형발전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³⁾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각 지역이 특성에 맞게 자립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특별회계로,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을 하나의 회계로 묶어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편성된다. 법적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74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균형성장”이란 지역 간 성장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헌법」 제9장 경제 (120조)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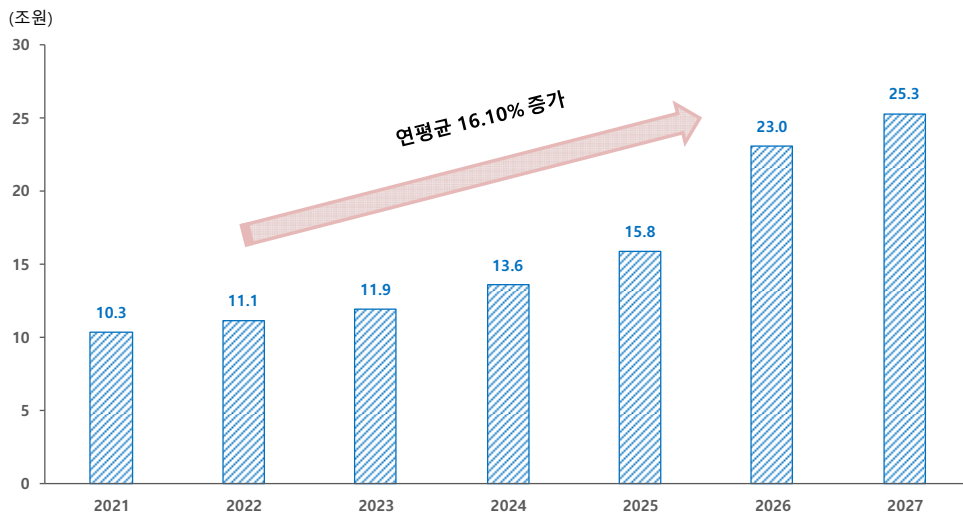
제9장 경제 (123조)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조이며,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시책 관련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2023~2027년 지특회계 운용 및 예산편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상위계획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5대 전략 22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균형발전정책에 해당하는 전략은 창조적 혁신성장, 주도적 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로 볼 수 있다.⁴⁾ 한편 지특회계 이외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연계성이 있다.

정부도 지역불균형 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특회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재정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결산기준 지특회계 지출 규모는 2021년 10.3조원 규모에서 2025년 15.8조원 규모로 53.6%, 연평균 11.3% 증가하였다. 2026년 이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되며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지특회계 지출 규모는 23.0조원으로 전년대비 45.5% 증가하였고 2027년에는 25.3조원이 편성되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출 규모 추이]



주: ~2025년 결산, 2026년 제1회 추경, 2027년 예산안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임길환(20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평가」, 국회예산정책처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 완화는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을 중기시계열에서 살펴보면, 인구는 2019~2025년 기간 동안 수도권 의 경우 연평균 0.3% 증가하며 2019년 2,585만명에서 2,635만명으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는 연평균 0.4% 감소하며 2,591만명에서 2,534만명으로 58만 명 감소하였다. 수도권의 총인구 대비 비중은 2019년 49.9%에서 2025년 51.0%로 상승하였다. 한편 수도권 중 서울의 인구는 2019년 966만명에서 2025년 934만명 으로 32만명 감소하였다. 이에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2019년 2,179명에서 2,219명 으로 40명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 및 전국 재정자립도는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2019~2025년 평 균 75.3%이며 전국의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4.4%로 30.9%p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인당 총소득의 경우 서울은 2019년 5,376만원에서 2024년 6,903만원으로 28.4%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전국 1인당 평균 총소득은 3,979만원에서 5,020만원 으로 증가하여 소득격차가 2019년 1,397만원에서 1,884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가 구당 순자산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순자산 차이는 2019년 1억 4,281만원에서 2025년 2억 3,112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 형은 일자리·교육·생활서비스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 불균형 지표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인구수 (천명)	수도권	25,851	26,021	26,069	26,086	26,190	26,304	26,347	0.3
	(서울)	(9,657)	(9,618)	(9,508)	(9,421)	(9,400)	(9,394)	(9,340)	△0.6
	비수도권	25,914	25,815	25,701	25,587	25,523	25,447	25,338	△0.4
	전국	51,765	51,836	51,770	51,673	51,713	51,751	51,685	0.0
인구 밀도 (명/㎢)	수도권	2,179	2,193	2,196	2,197	2,206	2,215	2,219	0.3
	(서울)	(15,956)	(15,891)	(15,709)	(15,567)	(15,533)	(15,521)	(15,432)	△0.6
	전국	516	516	515	514	515	515	514	△0.1
재정 자립도 (%)	(서울)	(76.48)	(76.08)	(75.59)	(76.31)	(75.37)	(73.95)	(73.62)	△0.6
	전국	44.90	45.16	43.58	45.34	45.02	43.31	43.18	△0.6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1인당 총소득 (천원)	(서울)	(53,758)	(53,474)	(59,498)	(63,778)	(65,918)	(69,032)	-	5.1
	전국	39,787	40,115	43,415	45,588	47,310	50,196	-	4.8
가구당 순자산 (만원)	수도권	42,694	44,760	51,992	57,598	54,154	55,322	58,832	5.5
	(서울)	(53,605)	(56,762)	(64,862)	(69,738)	(65,986)	(64,707)	(71,288)	4.9
	비수도권	28,413	28,259	31,413	34,135	33,250	34,750	35,720	3.9
	전국	35,281	36,287	41,452	45,602	43,540	44,894	47,144	4.9

주: 1.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을 의미

2.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개편후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에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특회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예산 배분 간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재정 및 사업편성체계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특회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세원 확보 또는 법정전입금 비율 제고 등 세입구조의 안정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연계되고 정책 환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가 내실화되어야 하며, 사업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가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평가 주체와 권한·책임 배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⁵⁾

정리하면 지역균형성장은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 국가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재원배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5) 임길환(20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다. 재정지출 확대의 물가 영향

(1) 개요 및 현황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9조원으로, 2026년 추경 753.0조원 대비 67.9조원(9.0%) 증가하였다. 증가액 67.9조원은 2007년 이후 3번째로 큰 수준이며 증가율 기준으로 2020~2027년 연평균 증가율 5.9%를 3.1%p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이다. 2027년 예산안에는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가 반영되어 있다. 다만, 예산안의 지출 확대는 최근 유동성 여건을 고려 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 및 증가율]

구분	2025년 (결산)	2026년 (추경)	2027년 (예산안)
총지출(조원)	684.1	753.0	820.9
증가액(조원)	46.1	68.9	67.9
증가율(%)	7.2	10.1	9.0

주: 증가액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자료: 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최근 물가 여건을 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서 소비자물가는 2025년 2.1% 상승하였으나 2026년 들어 상승세를 보이며 2026년 7월 2.8%, 8월 3.1%, 9월 2.9%를 기록하여 물가안정목표인 2.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2027년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한국은행 전망]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전망)
		8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3.1	2.9	2.3
물가안정목표와의 차이(%p)	0.1	1.1	0.9	0.3

주: 전망치는 2026년 8월 전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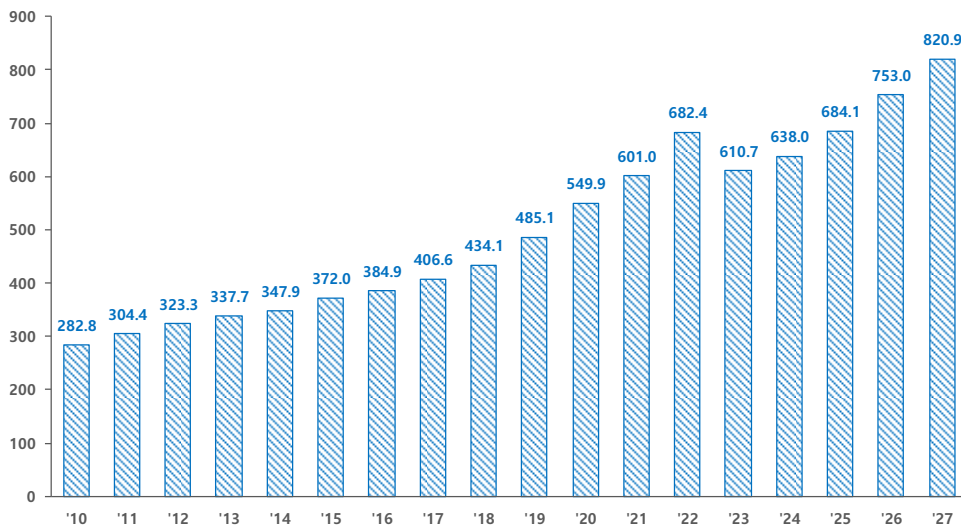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 분석의견

최근 경제여건을 고려 시 2027년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불안, 금리 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취약계층과 취약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세수입 확대 등으로 총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동력 확보,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반영해 2027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820.9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 편성이며 증가액 67.9조원 기준으로도 2007년 이후 3번째로 큰 수준이다. 증가율 기준으로 2020~2027년 연평균 증가율 5.9%를 3.1%p 상회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총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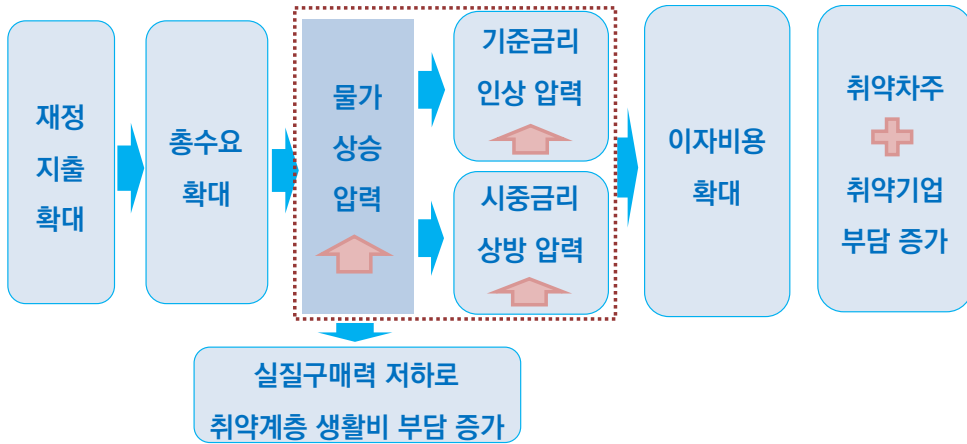


주: ~2025년 결산, 2026년 제1회 추경, 2027년 예산안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재정지출은 정부의 재화·서비스 구매를 통해 총수요를 직접 확대하거나, 이전 지출로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소비·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물가불안, 금리 상승을 통해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및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확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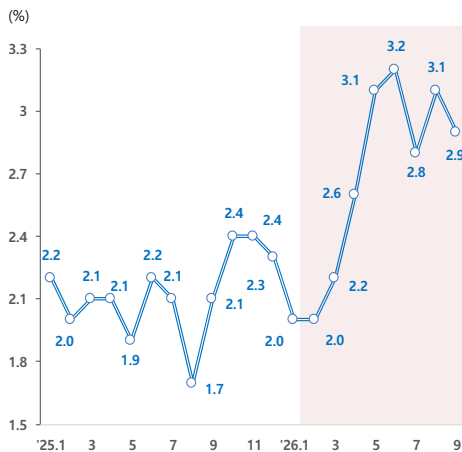
[재정지출 확대의 물가 및 금리 파급경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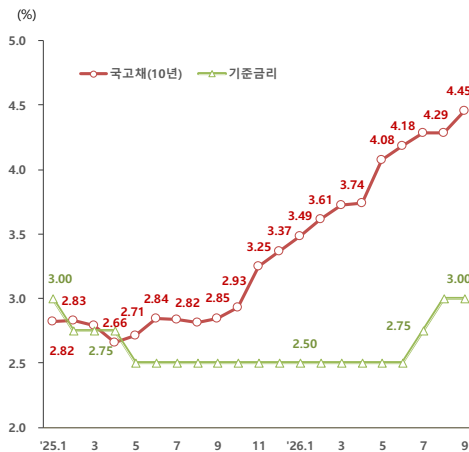
최근 2026년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고채 금리 등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 시 총수요 확대가 소비자물가 및 금리의 상승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6년 7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일정기간 이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고채(10년물) 금리 및 기준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이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모멘텀을 확보함과 함께 물가와 금리 상승 압력 확대에 따른 취약부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출구조와 집행계획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물가·금리·연체율 등과 취약부문의 실질적 재무구조 변화, 소득·현금흐름 양상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취약부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및 시사점

가. 자원배분의 방향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27년도 예산안의 자원배분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을 함께 도모하되, 재정투입의 필요성, 집행 가능성 및 중기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야별 증감 규모에 대한 평가를 넘어 인구·기후·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와 분배·삶의 질·균형발전 개선을 위한 지출이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자원배분 방향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제시하고, AI 대전환·전략산업 등에 대한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계획상 2027년 총지출은 820.9조원이며, 보건·복지·고용 289.0조원, 교육 110.7조원, R&D 39.5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41.2조원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배분계획으로서, 예산안 심의에서는 개별 사업의 내용과 집행 준비 정도를 토대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산업구조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정투자는 중장기 생산성 제고와 사회적 비용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분야의 예산 증가가 곧바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투자 유인 효과, 인력·전력·데이터 등 연관 기반 확보 여부,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에 따라 재정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투자 확대의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재정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민생지원 역시 투입 규모와 수혜자 수뿐 아니라 소득·고용·주거·돌봄 여건의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은 각각 정책목표와 전달체계가 다르므로 어느 한 방식의 우월성을 전제하기보다 사각지대, 수급 접근성, 지원의 충분성 및 재정부담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특히 복수 부처의 사업이 동일한 가구를 지원하는 경우 중복과 누락을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재정지출의 경기대응 역할과 중장기 구조개선 역할도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기 대응과 관련된 사업은 집행 시기와 수요 진작 효과가 중요하고, 연구개발·인적자본 확충·기후 대응 등과 관련된 사업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정부는 사업 목적에 맞는 분석 기간과 성과 기준을 적용하여 단기 집행 실적만으로 장기투자를 평가하거나, 장기적인 기대효과만으로 당해연도 편성 규모를 정당화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목표별 자원배분의 검토 방향

첫째, 기후·재난·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출은 예방투자과 사후 대응의 비용을 비교하고, 장래의 반복 지출을 포함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재난 예방시설은 위험 노출도와 피해 저감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은 현금지원과 함께 돌봄·의료·주거·일자리 등 생활 기반의 결합을 검토하여야 한다. 미래 수요를 명분으로 한 시설투자가 인구추계 등과 배치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배 개선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은 재정정책의 주요 기능 및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며 해당 지출이 정책대상의 소득·분배 및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삶의 질, 분배 지표를 재정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실제 정책대상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업지원은 일자리 진입뿐 아니라 고용 유지와 근로소득 개선을, 주거지원은 공급량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과 접근성 개선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사업의 효과를 구분할 때에는 수혜구조와 정책 간 상호작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지출은 지역별 배분액의 균등성보다 지역의 여건에 맞는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경제활동 기반의 개선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시설 확충이 장기적인 유지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재정력이 낮은 지역의 사업 참여를 제약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리와 시사점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단년도 수지나 국가채무 비율뿐 아니라 세입의 안정성, 경직적 지출의 증가, 이자부담 및 우발적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중기 재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세입·지출 경로를 구체화하고, 전망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도 필수적인 재정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 중기재정 방향성 평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880.8조원으로 2026년 추경 대비 180.2조원(25.7%) 증가하며, 총지출은 820.9조원으로 67.9조원(9.0%) 증가할 계획이다. 총수입 증가액 중 국세수입 증가액은 168.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총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총수입은 그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27년에는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 및 총지출]

(단위: 조원, %)

구분	2026년 본예산	2026년 추경(A)	2027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수입	675.2	700.6	880.8	180.2	25.7
- 국세수입	390.2	415.4	584.4	168.9	40.7
총지출	727.9	753.0	820.9	67.9	9.0

자료: 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2026년 GDP 대비 △3.8%에서 2027년 △0.1%로 개선된 후, 적자폭이 확대되며 2030년에는 GDP 대비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GDP 대비 0.1% 흑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로 전환되어 2030년에는 △2.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 전망에서 2026년 50.6%에서 2030년 49.0%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서는 같은 기간 43.3%에서 42.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비율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관리재정수지	정부	△3.8	△0.1	△1.5	△2.5	△2.9
	NABO	△1.4	0.1	△1.1	△2.0	△2.3
국가채무	정부	50.6	48.3	48.9	48.8	49.0
	NABO	43.3	43.2	43.2	42.6	42.5

자료: 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다만 이러한 재정지표의 개선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 비율의 안정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명목GDP 증가 효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채무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명목GDP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채무비율의 변화뿐 아니라 채무 잔액과 세입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고, 경제여건 및 기업실적이 전망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의 직접적인 채무 외에 잠재적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2026년 27.7조원에서 2030년 157.3조원으로 129.6조원 증가하여 약 5.7배에 이를 전망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37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동 기간 208.2%에서 216.6%로 8.4%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출 역시 33.7조원에서 48.9조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비율도 1.21%에서 1.38%로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재정운용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요 중기 재정부담 요인의 변화]

(단위: 조원, %, %p)

구분	2026년(A)	2030년(B)	증감(B-A)
국가보증채무	27.7	157.3	129.6
공공기관 부채비율	208.2	216.6	8.4
국가채무 이자지출	33.7	48.9	15.2
이자지출의 GDP 대비 비율	1.21	1.38	0.17

주: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37개 기관 기준

자료: 기획예산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경제부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등

민간부문의 부채도 재정위험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정부와 가계·기업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부채는 2021년 5,514조원에서 2025년 말 6,515조원으로 1,001조원(18.1%) 증가하였다. 2025년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4.7%로 주요 28개국 중 14위이며, G20 국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민간부채가 곧바로 정부의 상환의무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경제·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부실이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 공공기관 부채 및 민간부채의 위험을 함께 점검하되, 포괄범위가 다른 부채를 단순 합산하기보다 재정부담으로 전이되는 조건과 경로를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와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총지출 증가는 충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요 증가는 물가불안, 금리 상승압력 등을 통해 취약계층과 취약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만 재정지출 확대가 반드시 기준금리 인상이나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영향은 재원조달 방식, 지출의 구성, 공급 여건 및 통화정책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출 확대의 성장·민생 지원 효과와 물가·금리 경로를 통한 부담을 함께 검토하고, 경제여건에 맞게 지출의 대상과 집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정부는 중기 재정지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세입 증가 및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국가채무 외 잠재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2)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관리 과제

첫째, 세입의 구조적 기반과 전망의 불확실성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세수입의 주요 세목별 산출근거와 전망 오차의 원인을 공개하고, 성장률·기업 실적 등 주요 가정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정비와 과세기반 확대는 정책목적, 분배·투자 영향 및 행정비용을 비교하여 검토하되, 실제 확보 가능한 순수입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금여유재원, 자산매각 및 배당수입 등은 재원 성격에 맞게 구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회계·기금 간 자금 이동이 연결 기준에서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보험 적립금 등은 장래 급여 지급과 유동성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자산매각은 매각수입뿐 아니라 향후 수익 감소와 자산관리 비용의 변화를, 배당 확대는 공기업의 투자·재무여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회성 수입으로 항구적인 지출을 뒷받침하는 방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출구조조정은 계획 대비 실질적인 절감액과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종료·축소·통합·집행시기 조정 등을 구분하고,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이관이나 다음 연도로의 집행 순연이 절감 실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완사업 신설과 이후 유지관리비 증가를 차감한 순절감 효과를 제시하고, 취약계층의 필수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의무지출의 효율화는 법정급여의 지급 의무를 전제로 제도 간 중복, 부적정 수급 및 전달체계 비용을 개선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급요건·급여수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 일정과 이해관계자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에도 인구·물가 변화에 따른 중장기 소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잠재적 재정위험은 재정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는 포괄범위가 달라 단순 합산할 수 없으며, 공기업 부채 전액이 곧바로 정부의 상환 의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보증채무, 공기업 재무위험, 연금 충당부채 등에 대해 위험 발생 조건, 우발 손실, 만기와 대응수단을 구분한 위험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재정여력의 확보는 경기여건과 정책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수입이 계획에 미달하거나 금리·재난 충격이 발생할 경우의 대응 순서와 일시적 지출의 종료 기준을 제시하고, 여건이 개선될 때에는 일시적인 초과수입의 성격을 확인하여 채무관리 또는 위험 완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성장·분배에 대한 영향을 함께 평가하여 재정목표와 필수적인 정책기능 간 균형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재정총량 관리 및 국회 예산심의 권한 강화

재정총량을 관리하여야 하는 이유는 공공재정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적정 수준을 넘는 과도한 부채가 건전성은 물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총량 관리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와도 관련된다.

재정총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계획, 정부의 예산편성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총액배분·자율편성의 실효성 제고, 국회 Top-down 심의 도입 검토, 정부의 증액동의권 개선 등을 상호 연계된 개선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총액배분·자율편성의 실효성 제고와 중기계획의 선수립 및 제출

총액배분·자율편성은 가용재원과 정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부처가 그 범위에서 사업별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이미 운용되어 온 제도이므로 개선의 초점은 신규 도입이 아니라 중기 재정전망과 지출한도, 부처별 자율편성 및 성과책임의 실질적인 연계에 두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한도 설정과 자율성의 문제도 당시의 분석 결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중기 총량과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면 이미 편성된 사업의 증감 조정에 검토가 치우칠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편성의 실질적 기준으로 기능하려면 주요 전제와 총량·배분 방향을 편성 과정의 앞 단계에서 제시하고, 최종 예산안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중기계획의 사전 수립과 국회에 대한 정보 제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 중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 총수입·총지출의 전망 범위, 의무지출 소요 및 분야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이를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국회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재정전략을 논의하고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의 편성책임을 전제로 정보 제공과 정책적 설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상반기에는 경제·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모든 수치를 고정하기보다 기준 전망과 대안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에 전망이나 지출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요인과 금액을 경제여건 변화, 법률·제도 변화 및 정책적 선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계획의 변경 자체를 문제로 보기보다 변경의 근거와 대응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의 자율성도 지출한도 준수와 성과책임이 결합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한도 통보와 조정 과정을 기록하고, 부처가 한도 내에서 제시한 사업 간 조정안이 최종 편성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우선과제나 재난 등으로 예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를 공개하여, 지출한도가 형식적인 참고치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실효성 있는 국회 Top-down 예산안 심의의 단계적 도입 검토

국회 Top-down 심의는 재정총량과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개별 사업 심사에 앞서 진행하고, 이후의 사업별 조정이 총량과 일관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다루는 전문적 심사를 유지하면서 재정수지·채무 및 정책 간 상충관계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총량을 먼저 정한다는 절차만으로 심사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망과 충분한 심사 자료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안 제출 전 재정전략 논의를 강화하고, 제출 후에는 종합정책질의 등에서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채무와 분야별 조정 방향을 우선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출한 총량 기준이 정책적 협의 기준인지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인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구속력 있는 선행 의결을 도입하려면 의결 대상, 효력, 수정 요건 및 현행 예산 의결절차와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총량 심의에 필요한 공통 자료를 적시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전망과 독립적 전망의 주요 차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변화, 분야별 한도와 주요 사업의 연결, 조세지출·기금운용을 포함한 정책수단 간 대체관계 및 주요 정책 변경의 중기 재정효과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상반기 기본방향과 최종 예산안 간 차이도 동일한 비교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총량 기준을 마련한 이후에도 중대한 경제여건 변화, 법정지출 변동 또는 새롭게 확인된 필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하다. 변경을 허용하는 사유와 자료요건을 사전에 정하고, 총량 변경이 재정수지와 채무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나치게 경직된 한도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필요를 반영하기 어렵게 하고, 예외가 광범위하면 총량 관리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Top-down 심의는 세부사업 심사를 축소하는 장치가 아니라 총량 검토와 세부 검토를 연결하는 절차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의 증액동의권 개선

정부의 증액동의 제도는 사실상 국회의 증액에 대한 항목별 거부권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으로, 국회의 예산수정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정 17번]에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와 함께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재정규율을 확보하면서 국회의 예산수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헌법에 따른 정부의 증액동의권은 유지하되, 증액동의의 대상을 개별 재정사업이 아닌 분야나 부문, 프로그램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헌법에서는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정부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의 개념을 프로그램 수준으로 해석할 경우 국회는 정부 예산안의 프로그램 총액 한도 내에서 개별 재정사업의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항목별 증액동의권 행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이다. 일례로 독일은 증액동의권을 정부의 절대적 권한으로 하지 않고, 정부 동의 없이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의결은 허용하되 정부로 하여금 표결 연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헌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사전 증액동의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에게 사후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예산비법률주의 국가로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이 아닌 증액동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산비법률주의를 도입하여 예산안을 법률의 형식으로 전환하거나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증액동의권을 폐지하고 재의요구권 행사의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할 수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27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058-6208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